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3072-01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방향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책임자: 송 미 령 선임연구위원

연구 참여자: 박 대 식 선임연구위원

성 주 인 연구 위원

김 광 선 연구 위원

마 상 진 연구 위원

심 재 현 연구 위원

엄 진 영 연구 위원

정 도 채 부연구위원

안 석 부연구위원

민 경 찬 연구 위원

정 희 라 연구 조원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박대식 선임연구위원
성주인 연구위원
김광선 연구위원
마상진 연구위원
심재현 연구위원
엄진영 연구위원
정도채 부연구위원
안석 부연구위원
민경찬 연구위원
정희라 연구조원

연구 담당

송미령 | 선임연구위원 | 연구 총괄

박대식 | 선임연구위원 | 제4장 보건·복지 부문 집필

성주인 | 연구위원 | 제1장, 제3장, 제5장 집필

김광선 | 연구위원 | 제4장 교육·문화 부문 집필

마상진 | 연구위원 | 제4장 교육·문화 부문 집필

심재현 | 연구위원 | 제4장 정주생활기반 부문 집필

엄진영 | 연구위원 | 제4장 정주생활기반 부문 집필

정도채 | 부연구위원 | 제4장 경제·일자리 부문 집필

안 석 | 부연구위원 | 제4장 보건·복지 부문 집필

민경찬 | 연구위원 | 제2장, 제3장, 제5장 집필

정희라 | 연구조원 | 자문단 운영 지원

연구 배경 및 목적

2004년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및 농어촌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범부처 차원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총괄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동법 제5조에 근거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각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4차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을 검토하고,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제4차 기본계획 기간(2020~2024) 동안 추진할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농어촌의 정주 여건과 관련 계획 및 정책 동향, 제3차 기본계획의 평가를 통해 향후 농어촌 주민들의 수요와 정책 변화를 감안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삶의 질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 정책 자료와 제3차 기본계획 종합평가 등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① 보건·복지, ② 교육·문화, ③ 정주생활기반, ④ 경제활동·일자리 등 4개 부문의 연구진 및 자문단을 구성·운영했다. 분과별로 제4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핵심과제를 발굴·선정하였고 관련 내용을 작성했다. 또한 각 부문별 정책 목표 및 방향, 전략 등을 제시했다.

분과별 자문단과 별개로 총괄적인 기본계획 수립 방향 및 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총괄 자문단을 운영했다. 총괄 자문단은 삶의 질 관련 기초 자료 분석 및 문헌 검토를 통해 농어촌 여건 진단과 기존 정책 평가를 수행했다. 또한 4개 부문별 수립 내용을 조정·검토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현재 농어촌 여건 진단과 지난 기본계획 평가를 통해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은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전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 철학을 반영했다. 목표는 ①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②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생활권, ③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생명의 터전으로 설정했다.

다음으로 4개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각각 세부 전략을 도출하였다. 첫째, 보건·복지 부문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고령화·과소화 심화에 대응하여 농어촌 지역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둘째, 교육·문화 부문은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농어촌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하여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표가 있다. 셋째, 정주생활기반 부문은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농어촌 정주 특성에 맞춰 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하고,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추진전략은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이다.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 다각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취·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세분화된 부문별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그동안 의료취약지 해소, 돌봄 시설 확충 등 농어촌의 부족한 의료접근성, 돌봄 시설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하여 왔으나, 조사 결과 농어업인이 체감하는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보다 능동적인 종합 돌봄체계 구축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4가지 주요 과제를 도출하였다. 농어

촌 지역의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 취약지역 지원 확대,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등 농어촌 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농어촌의 통합돌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조성 및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통합 돌봄 확산을 과제로 도출하였다. 보육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 환경 개선을 과제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높이기 위해 사회 보험 등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작업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농어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문화·여가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농어촌의 교육 여건은 도시에 비해 크게 열악하며 학교 통학여건 등 공교육 서비스 개선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문화 부문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여가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여전히 저조하며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 발굴 및 복원·확산은 미흡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여 생애주기별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육 부문에서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및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를 역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문화 부문에서는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기반 구축을 통한 농어촌 문화·여가 전문 인력 양성 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활동 지원으로 향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활문화 육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주생활기반 부문은 농촌형 교통모델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정주공간 개선 및 농어촌 생활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농어촌 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며 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확대 등 영농 및 해양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쾌적한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 및 주민 자율적 경관보전 활동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수리시설 보수·보강 비율과 상습 침수 농경지 개선율이 증가하였으나 안전한 영농·영어 기반 조성 및 생활안전 관련 범죄예방 활동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

축'을 목표로 4가지 주요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농어촌 교통모델 고도화, 첨단 교통의 농어촌 도입, 농어촌 지역 교통안전 확보를 통해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농어촌 지역 빈집 정비 및 활용을 바탕으로 한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이다. 세 번째 과제는 ICT 기술을 활용한 정주기반 고도화, 통합적 지역개발을 통한 정주기반 내실화, 농어촌 지역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다양한 계층 대상 농어촌 임대주택 조성을 바탕으로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구축이다. 네 번째로 제시된 과제는 농어촌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개선, 농어촌 지역 미세먼지 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환경자원 활용,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를 바탕으로 한 환경·경관 보전으로 농어촌다움을 실현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은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에 집중했다.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성과가 농촌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형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체계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청년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주목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푸드플랜의 경우 부서 간 협력 부족, 민간 참여 미흡, 유통 측면만을 강조하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푸드플랜 수립 지원이 가능하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유형별 지원 및 유통체계를 확충하는 등 푸드플랜 체계화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농어촌 관광은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기반 또한 크게 확대되었으나, 농어촌 관광 인프라 부족과 콘텐츠의 부재라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목표로 4가지 과제를 도출했다. 첫째,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를 위한 전략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산업 고도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푸드플랜 체계화를 제시했다. 둘째,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원 연계 강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콘텐츠 발굴, 농어촌 관광 인프라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농어촌 주민 창업 촉진을 위한 전략으로서 청년 및 귀농·귀촌인 창업

촉진, 농어촌 신산업 육성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주민 구성을 고려한 일자리 다변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다문화 여성 역량강화 및 고용 지원, 귀농어·귀촌인 및 잠재적 농어촌 이주 대상자 취업 지원,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가 제시되었다.

삶의 질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범정부 차원의 삶의 질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정부의 생활SOC 확충 기조를 감안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개선한다. 둘째, 현재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 지침을 제정하고 삶의 질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 훈령으로 공포·시행한다. 셋째, 삶의 질 정책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여 이행이 부진하거나 차년도 예산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관계 부처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정책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넷째, 지역에서 삶의 질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추진체계 개편 및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농촌협약을 도입하고, 시도 및 시군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을 통해 자체적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기술 기반의 삶의 질 정책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자체 삶의 질 정책을 지원하는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래형 기술에 기반한 삶의 질 서비스 분야 R&D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개요

- 1. 기본계획의 배경 및 현황 1
- 2. 제4차 기본계획 수립 경과 4

제2장 농어촌 여건 진단과 제3차 기본계획 평가

- 1. 농어촌의 정주 여건 7
- 2. 관련 계획 및 정책 동향 15
- 3. 제3차 기본계획 평가 22

제3장 제4차 기본계획의 방향 및 비전·목표·전략

- 1. 제4차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33
- 2. 목표와 전략 36
- 3. 투융자 규모 40

제4장 제4차 기본계획의 부문별 추진 과제

- 1. 보건·복지 부문 43
- 2. 교육·문화 부문 73
- 3. 정주생활기반 부문 94
- 4. 경제·일자리 부문 136

제5장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기반 확충 방안

- 1. 범정부 차원의 삶의 질 정책 실행력 제고 165
- 2. 농어촌 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172
- 3. 사전협의제도 도입 174
- 4. 현장 추진체계 개편 및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177

5. 스마트기술 기반 삶의 질 향상 정책 지원 시스템 구축 180

부록

부 록 I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비교 183

부 록 II 농어촌 삶의 질 영향평가 운용 지침 수립(안) 184

참고문헌 187

제1장

〈표 1-1〉 제1·2·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비교 3
 〈표 1-2〉 부문별 핵심과제 및 이슈페이퍼 작성 4

제2장

〈표 2-1〉 분야별 정주 만족도 8
 〈표 2-2〉 농어촌 정주 만족도에서 도·농 격차가 큰 분야 9
 〈표 2-3〉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삶의 질 정책 투융자 실적 22
 〈표 2-4〉 도시·농어촌 주민의 포괄적인 삶의 질 만족도 평균점수 변화 23
 〈표 2-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24
 〈표 2-6〉 정책 대상별 삶의 질 시행계획 과제 수('19) 25
 〈표 2-7〉 부처별 삶의 질 세부과제 비중(과제 수, 예산)의 변화 26

제3장

〈표 3-1〉 재원 및 과제별 투융자 규모 40
 〈표 3-2〉 제1차 지방이양 대상 삶의 질 향상 관련 주요 사업('20년 예산 기준) 41

제4장

〈표 4-1〉 치매노인 현황(인지 저하자 비율) 58
 〈표 4-2〉 농어촌 지역 통합 돌봄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안) 58
 〈표 4-3〉 2005, 2010, 2016년 농어촌 0~4세 영유아 인구 및 유지율 62
 〈표 4-4〉 농어촌 어린이집 교사 채용 시 어려움 64
 〈표 4-5〉 농어촌 빈집 및 빈집 철거 현황 105
 〈표 4-6〉 7대 농정 과제별 연구개발 예산 현황('17~'18) 115
 〈표 4-7〉 연도별 영농 폐비닐 및 영농 폐농약 용기 수거·처리 현황 122

〈표 4-8〉 농어촌 슬레이트지붕 연식별 분포 124

제5장

〈표 5-1〉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비교 166
〈표 5-2〉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과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비교 167
〈표 5-3〉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169
〈표 5-4〉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 점검 방법 및 수단 170

제2장

<그림 2-1>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 전망 10
 <그림 2-2>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평균)의 변화 11
 <그림 2-3> 농어촌서비스기준 하위지역 변화 12
 <그림 2-4> 농정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 15
 <그림 2-5>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특징 17
 <그림 2-6> 혁신적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 18
 <그림 2-7>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20
 <그림 2-8> 제1·2·3차 기본계획 기간별 정책 점검·평가 방식의 변화 28

제3장

<그림 3-1> 삶의 질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34
 <그림 3-2>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향 35
 <그림 3-3>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전략, 추진기반 39

제4장

<그림 4-1>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시기 및 대상 56
 <그림 4-2>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거버넌스 60
 <그림 4-3> 농어촌 케어안심창구 복지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61
 <그림 4-4> 문해교육과 평생학습 연계 84
 <그림 4-5> 농어촌 학습자 유형별 문해교육 지원방안 85
 <그림 4-6> 문화향유형 공동체와 문화사업형 공동체 90
 <그림 4-7> 농어촌 문화 공동체 활성화 92
 <그림 4-8> 청안 선비마을 청년빌라 조성 사업(충북 괴산) 121
 <그림 4-9> 고령자 복지주택 개념도 121

〈그림 4-10〉 도서지역 해안 및 생활 쓰레기 발생량 추정	124
〈그림 4-11〉 농어촌 지역의 방치공 사례	125
〈그림 4-12〉 전주시 푸드플랜 추진 체계	143

제5장

〈그림 5-1〉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용지침에 의한 수행 절차	173
〈그림 5-2〉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	178
〈그림 5-3〉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삶의 질 정책 지원 활용 예시	181

1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개요

1. 기본계획의 배경 및 현황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배경 및 내용

○ 2004년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및 농어촌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법에 의거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설치 및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임.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거 범부처 차원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총괄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구성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5조에 의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각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어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종합계획임.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년간의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 부처별 시행계획 및 지자체별 계획의 지침 역할
-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 의료, 문화, 교육, 정주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계획으로 수립
- 단일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수립하는 범부처 계획

* 국무조정실(총괄) 농림축산식품부(간사),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21개 부처·청

○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 등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시책을 망라

- 관계부처 합동(총리 주재)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위원회가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주요내용 〉

-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여건 개선,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농어촌산업 육성
성에 관한 사항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
-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등

□ 제1~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 현황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범정부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예산을 확충

- (제1차 계획) 한칠레 FTA 발효 계기,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각종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추진
- (제2차 계획) 농어촌의 도시화를 지향하는 개발정책을 지양하고, 농어촌 자원 발굴 및 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
- (제3차 계획) 도·농이 상생하고, 농어촌 주민과 국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성화 추진
- 4대 부문 133개 과제, 20.3조 원 투융자(제1차 기본계획)에서 7대 부문 185개 과제, 46.5조 원 투융자로 확대(제3차 기본계획)
 - * 제1차 계획('05~'09): 4대 부문 133개 과제, 농어촌 복지인프라 확충 추진
 - * 제2차 계획('10~'14): 7대 부문 확대, 농어촌서비스기준 등 신규 제도 도입
 - * 제3차 계획('15~'19): 7대 부문 185개 과제, 삶의 질 정책네트워크 구축·운영

표 1-1 제1·2·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비교

구분	제1차	제2차	제3차
기간	2005~2009	2010~2014	2015~2019
추진 배경	한칠레 FTA 체결 농업·농촌 종합대책 (농업경쟁력 강화 + 소득증대 + 정주여건 개선)	포괄보조금 도입, 기초생활권 정책 재편 등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도입
주요 내용	농촌의 각종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등 (4대 부문 133개 과제)	기초생활인프라 및 복지 기반, 경제활동 다각화 등 (7대 부문 133개 과제)	맞춤형 체감복지 확충, 공공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7대 부문 185개 과제)
투융자 규모	(계획) 20.3조원	(계획) 34.5조 원	(계획) 46.5조 원
참여 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등 14개 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등 14개 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등 15개 부처
특징	H/W 중심의 중앙정부, 공급자 관점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 영향평가 등 선진제도 신규 도입	부처들의 관심 부족으로 정책 조성 성과 미흡

2. 제4차 기본계획 수립 경과

□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및 제3차 기본계획 종합평가(2018)

- 3개년 시행계획 평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8개 부진과제(10개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별 개선 방안을 제시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 실시 및 중점 추진 과제 도출

□ 부문별 핵심과제 도출 및 이슈페이퍼 작성(2019.3.)

- 농어촌 커뮤니티 케어 모델 구축 등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7대 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과제별 이슈 페이퍼 작성

표 1-2 부문별 핵심과제 및 이슈페이퍼 작성

과제명	집필진
① 농어촌 커뮤니티 케어 모델 구축	남일성 교수(성공회대)
② 농어촌 지역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구축	이중섭 박사(전북연)
③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산(보급)	김용욱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④ 다문화 가정 소득 확충 방안	장민기 소장(농정연구센터)
⑤ 농촌 지역 여성 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고상백 교수(연세대)
⑥ 해양 조업 안전사고 예방	박상우 박사(KMI)
⑦ 농촌형 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황영모 박사(전북연)

□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본 방향 도출(2019.5.)

- 농어촌 지역 간 격차 및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및 농어촌서비스 기준 분석 작업 수행
- 기존 제1~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평가
-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 및 비전·목표, 추진 과제 및 추진전략 도출
- 분야별 세부과제 및 역점 추진 과제 도출

-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 영향평가제도의 개편과 사전협의제도 도입 등 추진체계 개편 방향 추진
- 국무조정실 검토 및 일정 협의 진행
- 위원회 개최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연구 진행

2

농어촌 여건 진단과 제3차 기본계획 평가

1. 농어촌의 정주 여건

□ 농어촌 인구 증가 등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지만 지역 간 편차 존재

○ 귀농·귀촌 확산 등의 영향으로 최근 농어촌 인구는 증가 추세로 전환

- 농어촌 이주를 준비 중인 도시민이 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전망

* 귀농·귀촌 희망자 중 5년 내 이주 준비 비율: ('10) 6.4% → ('14) 8.8 → ('18) 1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원자료)

- 농림어업 취업자 수도 '17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

* 2018년 농림어업 취업자는 '17년 대비 6.2만 명 증가하고, 특히 20~30대 상용근로자 약 6.5천 명 증가 (마상진 외 2019)

○ 총량적 농어촌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젊은 연령층의 유출은 지속

-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어 농어촌의 활성화 역량이 취약하고 미래 농림어업 부문 지속 가능성이 위협

* 농어촌·농어가 경영주 중 청년 경영주가 전체 1.2% 수준까지 감소 (박기환 외 2019)

○ 농어촌 인구 증가가 공간적으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등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장래 발전 여건에 편차가 큰 상황

- 농어촌에서 농업 의존도가 높거나 원격지에 위치할수록 과소화 추세 강화
 - * 지역별로 농가 비율이 높을수록 귀농·귀촌 유입이 적고, 인구 순유출 심화 (성주인 외 2018)
-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인구 이동이 대도시 주변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근교 시·군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
-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좋은 읍 지역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면 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다 최근 완화 추세
 - * 과소화 면(2천 명 이하): ('05) 175개 → ('10) 226 → ('15) 261 (통계청 2015)

□ 농어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와 비교한 삶의 질 격차가 더욱 심화

○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부문 등의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이 여전히 낮은 상황(유은영 2018)

- 도시 대비 농어촌 주민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보건·복지 부문의 응급·출산의료 및 아동 보육 서비스, 교육 부문의 학교 통학 여건,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대중교통 여건 등임.
- 젊은 세대와 귀농·귀촌인 등은 의료서비스, 소득 기회, 문화·여가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표 2-1 분야별 정주 만족도

부문 (평균점수)	2018년		
	도시(n=949)	농촌(n=2,203)	차이
보건·복지	6.8	5.6	-1.2
교육	6.3	5.5	-0.8
정주생활기반	6.9	6.2	-0.7
경제활동·일자리	5.6	5.1	-0.5
문화·여가	6.0	5.4	-0.6
환경·경관	6.2	5.9	-0.3
안전	6.8	6.3	-0.5
전체 평균	6.4	5.7	-0.7

주: 11점 척도(0~10점 부여) 사용
 자료: 유은영(2018).

표 2-2 농어촌 정주 만족도에서 도·농 격차가 큰 분야

부 문	설문 문항	만족도 점수 (10점 만점)		도·농차이
		도시	농어촌	
보건·복지	필요시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 가능	7.3	6.1	-1.2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이 양호	7.1	5.6	-1.5
	아동의 양육·보호를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짐	6.6	5.6	-1.0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지원이 양호	6.4	5.7	-0.7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7.0	5.5	-1.5
	노인 돌봄, 보육 등 복지서비스 정보 획득과 이용이 편리	6.4	5.6	-0.8
	임신, 출산 관련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이용 가능	6.5	5.1	-1.4
교육	학교 교사 역량(교육방법, 면학분위기 조성, 학생관리 등)	6.4	5.7	-0.7
	지역 학교의 학생 성취 수준에 만족	6.4	5.6	-0.8
	학교 통학이 편리함	6.8	5.8	-1.0
	방과 후 학생교육(학교 방과후교육, 사교육) 여건 만족	6.5	5.7	-0.8
	어른들의 평생학습 기회 충분	6.0	5.3	-0.7
정주생활기반	기초생활 인프라가 양호(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7.0	6.3	-0.7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7.1	6.2	-0.9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	7.1	5.7	-1.4
	인터넷, IPTV, 모바일통신 등 편리하게 이용 가능	7.5	6.7	-0.8
문화여가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 이용 여건 양호	6.2	5.4	-0.8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다양	6.1	5.3	-0.8
안전	소방서 등 화재 발생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잘 구비	7.0	6.3	-0.7
	우범지역, 사고위험지역에 안전시설·설비(CCTV 등) 잘 구축	6.7	6.0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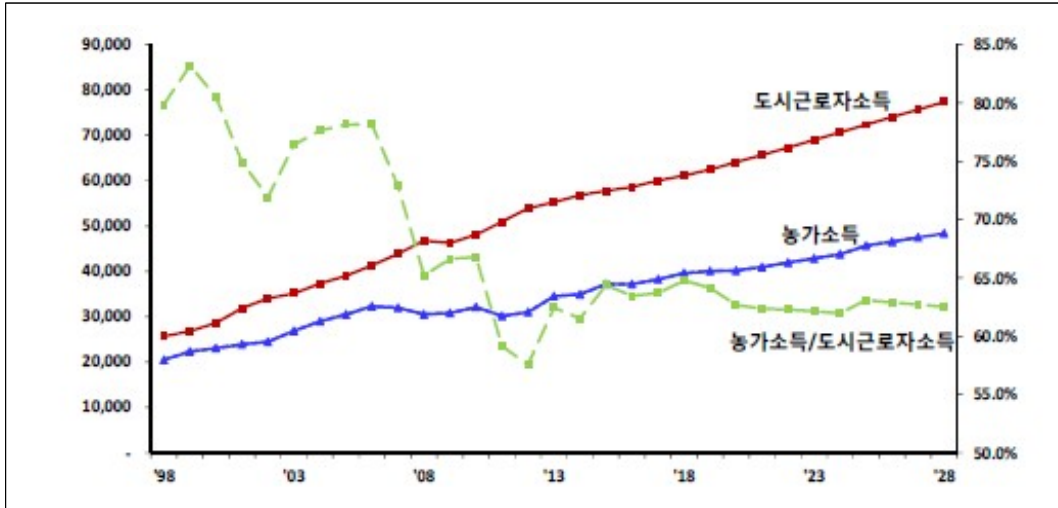
자료: 유은영(2018) 재구성.

□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등 새로운 경제 모델도 농어촌 지역에서 활성화

○ 소득 다각화 노력에도 도·농간 소득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40년에는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은 56.1% 수준이 될 전망

* 농가소득/도시근로자가구 소득: ('97) 86.3% → ('17) 63.7 → ('30) 61.4 → ('40) 56.1 (박기환 외 2019)

그림 2-1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 전망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박기환 외(2019: 37) 재인용.

○ 시장 기능이 약한 농어촌의 다양한 문제를 자발적 연대·협동 등 사회적 가치에 기초해 해결하려는 사회적경제 활발

- 농어촌에는 지역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안정적 소득을 창출하는 약 2,500~3,000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 중으로 추정

* 전국에서 농어촌 인구 비중은 18.8%이나, 전체 협동조합의 28.9%·사회적기업의 30.3%가 농어촌에 소재(국승용 외 2018)

□ 농어촌 지역 간 서비스 제공 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압력 증가로 난개발 지속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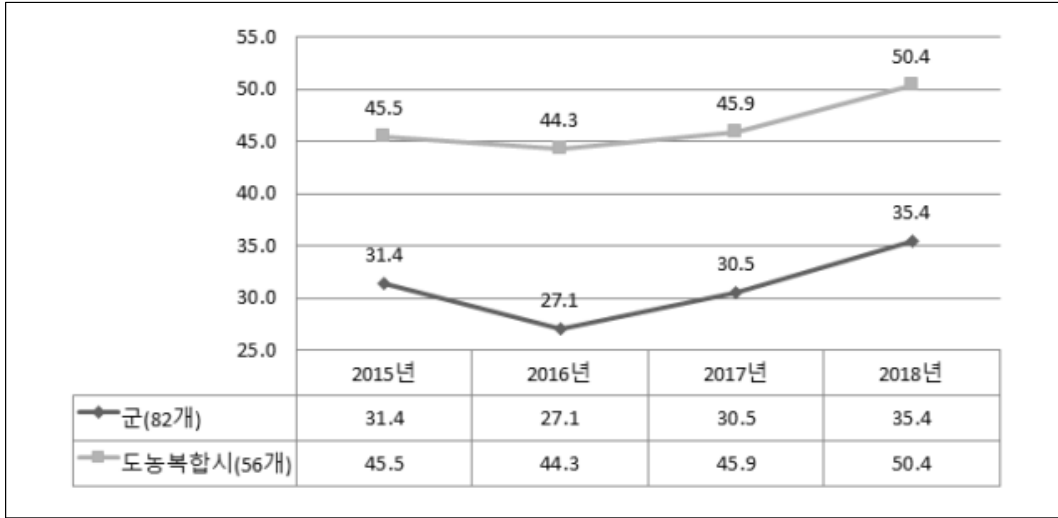
○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일수록 도·농복합시 대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이 뚜렷하게 낮게 나타나는 등 삶의 질 여건이 불리한 상황

-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에서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간 격차는 감소되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

* 군 지역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평균): ('15) 31.4% → ('18) 35.4

* 도농복합시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평균): ('15) 45.5% → ('18) 50.4

그림 2-2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평균)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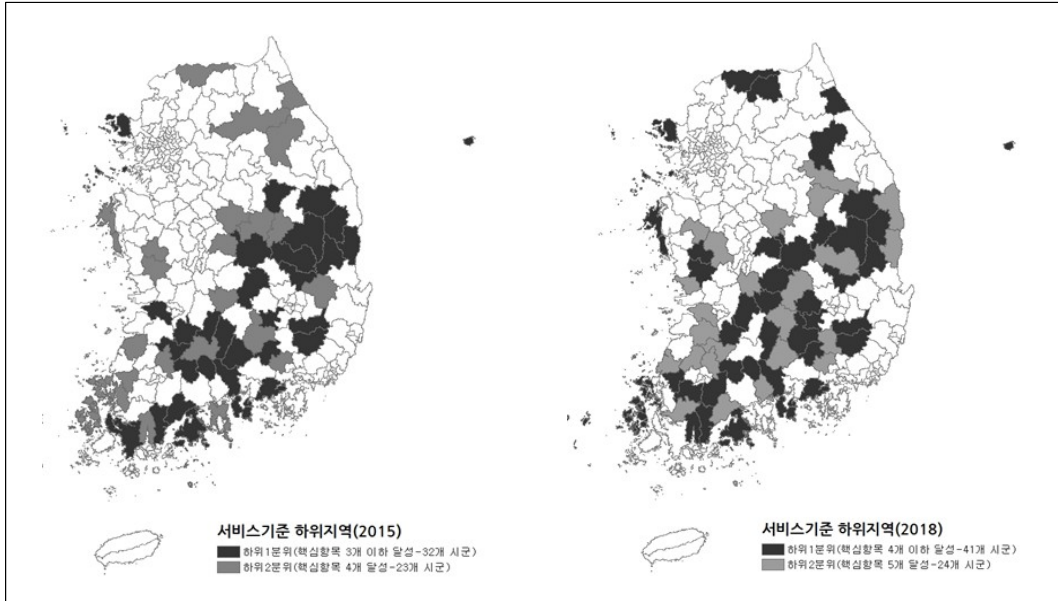


주: 경찰순찰, 주택, 광대역통합망을 제외한 14개 핵심항목의 시·군별 중기목표치 달성 비율을 집계한 결과
 자료: 업진영 외(2015); 김광선 외(2016); 정도채 외(2017); 김용욱 외(2018).

○ 농어촌서비스기준 취약지역(시·군)이 공간적으로 고착화되면서, 농어촌 지역 내 삶의 질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꾸준히 유지

- 농어촌서비스기준 취약지역은 전남·북, 경남·북, 강원 등 원격지에 주로 분포
 - * 서비스기준 취약지: 핵심항목 달성도 기준으로 5분위 중 하위 1, 2분위 지역(총 63개 시·군)
 - * '15년에서 '18년 사이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하락 지역은 28개 시·군에 해당
- 2015년 농어촌서비스기준 하위 1분위 지역(시·군) 32개 중 22개 지역(68.8%)이 2018년에도 해당 등위를 유지
 - * 2015년 하위 2분위 지역 55개 시·군 중 46개(83.6%) 시·군이 2018년에도 하위 2분위 유지

그림 2-3 농어촌서비스기준 하위지역 변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서비스기준 원자료

○ 도시 근교 농어촌은 낮은 지가 때문에 개별입지하는 공장·숙박시설 등이 늘면서 주민의 생존권 및 농촌의 경관·생태계 위협

<무분별한 공장 입지로 주민생존권 위협>

○ 익산시 장점마을: 마을에 인접(500m)지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11년~'17년 동안 연초박의 불법 건조시 발생한 발암물질로 인해 주민 99명 중 22명의 암 환자가 발생, 14명 사망

○ 2018년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취약지역과 일반지역 간 삶의 격차 및 읍 지역과 면 지역 간 격차가 존재

- 서비스기준 취약 면 지역은 응급실 도달 시간 30분 이상 비율이 28.3%
- * 응급실 도착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비율(%): 일반 읍 지역(13.7), 일반 면 지역(19.8)

- 서비스기준 취약지역의 통학 시간이 길며, 상급학교일수록 큰 격차
 - * 통학시간(분): [취약지역] 초: 10.1, 중: 18.4, 고: 29.2, [일반지역] 초: 9.6, 중: 14.8, 고: 21.6
- 하루 대중교통 운행횟수 3회 이하 비율은 서비스기준 취약 면 지역에서 일반 읍 지역 대비 4배 이상 높음.
 - * 대중교통 운행 횟수 3회 이하 비율(%): 취약지역(읍-8.8, 면-30.0), 일반지역(읍-7.1, 면-18.6)
- 월 평균 난방비로 20만 원 이상 지출하는 비율은 면 지역이 월등히 높음.
 - * 월 평균 난방비 20만 원 이상 비율(%): 읍 (19.0), 면 (40.2)

□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와 새로운 역할에 대한 국민 요구 증대

○ 국민은 농어촌에 식량 생산 외, 환경·경관 보전, 여가공간 활용 등 다방면 역할 기대

- 도시민 조사 결과 식량 생산 이외에 농업·농촌의 다원적 역할(환경 보전, 여가공간, 문화유산 보전, 경관 보전 등)이 장래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응답(송성환·박혜진 2018)
 - * 농업·농촌의 중요한 역할 중 다원적 가치 응답 비율: (현재) 32.1% ⇒ (미래) 65.5%
 - * 농업·농촌의 공익가치에 대한 국민인식: (‘10) 55.8% → (‘18) 72.2% <농민 인식(‘18): 88.2%
 - * 농촌 이주 의향을 지닌 도시민들은 귀농·귀촌 이유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53.4%)을 가장 많이 꼽음.

○ 농어촌은 국민들의 소망목록(버킷리스트)의 실현 장소로 조명받는 상황

-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농어촌에서 꿈을 실현하려는 사람이 다수이며,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도시민일수록 농어촌이 갖는 차별적 가치에 더욱 주목(송미령 외 2019)
 - * 40대 64.6%, 50대 64.4%가 농어촌 지역을 버킷리스트 실현 장소로 응답
 - * 농어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려는 이유(구체적 준비 그룹): (1위) 좋은 자연환경(38.3%) / (2위) 여유로운 삶(35.5%) / (3위) 건강을 위해(16.4%)

○ 반면, 농업·농촌이 갖는 미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있어 열악한 농어촌의 삶의 질 여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 도시민 역시 농어촌의 정주환경을 비롯한 삶의 질 서비스 문제가 농어촌에서의 활동에 가장 큰 제약으로 응답(송미령 외 2019)
 - * 농어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실행하지 않으려는 이유: (1위) 열악한 생활환경(29.5%) / (2위) 열악한 문화여건(17.9%) / (3위) 열악한 의료환경(14.2%)

□ 지방분권 이후, 지자체 간 농촌정책 추진 역량의 격차 심화 예상

○ 중앙정부 재정사업의 지방이양 확대 등으로 중앙에서 관리 가능한 정책 수단이 축소될 전망

- 지방이양 예상 과제는 2019년 삶의 질 시행계획 전체 169개 중 38개(22%) 수준(전체 예산 18.7%)

* 이양 대상 과제: 마을만들기, 기초생활인프라(정주생활기반), 자원복합화 관련(농식품부, 해수부), 문화 시설 확충, 지역문화 행사(문화·여가) 등

○ 지자체 차원의 농촌정책 추진 기반을 갖춘 시·군이 지역적으로 차별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분권화 확대 이후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여건의 편차도 커질 전망

- 중간지원조직 설치, 지역개발 전문가 채용 등 지자체 차원의 농촌정책 추진 기반을 갖춘 시·군은 충남, 전북 등 일부 지역에 주로 분포(송미령 외 2018a)

* 마을만들기/공동체 지원 중간지원조직 구성 시·군: (충남·전북) 68.4% (타 시·도) 13.0%

* 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채용 시·군: (충남·전북) 57.9% (타 시·도) 9.4%

○ 농촌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지 못한 지역일수록 향후 단체장 선심사업 확대, 원격마을 등 소외지역 투자 위축 등 부정적 변화에 대한 우려 확대(송미령 외 2018a)

- 지자체 공무원 조사 결과 중간지원조직 미활용 지자체일수록 재정 분권 이후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5점 척도)

* 단체장 선심성 사업 확대: 3.66(미설치 지역) vs. 3.15(설치 지역)

* 원격마을 등 투자 위축: 3.19(미설치 지역) vs. 2.74(설치 지역)

2. 관련 계획 및 정책 동향

□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하기 위해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역점에 두고 농정 추진 전략 수립

그림 2-4 농정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

비전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 -		
중점 추진 과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직불제 확대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 강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쌀 변동직불제 개편
		농가 경영 안전장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재해지원 수입보장보험 확대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 등 경영비 절감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 산업 개편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 수급안정 강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농식품 혁신성장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육성 R&D, 빅데이터 등 혁신인프라 정비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창업농 등 미래인력 육성 농생명소재, 반려동물산업 등 육성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업 확산 축사현대화 등 축산환경 개선 	
추진 체계	참여와 협력 농정	안정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콩 등 수입의존도 높은 품목의 식량자급률 제고
		건강한 식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과일간식 지원제도 도입 등 공공급식의 품질 제고
		농축산물 안전품질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 위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 GAP/HACCP 등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적 지역개발 등 농촌뉴딜 산림을 복지·휴양공간으로 활용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특화형 복지 확충 여성농업인의 위상 제고 	
	지역 순환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육성, 귀농·귀촌 활성화 등 	
	참여 농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지원 	
	협력 농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농정 통상·국제농업·남북협력 현장 농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주요 농정과제로는 ①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②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강화, ③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④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을 제시

-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직불제 확대, 농가경영안전장치 강화,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혁신
-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강화: 농식품 혁신성장 역량강화,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육성
-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안심 먹거리체계 구축, 건강한 식생활 지원, 농축산물 안전·품질 관리 강화
-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구현,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지역 순환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 계획 비전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으로,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

○ 계획의 3대 전략으로, ① (사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② (공간)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③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으로 설정

- (사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①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②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③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 (공간)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④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⑤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⑥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으로 설정: ⑦ 혁신도시 시즌2, ⑧ 지역산업 3대 혁신, ⑨ 지역 유희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 농정부문 과제로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실현을 위해 농어촌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다방면의 실천 과제를 제시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 불편없는 농촌 3·6·5 생활권 구축,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다움 회복, 맞춤형 귀농어·귀촌 정착 지원, 청년의 농어촌 정착 지원, 산림자원을 활용한 활력있는 산촌 조성

그림 2-5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특징

구분	과거 계획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정책주도	중앙정부 주도	지역 주도		
정책목표	지역특화발전	지역 간 균형발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지역특화발전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

○ 계획 비전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설정하고, 목표는 ①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②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③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로 제시

-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촉진하여 국가발전을 선도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수립 추진

○ 계획의 6대 전략으로 ① 주민주권 구현, ②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③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④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제시

- 향후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기부자가 지자체에 직접 기부를 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및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추진

□ 혁신적 포용국가 아젠다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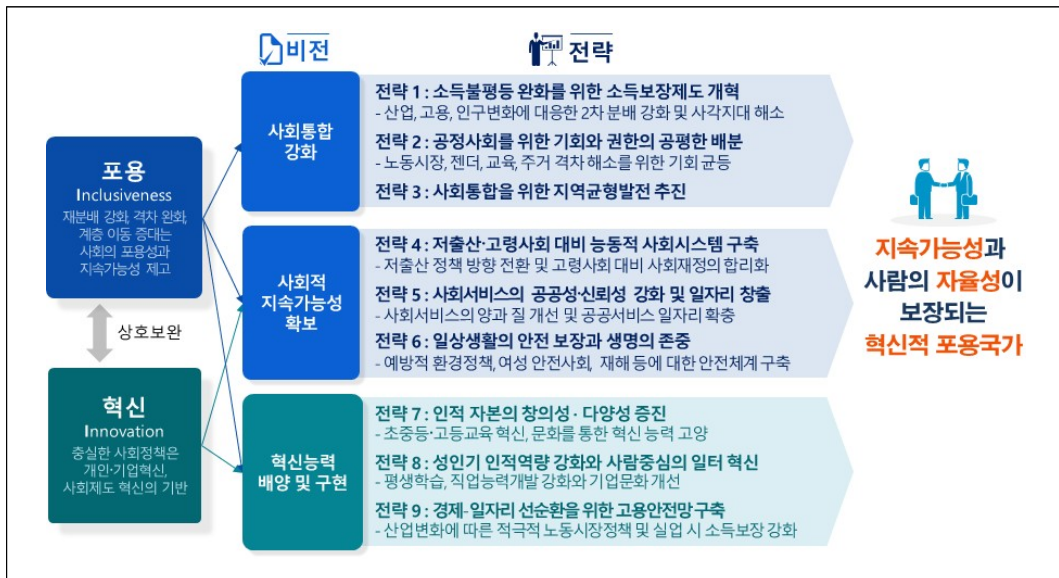
○ 정부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선언하고,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

- 혁신적 포용 국가는 ‘모든 국민이 차별·배제를 받지 않고, 생애주기에 걸친 삶의 책임,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를 국가가 보장하고, 이를 위해 혁신하는 나라’를 의미

○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 제시(2018)

- 사회통합강화: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인적자본의 창의성, 다양성 증진,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등

그림 2-6 혁신적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 4차산업혁명 및 스마트 기술 변화 대응

- 정부는 2017년 9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산업혁명 대응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의 수립, 이행을 추진
 - 위원회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등으로 촉발되는 지능화 혁명, 그리고 그 이상'을 의미

- 국가과학기술 관련 계획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문제 해결 등의 중요성을 강조
 - 국가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최상위 정책인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부터 기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 등을 강조
 -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된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40개 중요 사회문제를 도출하고, 각 이슈별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의 추진 과제를 제시
 - 국토교통 과학기술에 대한 종합계획인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018~2027)」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난·재해 예방 안전 및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

- 농업·농촌 부문 관련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은 일부 영역으로 한정
 - 4차산업혁명 대응과 관련된 포괄적인 농식품 부문 정책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에서 다루고 있지만 농식품 분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집중
 -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15~2019)」에서도 국민 행복 제고를 중점 분야로 설정하였으나, 농식품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 국토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최상위 국토계획

- ‘국토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의 체계로 구성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기간을 목표로 수립

-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릴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

-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국토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메가트렌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남북관계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비전 및 추진전략을 제시

그림 2-7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자료: 국토교통부(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 자료

□ 시사점

- 지방분권에 대응하여 지자체 차원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책 필요
 - 지방분권 강화에 따라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수단이 축소될 전망이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포함된 일부 정책사업들도 지자체로 이양
 - 지자체 및 다양한 현장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단위 추진기반 확보가 앞으로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전망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농식품부 농발계획 등 유관 계획과의 정책적인 연계 방안을 강화할 필요
 - 농발계획에서 농촌 일자리, 농촌 환경 및 정주여건, 농촌 복지·문화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삶의 질 관련 정책 영역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중요해지는 상황
 - 농식품부 정책을 포함하여 부처별 정책 간 연계를 통해 농어촌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 최근 제기되는 농어촌 주민 고령화와 마을 과소화 문제에 대응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 필요성 부각이 요구되며, 새로운 정책 영역 발굴이 필요
 -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 하에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새로운 생활양식 실현을 위해 농어촌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 제기(반농반X의 라이프스타일, 워라밸, 자아실현 등)
 - 기존 삶의 질 향상 정책은 노인, 취약계층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두었으나, 현 정부 들어 청년 일자리, 사회적경제, 사회적 농업 등 다양한 부문으로 삶의 질 정책 영역 확대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고착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형 스마트기술을 적극 활용한 문제해결 방법 검토 필요
 - 국가과학기술 관련 계획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발계획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또한 농업 분야에 편중
 -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

3. 제3차 기본계획 평가

3.1.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 계획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도·농간 삶의 질 만족도 격차가 감소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의 총 투용자 규모는 51조 9천억 원 수준이 될 전망
 - 4대 부문 133개 과제, 22.8조 원 투용자(제1차 기본계획, 실적)에서 7대 부문 185개 과제, 51.9조 원 투용자로 예산 확대(제3차 기본계획, 예상)

표 2-3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삶의 질 정책 투용자 실적

단위: 억 원

구 분	2015년 (실적)	2016년 (실적)	2017년 (실적)	2018년 (실적)	2019년 (계획)	합계	
계획	95,800	105,519	109,067	116,085	133,598	519,467	
실적	119,961	131,198	104,407	114,399	-	-	
집행률(%)	125.2	124.3	95.7	98.5	-	-	
분야별	보건·복지	35,078	37,395	15,764	20,761	26,609	124,409
	교육	833	626	431	381	296	2,810
	정주생활기반	37,145	48,532	42,297	50,006	59,007	211,060
	경제활동·일자리	9,319	8,306	9,174	8,524	8,709	43,978
	문화·여가	3,573	4,658	5,146	5,142	6,823	21,744
	환경·경관	10,989	11,128	11,399	10,866	10,180	57,502
	안전	23,024	20,553	20,196	18,718	21,972	112,362

주: 2018년은 삶의 질 시행계획, 2019년은 기본계획 보고서 상의 계획 예산을 기입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각 연도); 송미령 외 (2018b) 재인용.

- 도·농간 포괄적인 만족도 차이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마을과 시·군 발전 전망에서의 점수 차이도 줄어드는 추세(유은영 2018)
 - 과거 만족도 격차가 컸던 교육 및 문화·여가 부문의 도·농 간 격차가 크게 감소
 - * '16년 대비 '18년 만족도: 교육 부문 격차(1.4 → 0.7), 문화·여가 부문 격차(2.0 → 0.7)

표 2-4 도시·농어촌 주민의 포괄적인 삶의 질 만족도 평균점수 변화

구분	현재 행복감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16	'17	'18	'16	'17	'18	'16	'17	'18	'16	'17	'18
도시지역(동) (N=949)	6.4	6.2	5.9	6.7	6.3	6.1	6.8	6.7	6.5	6.9	6.8	6.5
농어촌 지역(읍·면) (N=2,203)	6.4	6.2	6.2	6.5	6.3	6.2	6.0	6.1	6.2	6.4	6.5	6.3
도·농 차이(농어촌-도시)	0	0	0.3	-0.2	0	0.1	-0.8	-0.6	-0.3	-0.5	-0.3	-0.2

주: 2016년, 2017년 조사는 10점 척도(1~10점 부여). 2018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사용
 자료: 유은영(2018).

- 삶의 질 기본계획 7대 부문 중 보건·복지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 농어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증가

* '16년 대비 '18년 만족도 지수 비교: 보건·복지(-0.2), 교육(+0.2), 정주생활기반(+0.1), 경제활동·일자리(+0.3), 문화·여가(+0.8), 환경·경관(+0.1), 안전(+0.2)

□ 농어촌 공공서비스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중 정책 부문별로 설정한 성과지표 중 2017년 기준 비교 가능한 42개 성과지표 중 35개 지표(83.3%)가 개선

- 42개 성과지표 중 7개 지표는 중기목표치를 조기 달성(김용욱 외 2018)

* 응급의료시설, 농어촌 거점중학교, 농어촌학교 ICT 기기보급률, 농어촌 광대역통신망 구축, 농촌체험 휴양마을 방문객 수, 문화예술 관람률,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수

- 응급서비스, 노인서비스, 상수도, 난방, 광대역통합망, 문화프로그램, 하수도, 방범설비 등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가 개선 추세

- 제3차 기본계획(2015-18년) 동안 비교 가능한 농어촌서비스기준 15개 핵심항목 중 9개 항목(60%)의 달성도가 개선(김용욱 외 2018)

* 응급서비스, 광대역통합망 항목은 중기목표치를 초과 달성

표 2-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서비스기준 핵심항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중기목표('19)
보건 복지	진료서비스	76.8	73.9	71.7	71.0	80
	응급서비스	98.4	98.6	98.6	98.6	97
	노인서비스	71.8	70.1	71.1	73.3	80
	영유아	69.7	69.2	69.6	69.0	80
교육	초중학교	71.1	71.8	70.2	70.3	100
	평생교육	21.8	19.7	18.9	20.4	40
정주생활 기반	주택*	-	-	-	-	95
	상수도	67.8	69.3	71.3	72.9	82
	난방	53.1	57.0	60.0	63.1	70
	대중교통	90.4	90.4	88.6	88.6	100
	광대역통합망	85.8	92.8	96.4	100.0	90
경제활동·일자리	창업및취업교육	67.3	67.4	75.4	73.2	100
문화·여가	문화프로그램	91.3	92.0	91.3	93.5	100
환경·경관	하수도	80.8	81.0	82.0	82.9	85
안전	방범설비	35.8	43.2	49.3	53.6	60
	경찰순찰*	-	-	-	-	100
	소방출동	41.1	25.2	24.6	18.8	55

주 1) '주택', '경찰순찰' 항목은 구득 가능한 자료가 없어 비교 항목에서 제외하였음.

2) '응급서비스' 항목은 2015년에는 138개 전체 시·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데 반해 2016년에는 소방서가 입지한 114개 시·군, 2017년에는 117개 시·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

자료: 엽진영 외(2015); 김광선 외(2016); 정도채 외(2017); 김용욱 외(2018).

○ 138개 시·군의 핵심항목 달성 정도를 중기목표치를 기준으로 평균 점수화¹⁾한 결과, 71개 시·군(51.4%)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이 개선(김용욱 외 2018)

- 전체 시·군의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고, 특히 전북과 경남지역 시·군의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크게 향상

* 138개 시·군의 전체 평균 점수 변화: ('15)55.6점 → ('18)56.4

1) 중기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한 지역을 5점, 90% 4점, 80% 3점, 70% 2점, 60% 1점, 60% 미만 달성 지역 0점으로 구분하여 비교가 가능한 서비스기준 14개 항목의 총점(62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시·군별 점수를 산정

3.2.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한계

□ 농어업인에 편중된 정책 추진으로 다양한 계층 포용 미흡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은 농어업인, 노인 등 특정 계층 위주로 추진되어, 청년, 여성, 어린이 등 다양한 성별, 생애주기별 수요 대응에 한계

- '19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과제(168개) 중 정책 대상자가 명확한 과제는 총 50개로, 이중 농어업인 대상 과제가 46%에 이룸
- 농어촌 주민 중 여성(2개), 귀촌인(3개), 장애인(1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는 소수에 불과하며, 특히 청년 대상 과제는 전무

표 2-6 정책 대상별 삶의 질 시행계획 과제 수('19)

전체	농어업인	청소년	영유아	노인	귀촌인	다문화	고령농업인	여성	여성농업인	임산부	장애인	청년
50	23	7	4	3	3	3	2	2	1	1	1	0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2019).

□ 농어촌 관련 부처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범부처 정책으로서의 위상 약화

○ 기본계획 과제 전반에서 농어촌 관련 부처(농식품부, 해수부 등) 외 타 부처 역할 약화

- 제1·2·3차 기본계획별 부처 예산 비중 특징을 살펴보면, 농식품부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타 부처 비중은 감소

* 기본계획 기간별 농어촌 유관부처(농식품부 등) 예산비중: '05(1차)25.8% → '10(2차)66.6% → '15(3차)58.4%

- 삶의 질 중요도가 높은 교육, 보건·의료 부문의 소관 부처 예산 투입 비중 축소

* 기본계획 기간('05~'15) 중 예산비중 감소: 행정안전부(소방청, 국민안전처 포함) 40.9% → 6.0%, 교육부 7.4% → 1.0%, 복지부 8.2% → 4.2%

* 특히, 삶의 질 세부과제 수에서 교육부 비중이 크게 감소('05: 19.8% → '15: 5.9%)

○ 제2·3차 기본계획 기간으로 올수록 농특회계 예산이 농어촌 관련 부처 사업 위주로 편성·추진되면서, 범부처 정책으로 실행되는 데 한계

- 제1차 기본계획 기간에 농특세 재원으로 다양한 부처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차 기본계획 이후 해당 재원이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 사업에 편중

* 복지부, 행안부 등 타 부처 예산 비중 감소: '05(1차) 66.1% → '10(2차) 36.6% → '15(3차) 5.8%

표 2-7 부처별 삶의 질 세부과제 비중(과제 수, 예산)의 변화

부처	제1차('05)		제2차('10)		제3차('15)	
	예산(억 원)	비율(%)	예산(억 원)	비율(%)	예산(억 원)	비율(%)
농산어촌 유관 부처 -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9,071	25.8	42,398	66.6	50,372	58.4
행정안전부 등*	14,358	40.9	4,827	7.6	5,141	6.0
보건복지부	2,890	8.2	1,941	3.0	5,000	5.8
교육부	2,597	7.4	5,563	8.7	850	1.0
국토교통부	351	1.0	945	1.5	6,857	7.9
환경부	2,545	7.2	6,954	10.9	10,789	12.5
문화체육관광부	2,005	5.7	826	1.3	3,323	3.9
기타	1,303	3.7	242	0.4	3,947	4.6
총계	35,120	100.0	63,695	100.0	86,279	100.0

주 1) 농산어촌 유관 부처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을 포함

2) 행정안전부 등의 경우 부처 개편을 고려하여 소방청, 경찰청, 국민안전처 등 예산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등 필수 수요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이 불충분

○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의 이행실태 개선과 직접 관련된 사업은 일부에 불과하고, 해당 사업 또한 성과 창출에 한계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개선을 위해 직접적으로 정책·사업이 추진되는 핵심항목은 전체 17개 항목 중 10개에 해당

* 10개 핵심항목: 응급서비스, 영유아, 평생교육,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광대역통합망, 농어촌창업 및 취업컨설팅, 문화시설·프로그램, 하수도

- 핵심항목 개선과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이라도, 일부 사업은 미미한 사업량, 예산 미 지원, 사업 종료 등 문제로 성과 창출에 한계

* 예산 미지원 과제: (응급서비스-소방청) 농어촌 응급의료인프라 확충 - 지자체 자체적 펌플린스 출동시스템 구축

* 사업 종료 과제: (평생교육-교육부) 2018년부터 행복학습센터 지원 사업 종료

○ 핵심항목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 중에서도 농어촌을 위한 별도 사업을 추진하거나, 농어촌 취약지역에 선정·지원하는 사업은 소수에 불과

- 서비스기준 핵심항목 관련 사업 중 농어촌 대상 사업은 7개이며, 그 외 사업은 농어촌을 특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움.

* 농어촌 대상 사업: (평생교육-교육부)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문화시설-문화부)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하수도-환경부)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농어촌 중 취약지역에 우선·차등 지원하는 사업은 4개에 불과함.

* (응급-복지부)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응급실 부재지역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

* (상수도, 난방, 하수도) 관련 인프라 미구축 지역 대상으로 사업 수행

□ 정책 점검·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 환류 과정 미흡

○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1~3차 기본계획 기간마다 점검·평가 방식을 개선하였으나 정책 환류의 문제는 상존

- 제3차 기본계획에서 관계부처별 과제 이행 충실성 및 농업인(지역) 만족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서면·지역평가를 하였으나,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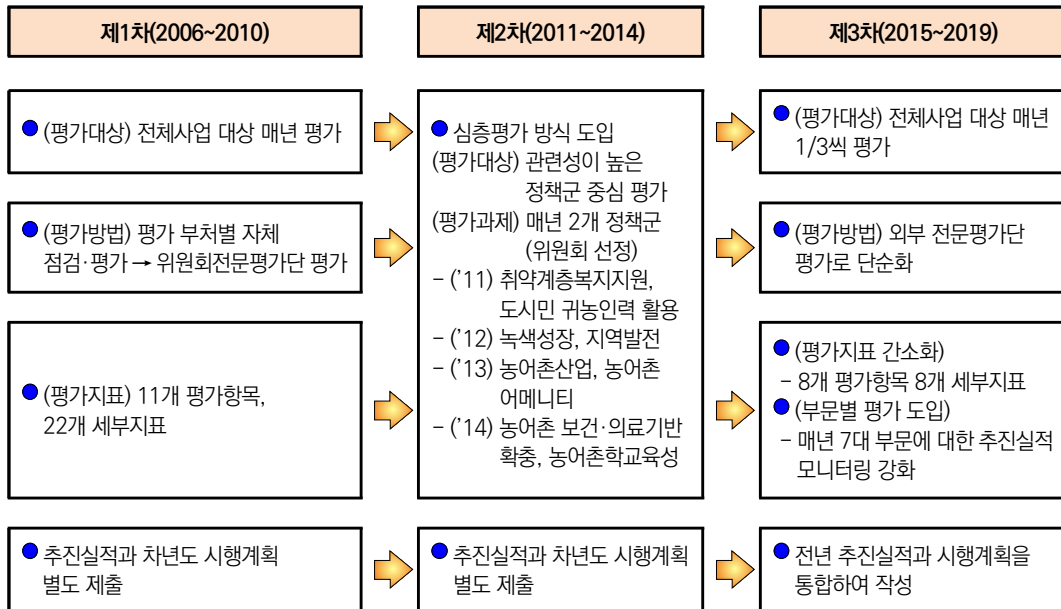
* (서면평가) 과제당 3명의 전문평가위원이 평가지표에 따라 과제에 점수를 매겨 등급을 도출하고 우수·부진과제 선정

* (지역평가) 체감도 및 지역실태 평가를 위해 농어촌 인프라 취약 지역에 현장평가 병행

-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우수 및 부진 과제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고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및 정책수단 또한 미흡

* 제3차 기본계획 시행평가 도입 시 부진 과제에 대해 차년도 수정평가 시행을 계획했으나, 실시되지 못함.

그림 2-8 제1·2·3차 기본계획 기간별 정책 점검·평가 방식의 변화



○ 타 부처 정책에 대한 점검·조정 및 정책환류 수단으로 농어촌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제 작동하지 못함.

-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의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실제 제정되지 못함.

* '17년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용지침'(안)을 심의 제안하였으나, 실무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평가 미시행

□ 지방분권 대응, 지역 단위 추진기반 구축에 한계

○ 지자체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조직 및 관련 중간지원조직 미비

- 농정 부서 외에 삶의 질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한 지자체는 소수

* 농어촌 138개 시·군 중 농정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삶의 질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지자체는 없음.

- 중간지원조직을 실제 운영 중인 지자체도 소수에 불과

* 일반농산어촌 시·군 지역(73개) 중 중간지원조직 구성 비율은 27.4% 불과(송미령 외 2018a)

* 중간지원조직 구성 비율이 높은 충남·전북을 제외할 경우, 구성 비율은 13.0%에 불과

○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단위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꾀하였으나, 성과는 제한적임.

- 지자체 단위 기획단 운영 및 거버넌스 구축 계획은 실행되지 못함.
-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제정되고 삶의 질 향상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이에 바탕을 둔 지자체 차원의 삶의 질 정책 추진은 미진

3.3.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주요 부문별 평가 결과

- (보건·복지) 농어촌 어린이집 지원 등 대상그룹별 복지 서비스 강화 및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서 성과를 냄.
 -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17년 625개), 응급의료시설 부재 군 감소 '14년 12개 → '17년 4개
 - 65세 이상 비농업 노인에 대한 농어촌형 사회안전망 제공과 의료 취약지 해소는 미흡
 - *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 10.7%(농어촌)/5.7%(도시) (농촌진흥청 2018)

- (교육)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 등 농어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함.
 - 농어촌학교 ICT 기기 보급률 달성(100%),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등 교육 인프라 확충
 -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등 공교육 서비스 개선과 학교 간 연계 교육과정 프로그램 미흡
 - * '17년 기준 농어촌 시·군에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수준은 59%,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서비스를 확충한 '농산어촌 전원학교'는 전체 농어촌 학교의 1/5만 해당

- (정주생활기반)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생활권 활성화에 기여함.
 -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확대('14) 13개 → ('18) 82개 군
 - 농어촌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은 미흡
 - * 슬레이트 주택 거주 비율: 50대 8.3% < 60대 8.9% < 70대 이상 13.0%

- (경제활동·일자리) 소규모 농업인 창업 촉진과 농어촌 일자리 창출에서 성과가 있음.
 - 6차산업 인증 사업자 증가 및 도·농 협력 일자리 연계 확대(~'17년 약 16만 건)
 - 농어촌 체험휴양 기반 등 농어촌 관광의 체계화 및 품질 제고는 미흡
 - * 농촌체험휴양마을 수는 늘고 있으나 매출은 정체 (마을당 매출액 '15년 100백만 원 → '17년 89백만 원, e-나라지표)

- (문화·여가) 문화·여가 접근성 향상 및 지역문화전문인력 등 인적기반 형성에 기여함.
 - 농어촌 특성에 맞는 문화 여가 인프라(생활문화센터 81개소) 확충 및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확대
 - 농어촌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의 발굴 및 복원·확산은 미흡
 - * '18년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 사업 47.4%,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 74.3% 예산 축소('15년 대비)

- (환경·경관) 쾌적한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 및 해양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함.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확대(~'17년 3,950개소)
 -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과 주민 자율적 경관보전 활동은 미흡
 - * 경관보전지불금 신청 시 의무적으로 체결되는 협약 외에 자발적인 협약 체결 사례는 전무

- (안전)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 수리시설 안전관리 등에서 성과를 창출함.
 - 수리시설 보수·보강 비율(47% → 57) 및 상습 침수 농경지 개선율(56% → 60) 증가
 - 안전한 영농·영어기반 조성 및 생활안전과 관련한 범죄예방 활동 등은 미흡
 - *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비율: 38.8% (농촌진흥청 2018)

3

제4차 기본계획의 방향 및 비전·목표·전략

1. 제4차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 (정책 목표) 기존의 일률적인 도·농 격차 해소에서 벗어나 지역·정책 대상별 수요 맞춤형으로 대응하도록 정책 목표를 전환
 -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 농어촌 지역 내 삶의 질 격차를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에 필수적 서비스를 중점 지원
 - 농어촌 인구·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정책 수요를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정책 대상) 농어업인 중심에서 다양한 세대·계층을 포용
 - 농어업인에만 중심을 두지 않고 귀농어·귀촌인, 다문화 가정, 도시민 등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정책 발굴·추진

- (정책 범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전(全) 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 범위를 확대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 정책을 효과적으로 협의·조정 및 이행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내실화
- 구체적 실행 기준 미비 등으로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농어촌 영향평가 등 제도적 장치들의 운영을 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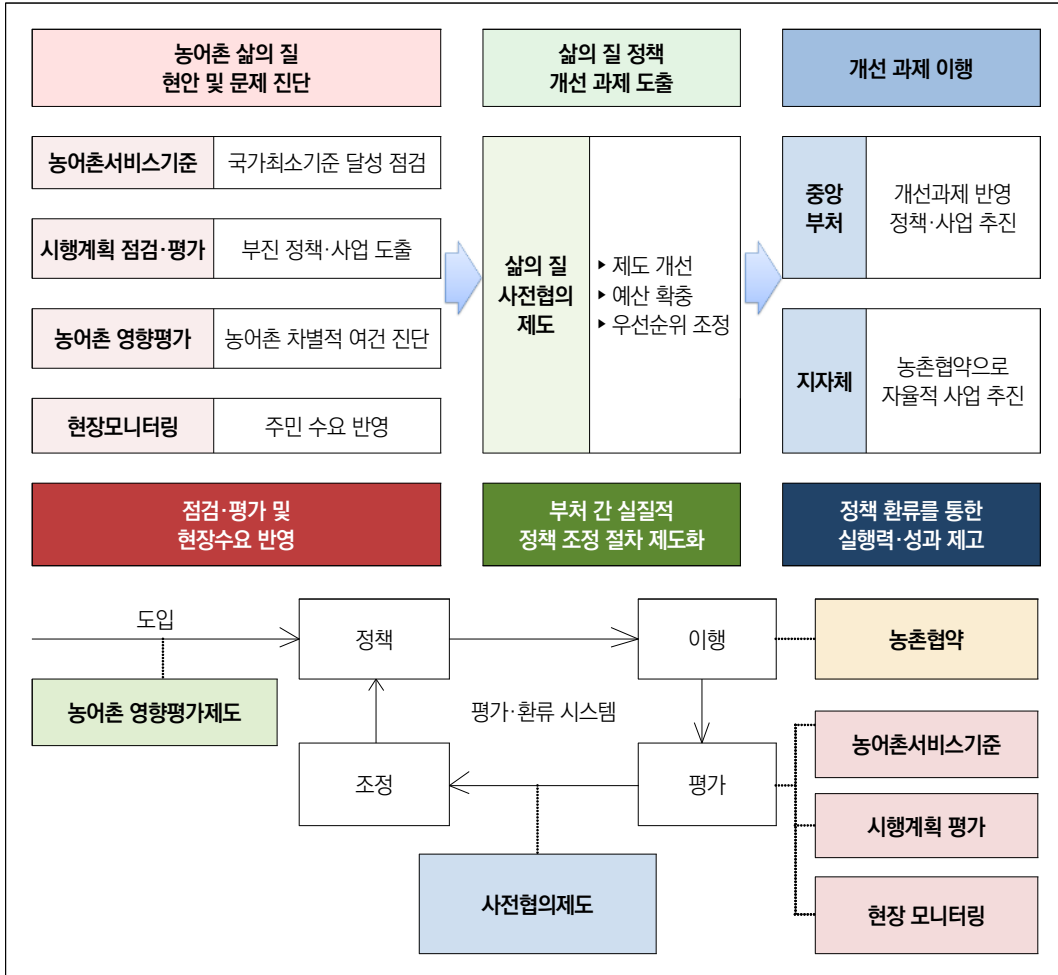
○ (정책 거버넌스) 개별 사업, 중앙정부 주도하던 방식에서 플랫폼 방식의 중앙과 지방, 민관의 협치 거버넌스 중심으로 고도화

- 지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자율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그림 3-1 삶의 질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기존 기본계획	제4차 기본계획
목표	생활인프라 및 소득의 도·농 간 격차 완화	농어촌 지역 내 격차 해소, 다변화되는 정책 수요 대응
대상	농어업인 중심	농어촌의 다양한 세대·계층 포용
범위	농식품부, 해수부 정책 중심	관련 5 부처 협업 추진체계 내실화
거버넌스	단위 사업별 관리 중앙정부 주도	통합적 지원을 위한 플랫폼 중앙과 지방, 민과 관의 협치

그림 3-2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향



2. 목표와 전략

2.1. 비전 및 목표

- 비전: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는 ‘전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 철학을 반영
 -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 보장: 도·농간 격차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삶의 질 균형 확보
 -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국민의 가치관 변화, 기술 발전 등 사회구조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및 체류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

- 목표: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어디에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 생활권,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생명의 터전
 -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포용국가’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차별 없는 대우와 취약계층·지역에 특별한 지원 정책 강조
 - 시장경제 영역 및 공공부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율적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 생활권: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이 공공서비스 취약지역임을 고려, 서비스별 실질적 접근성 강화 추진
 - 농어촌 지역 어디서나 30분내 기초 생활서비스, 60분 내 고차·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시스템을 구축

 -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생명의 터전: 도시의 혼잡을 벗어나 힐링 공간으로서 농어촌의 가치를 추구하는 최근의 추세 활용 필요
 - 농어촌의 환경 및 경관,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2.2. 추진 전략

- (복지서비스 향상) 고령화·과소화 심화로 인한 농어촌 지역 맞춤형 돌봄 수요 대응 및 열악한 의료 여건 개선
 -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사회서비스 정책 사업과 농어촌 정책사업을 연계한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의 개발·확산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의료취약지역(응급·분만·소아) 해소, 농어업인 특화·예방적 건강서비스 확충 등 추진

- (교육·문화 지원) 농어촌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하여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여가 향유 기회 확대
 -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학교 간 연계 교육 강화 등 학생 복지를 증진하고,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노령층의 교육 기회 확대
 - 농어촌의 문화·여가 소외 지역 중심으로 관련 생활SOC 확충

-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정주 특성에 맞춰 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하고,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
 - 읍·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여가 등 각종 생활서비스와 관련된 복합거점 인프라를 확충하고, 배후마을과 연계 강화
 - 귀농어·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농어촌 체류형 주거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거 여건 조성
 - 농어촌 공간의 질서 있는 개발·보전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 (경제활력 증진)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다각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창업 활성화
 - 농어촌 융복합산업 고도화, 로컬푸드 확산, 농어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내 경제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청년, 귀농·귀촌인 및 다문화 여성 등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경제 주체의 취·창업 촉진

2.3. 추진기반

- (서비스 기준 개편) 모니터링·성과평가 등의 내실화를 위해 핵심항목 기준 개선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규항목 신설
 - 농어촌 현실에 맞게 일부 항목에 접근성 개념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환류하는 시스템 제도화

- (이행 관리 수단 제도화) 소관 정책 이행에 대한 각 부처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을 담보할 수단들을 내실화
 - 이행이 부진하거나, 차년도 예산 반영이 필요한 정책·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전협의를 제도화
 - 주요 정책 중 농어촌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 대상으로 농어촌 영향평가의 내실 있는 운용

- (지역의 추진체계 구축) 지자체 삶의 질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농촌협약’ 도입으로 정부-지자체간 협업 강화
 - 지역 여건에 맞는 삶의 질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체계 구축 지원
 - 체감도 높은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이슈의 지속적 발굴 및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현장의 정책 수요를 수렴할 수 있는 창구 마련

그림 3-3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전략, 추진기반

비전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② 어디에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생활권 ③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생명의 터전 	
전략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②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③ 보육, 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④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교육·문화 기획의 형평성 보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②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③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기반 구축 ④ 주민주도형 문화·여가 활동 지원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개선 ②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③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④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반 다각화 ② 농어촌 관광 활성화 ③ 농어촌 주민 창업촉진 ④ 농어촌 주민 구성을 고려한 일자리 다변화
추진 기반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통한 실효성 있는 범부처 정책 조정 지역 주도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제도화	

3. 투융자 규모

□ 제4차 기본계획 기간 중 투융자 규모는 49조 원 수준으로 제3차 기본계획 규모(46조 5천억 원) 대비 약 5.3% 증가

○ 국비 35조 2천억 원(총 투융자 규모의 71.8%), 지방비 10조 원(20.4%), 기타 3조 7천억 원(7.6%)으로 구성

- 국비는 농특회계 14조 3천억 원(총 투융자규모의 40.6%), 균특회계 3조 6천억 원(10.2%), 일반회계 11조 7천억 원(33.2%) 및 기타회계 5조 6천억 원(15.9%)으로 구성

표 3-1 재원 및 과제별 투융자 규모

구 분		제4차 삶의질 향상 5개년 투융자(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합 계		92,761	101,909	102,870	97,663	94,752	489,955
재원별	국 비	65,803	73,024	73,928	70,631	68,745	352,131
	지방비	19,806	21,443	21,402	19,457	18,438	100,546
	기타	7,153	7,443	7,541	7,575	7,569	37,281
과제별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19,388	19,859	21,055	22,152	22,691	105,144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5,952	5,628	5,637	4,981	5,135	27,334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58,744	66,048	66,058	61,978	59,250	312,078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8,677	10,374	10,119	8,551	7,676	45,399

주 1) 연도별 투자규모는 각 부처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연도 예산 편성 시 조정될 수 있음.

2) 지방비는 국비 매칭자금 및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만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연 평균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정 지방이양에도 불구하고 신규 과제 발굴 등을 통해 투·융자 규모 확대

○ 지방이양 사업 규모(연평균 1조5천억 원) 고려 시 총 예산 규모는 56조 5000억 원 수준으로 제3차 기본계획(46조 5천억 원) 대비 21.5% 증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식품부), 상수도 시설관리(환경부), 소하천 정비(행안부) 등 계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이 지방이양 대상에 포함
 - 제1차 지방이양 대상 규모는 총 3.5조 원 규모이며,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주요 사업이 균특회계 사업으로 추진되어 투융자 규모 감소 영향 불가피

표 3-2 제1차 지방이양 대상 삶의 질 향상 관련 주요 사업('20년 예산 기준)

부처	사업	규모(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4,387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1,268
	농업기반정비	1,788
	지역전략산업육성	221
해양수산부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174
환경부	상수도시설관리	3,526
행정안전부	소하천 정비	2,585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확충	782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산업기반	95
	지역문화행사지원	168
계		14,99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4

제4차 기본계획의 부문별 추진 과제

1. 보건·복지 부문

1.1. 여건 및 개선 방향

□ 농어촌 보건·복지 정책은 중요성에 비해 주민 체감도 저조

○ 농어촌 주민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 중 보건·복지 부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중요도에 비해 주민 만족도는 낮음(유은영 2018).

- 보건·복지 부문의 중요도가 삶의 질 7대 부문 중 1순위라고 응답한 비율은 29.0%로서, 2순위 경제활동·일자리 (21.6%) 및 3순위 정주생활기반(17.1%)보다 높게 나타남.
- 한편 도시 주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정주생활기반이 23.4%로 1순위, 보건·복지는 22.3%로 2순위로 나타남. 1순위와 2순위 차이는 1.1%p로, 그 차이가 미미함.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는 5.6점(10점 만점)으로 중요성에 비해 만족도가 낮으며,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 간 만족도 차이는 1.2점으로 타 부문에 비해 도·농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중요도에 비해 낮은 보건·복지 부문의 만족도를 고려할 때, 보건·복지 부문의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보건·복지 부문의 지속적 정책 개선과 계획 수립 방향은 ① 농어촌 취약 의료서비스 개선, ② 농어촌에 적합한 보육·육아 여건 마련, ③ 농어촌 돌봄시스템 체계 마련, ④ 농어촌 사회 안전망 내실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
- 농어촌의 응급의료·출산·정신건강 등의 일부 의료서비스는 특히 취약
- 농어촌 지역에서 응급의료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실정이며,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지 못함.
 - 농어촌 주민 중 지난 1년간 응급실을 이용한 비율은 12.9%이었고, 주된 교통수단은 개인차량으로 응답한 비율은 61.0%이었음. 응급실까지 편도 소요시간은 26.5분으로 도시지역보다 8.2분 길었음(농촌진흥청 2018).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에 대한 만족도 점수 평균은 2018년 5.5점으로 2017년(6.0) 대비 감소함(유은영 2018).
 - 응급실 자체가 없는 군 지역은 2019년 19개 군(23%)으로 집계됨.²⁾
- 농어촌 지역의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임신과 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2018년 5.1점으로 보건·복지 부문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음(유은영 2018).
 - 분만실이 없는 산부인과는 2017년 기준, 40개 시·군 중, 군 지역이 33개 지역으로 나타남(정도채 외 2017).

²⁾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요양기관 현황 정보

○ 농어업인의 농(어)작업 특성상 나타나는 질환과 농어촌 지역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만성 질환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시급함(국민건강보험 2015).

- 농작업 특성상 근골격계질환과 순환기계질환 유병률은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근골격계질환: 농업인 남자(60.8%); 여자(72.9%) > 일반인구 남자(43.6%); 여자(60.1%)

* 순환기계질환: 농업인 남자(44.8%); 여자(55.3%) > 일반인구 남자(36.5%); 여자(38.0%)

- 농어촌 지역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36.1%, 평균 유병일수는 10.6일이었음. 이는 도시 지역보다 10.4%p 높고, 1.6일이 많음.

○ 정신건강에 있어 농어촌 주민이 느끼는 우울감과 자살률은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치료기관은 매우 부족함(농촌진흥청 2018).

- ‘지난 1년 동안 2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슬프거나 공허하거나 우울하게 지낸 적이 있다’에 대하여 농어촌 2,480가구 중 9.7%가 그렇다고 응답함. 읍 지역은 11.4%, 면 지역은 8.3%로 나타나고,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느낌.

- 농어촌 자살 생각률은 6.9%로 도시지역(4.3%)보다 높게 나타남.

○ 농어촌의 응급의료취약지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함.

□ 농어촌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보육·육아 환경 조성이 중요

○ 삶의 질 정책을 통해 농어촌 보육 시설이 확대되어 왔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보육이 이루어지는 영유아 비율이 높고,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지원사업 이용 비율은 매우 낮음(농촌진흥청 2018).

- 농어촌 지역에서 부모가 돌보는 영유아 비율은 50.1%이었고, 도시지역보다 8.0%p 높음.

- 농어촌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지원사업 이용 비율은 0.1%이었음. 도시지역은 0.7%로 농어촌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도시에 비해 농어촌은 학원, 문화센터 등의 아동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며, 농번기나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영유아 보육·교육의 어려움은 학원, 문화센터 등 교육 인프라 부족이 가장 높았고(26.2%), 자녀 놀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 부족(19.3%), 야간 시간에 이용 가능한 자녀돌봄 시설 부족(16.2%) 순서로 나타남(농촌진흥청 2018).
- 2017년 기준 농어촌 지역에 입지한 공동아이돌봄센터는 32개소, 농번기 주말돌봄방은 19개소에 불과함.
- 특히 주민 만족도 측면에서 보면, 아동 양육·보호지원에 대한 농어촌 주민 만족도는 5.6점이었으나, 도시지역은 6.6점으로, 타 항목에 비해 도·농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유은영 2018).

□ 농어촌 돌봄시스템 체계 마련 필요

○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질병예방서비스, 질병치료서비스, 방문 요양 간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농어촌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8년 기준 105.5만 명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고, 농가 인구의 58.3%는 60세 이상임(통계청 2018).
- 농어촌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건강진단, 치매 조기 검진 등 '질병예방서비스'가 17.3%로 가장 높았고,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질병치료서비스'는 15.6%로 뒤를 이었음. 다음으로 '방문 요양 및 간호 서비스'는 12.0%이었음(농촌진흥청 2018).
- 농어촌 노인의 인지 저하자 비율은 15.1%로 도시 노인보다 0.9%p 높음. 게다가 독거노인 비율은 도시지역 대비 8.3%p 높은 28.8%이며, 만성질환 유병율도 90.8%로 매우 높음(정경희 외 2017).

○ 고령자들은 별도 시설보다 자택에서 돌봄 서비스 혜택을 희망하나 농어촌은 재택돌봄 서비스 관련 인프라가 부족함.

- 농촌 거주 노인 중 장애가 있으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은 17.9만 명으로 추정됨(정경희 외 2017).
-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한 농어촌 주민 만족도는 2018년 5.6점으로 2017년 5.8점보다 0.2점 하락하였으며, 타 항목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유은영 2018).
- 방문요양기관 개소수를 보면 시(市) 지역은 53.3개인 데 비해, 군 지역은 15.2개로 도·농 간 재택돌봄 서비스 인프라가 3배 이상 차이 남(정경희 외 2017).

○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의 손쉬운 정보 전달체계와 수요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함.

□ 농어촌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미흡

○ 농어촌 가구의 가계 위기에 대한 경제적 대비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재해 등에 대해 경제적 대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0%로 나타남(농촌진흥청 2018).
- 2015년 기준 도시가구 중위소득 이상인 농가비율이 50대 52.2%, 60대 31.3%, 70대 이상 11.1%로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커짐(통계청 2015).

○ 사회보험 가입 현황은 보험 종류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도시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농촌진흥청 2018).

- 농어촌 가구의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94.6%, 민영의료보험은 52.1%로, 도시지역 가입률(각각 98.1%, 65.6%)에 비해 낮음.
- 농어촌 연금보험 가입률은 공적 연금 56.5%, 개인연금은 25.6%이며, 도시지역 가입률은 각각 12.2%p 높은 68.7%, 8.7%p 높은 34.3%이었음.

- 농어촌 지역 주민 중, 60대와 70대 이상의 연령그룹에서는 특히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률이 저조함.

* 공적연금, 개인연금 가입률: (60대) 55.7%, 15.7% / (70대 이상) 44.6%, 4.7%

○ 농어촌 주민과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관련 지원 정책 인지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농촌진흥청 2018).

-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인지도는 농어촌 주민이 21.7%, 농어가는 43.6%이었음.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인지도는 농어촌 주민이 20.5%, 농어가는 41.0%이었음.
-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인지도는 농어촌 주민이 20.9%, 농어가는 41.2%이었음.

1.2. 세부과제: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주요 과제	1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 • 의료 취약지역 지원 확대 • 농어업인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2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인프라 조성 •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통합돌봄 확산 	
	3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보육·육아서비스 기반 강화 • 농어촌 보육서비스 환경 개선 	
	4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주민 사회보험 지원 강화 • 고령·취약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 농어업인 작업 안전 보장 	
성과 지표	성과목표		2020	2024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 주민건강센터 확충		110개소	250개소
	- 분만취약지 지원 건수 (잠재 분만 취약지 포함)		39개소	45개소
	- 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대상		2.5천 명	204천 명
농어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 농어촌형 돌봄 제공 시설 조성		2개소	6개소	
- 돌봄활동 추진 사회적 농업 운영 농장 지원		2개소	10개소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 농촌 공동아이돌봄지원센터 지원		49개소	70개소	
-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25개소	50개소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 농지연금 가입 건수		16천 건	32천 건	
-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65%	75%	

1.2.1.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은 의료 서비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임(농촌진흥청 2018).

*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응답률: 농어촌 10.7% > 도시 3.1%

○ 농어촌 지역은 응급의료·분만·소아 등의 진료 과목과 주민의 질병 예방·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함.

-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따르면, 응급실 부재 군 지역이 2017년 5개, 2018년 5개 군으로 보고되어 있지만,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요양기관 폐업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82개 군 중 63개 군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며, 19개 군(23%)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응급의료 취약지는 99개 시·군이며, 이 중 78개가 군 지역이며, 시 지역 응급의료 취약지도 대부분 농어촌에 해당하는 도·농복합시임(이태호 외 2018).

* 응급의료 취약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도달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지역이 30% 이상인 지자체

- 응급실 유지를 위한 기본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높은 응급실 유지 비용으로 인해 농어촌에서 응급실을 폐쇄하는 경향이 나타남.

- 출생아 수 감소, 의료사고 부담에 따른 산부인과 의사 감소로 농어촌 지역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줄어드는 추세임.

-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40개 지자체(2017년 12월 기준) 중 대부분이 군 지역(33개)으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감소함.

-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인 분만 취약지 98개 중 78개 지역이 군으로 농어촌이며, 분만 취약지가 이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이태호 외 2018).

○ 농어작업 특성상 농어촌 주민들에게 주로 발병하는 특징적 질환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 체계도 미흡함.

○ 농어촌의 만성질환 유병률, 유병일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주관적 건강인식은 도시에 비해 나쁜 것으로 나타남.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흡연, 고위험음주, 걷기실천율 등 건강행동 실천율과 건강검진 수진율은 도시에 비해 낮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농촌진흥청 2018)

* 만성질환 유병률: 도시 25.7%, 농어촌 36.1%, 평균 유병일 수 도시 9.0일, 농어촌 10.6일

* 주관적 건강 인식: “좋다”(도시 49.2%, 농어촌 46.9%), “나쁘다”(도시 12.0%, 농어촌 17.3%)

* 고위험음주율: 도시 12.9%, 농어촌 15.1%

○ 농어업작업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하기 위해 국가 차원 대책으로 농어업인 특수건강 진단을 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의 작업 특성상 허리, 무릎, 어깨, 손목 등에 인간공학적 부담, 농약과 온열 및 자외선에 노출, 농기계의 소음, 축사 등의 유기분진 등 여러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음.

-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암검진 및 일반건강검진을 통해 농어업인들에게 노출되는 다양한 유해요인에 따른 건강 영향을 평가하나, 농어업인에게서 흔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건강검진 수검률도 비농어업인에 비해 농어업인이 낮음.

○ 그동안 삶의 질 계획에서 의료취약지 해소 등 농어촌에서의 부족한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농어업인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보건·복지 부문의 4대 과제 중의 하나로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를 제시하고 세부과제로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역량강화,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사각 해소, 공공보건의료 시설·장비 현대화, 소외 보건서비스 강화를 제시함.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성과 지표로 제시된 ‘응급의료기관 부재 군 지역 목표 개수’, 주민체감 만족도 증진 성과 지표로 제시된 ‘전반적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등 세부사업별 목표는 대부분 달성된 것으로 나타남.

* 응급의료기관 부재: 2014년 12개 군 지역 → 2017년 4개 군 지역

* 농어촌 보건·복지 만족도(10점 척도): 2014년 5.69 → 2017년 5.8 (유은영 2018)

- 그러나 도시대비 농어촌 생활 만족도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 부문의 격차가 가장 두드러졌음.

* 보건의료 13.9점, 기초생활기반 11.3점, 교육여건 8.2점, 문화여가여건 6.4점, 경제활동여건 6.5점, 복지서비스 5.6점 (농촌진흥청 2018)

○ 농어촌 고령화,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도·농 간 건강불평등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여 건강투자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건강향상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 정책 방향

○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등을 활용한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제공체계 구축으로 의료 공공성 강화

- 복지사업의 경우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단위가 '읍면동'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보건의료사업은 시군구 단위의 보건소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 도시지역은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방문간호 등 보건사업도 통합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는 추세임.

- 농어촌의 경우 군 단위로 설치된 보건소 중심으로는 주민의 건강을 밀접하게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지역 내 보건-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등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사업 제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도시 보건지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 기능을 줄이고 건강증진사업 기능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나, 농어촌의 경우에는 기존 진료 기능을 유지하되 건강증진사업을 보다 강화하는 형태로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어촌에 대한 예방적 건강투자 강화

-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읍면 단위의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등에 대한 지원과 투자 강화가 필요함.
- 생활 SOC 확충 사업을 활용하여 농어촌 주민 건강 지원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가 필요함.

○ 농어촌에 대한 예방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관 간 연계 확대

-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서비스가 누락, 편중, 중복 없이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외에 농업 및 어업안전보건센터, 기타 복지기관 등과의 연계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의료 취약지역의 지원 확대

- 농어촌의 넓은 면적, 낮은 인구 밀도, 고령화, 저출산 기조와 낮은 의료 서비스 및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건이 고려되어야 함.
- 응급의료와 분만취약지 기준 지역이 균이기 때문에 먼 지역의 열악한 교통 상황을 반영하지 못함.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평가에서는 접근성 강화와 질적 수준 제고를 제언함.
- 전반적인 농어촌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응급의료 및 분만시설 확충 등 취약 자원에 대한 집중 투자로 취약 분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고려해야 함.
- 현 시점에서 시급한 응급의료와 분만지역 취약지 해소를 통한 농어촌 지역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이 적절하며,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이후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제고가 필요함.

○ 도·농간, 지역간 질적 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서비스 확보 및 현장 초동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인프라 구축 필요

○ 세계 응급의료체계 모델³⁾

1. 영-미 모델 (Anglo-American model: bring patient to ER)

- 이 모델의 특징은 병원 전 단계의 처치를 의사가 아닌 주로 응급구조사(EMT) 특히 전문응급구조사(paramedic)가 담당함. 따라서 의료지도가 중요시되며, 응급의학의사가 이들에 대해 직접 및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함.

2. 불-독 모델 (Franco-German model: bring ER to patients)

- 의사가 응급의료체계의 일원으로 참가하지만 경우에 따라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전문응급구조사가 처치를 제공하기도 함. 프랑스, 스페인, 남미 등에서는 의사들이 현장의 전화를 응급의료체계에 연결하는 전화상담원(dispatcher)역할을 하기도 함.

3. 네델란드 모델 (Holland model)

- 기본적으로 병원 전 처치를 간호사가 담당함. 구급차의 간호사는 미국의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와 비슷한 역할을 함. 전문간호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의사의 감독 없이도 모든 처치를 시행하도록 허용되어 있음.

4. 일본 모델 (Japanese model)

- 응급센터를 기반하는 모델로, 응급실보다 독립된 중환자실에 가까움. 매우 위중한 응급환자만 구급차를 통하여 응급센터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응급실에는 20~30개의 병상과 수술실, 중환자실, 심장검사실 등이 배치되어 있음. 핵심은 이런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는 표준화된 중증도분류(triage) 기준을 가지고 있음. 일본 전역에 150개 정도의 응급센터가 분포되어 있음.

□ 추진 과제

1)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공성 강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 지역간 필수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의 시설·장비 등 보강 지원(매년 40개소)

³⁾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https://www.e-gen.or.kr>)

- * 지방의료원(35개소), 적십자병원(6) 등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현대화, 기능 특성화 지원('05년 이후 계속)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필수 중증의료 기능(응급, 심뇌혈관)을 강화하고 지역 내 공급이 부족한 의료 분야에 특화하여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

○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지원

-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건소, 진료소 등의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농어촌 지역의 건강증진 사업 구현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또는 보건지소를 건강증진 기능 중심으로 개편 지원
 - * ('19) 75개소 → ('20) 110 → ('21) 180 → ('22) 250
- 보건소가 담당하던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주민건강센터로 조정·이관

2) 의료 취약지역 지원 확대

○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최소한의 응급실 인력기준 충족을 위해 공중보건의 배치, 간호사 파견, 전문 응급처치 교육·훈련 지원
- 응급의료 취약지(99개 지역)의 응급실 운영기관에 운영보조금 지원(연간 1.2~4억 원)을 통해 응급실 운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보상
 - * 환자수 및 의료 기관 평가 결과에 보조금 차등 지원
- 취약지 병원은 응급의학과 및 배후진료과 전문의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거점병원 응급실과 원격 협진 네트워크 운영
- 펌블런스(구급차 + 소방펌프차) 적재 구급 장비 및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구급차 미배치 농어촌 119지역대에 구급차 보강
 - * 농어촌 지역 구급대 배치계획(인력/차량): ('20) 177명/23대 → ('21) 178/24 → ('22)179/25

○ 분만 및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 취약지 해소 지원

-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장비비 등 지원
 - * 분만 취약지 지원: ('20) 37개소 → ('22) 38 → ('24) 39
- 출생아 감소 등으로 분만 산부인과 폐원 시 분만 취약지 전환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지원
 - * 잠재 분만 취약지 지원: ('20) 3개소 → ('22) 5 → ('24) 7
- 소아·청소년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않는 의료 취약지('19년 23개소)에 소아·청소년과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 소아청소년과 의료 취약지 지원: ('20) 8개소 → ('24) 12

○ 낙도·낙후 어촌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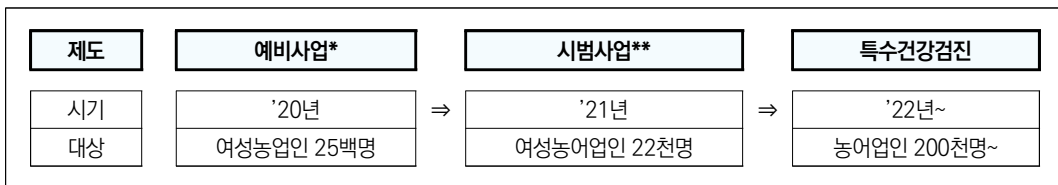
-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낙도·낙후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취약지역 거주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공

3) 농어업인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단계적 도입

-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특화 검진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농어업인 전체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로 확산·정착 추진('22~)

그림 4-1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시기 및 대상



* 안전보건센터(5개 농업, 3개 어업)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예비시행

** 시범사업을 전국의 여성농·어업인 대상으로 확대 추진

-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전국 도별 13개소로 확대하여 농어업인 특수 질병의 관리를 위한 거점으로 운영

*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 ('20) 8개소 → ('21) 10 → ('22) 13

○ 농어업인 정신건강관리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농어촌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사례관리, 재활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 관리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센터 설치 시군을 확대

1.2.2. 농어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농가의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체 농가의 약 절반 정도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

- 연령별 농가인구 중 70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74.5만 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35.2%를 차지
- 농어촌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8년 기준 103.5만 명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

○ 농어촌 지역 고령인구의 증가는 치매, 중풍 등의 외상노인의 증가를 수반함으로써 돌봄 수요의 증가를 초래

- 농어촌 지역의 높은 돌봄 수요에도 불구하고 복지자원은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 주민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취약한 상황

* 일상생활에서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수발률: 도시 20.2%, 농어촌 16.6% (정경희 외 2017)

-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돌봄시설이 대부분 인구가 많은 읍내에만 집중되어 있어 고령화가 심각한 면부 지역은 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평등 존재

표 4-1 치매노인 현황(인지 저하자 비율)

구분	지역		연령					배우자 유무		가구 형태			
	(도시) 동부	(농촌) 읍·면부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있음	없음	노인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평균	25.5	24.6	26.6	25.8	24.7	23.6	21.8	26	24	24.3	25.9	24.7	25.5
인지 저하자 비율	14.2	15.1	11.5	12.7	15.8	16	27.4	14.3	14.8	13	14.4	16.7	12.2

자료: 정경희 외(2017) 원자료 재분석

○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여 보다 능동적인 종합돌봄체계 구축 필요

- 농어촌 지역의 돌봄 수요와 고령화 정도에 따라 돌봄 인프라의 단계적 구축 방안 마련 필요
- 농어촌 돌봄체계를 ① 고령화 비율이 높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A 지역), ② 고령화 비율이 중간 정도이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B 지역), ③ 고령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돌봄 인프라가 다소 부족한 지역(C 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농촌 특성에 맞는 돌봄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필요

표 4-2 농어촌 지역 통합 돌봄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안)

고령화비율 돌봄인프라	10~15%	15%~20%	25%~30%	30% 이상	관련시설
돌봄시설(小)	• 돌봄시설 권역화	• 돌봄시설 확충	• 돌봄시설 확충 • 돌봄시설 다각화	• 돌봄시설 확충 • 돌봄시설 다각화	• 노인복지관 • 종합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 경로당 • 지역아동센터 • 청소년수련관 • 여성농업인센터 • 노인재가센터 • 보건소(의료원) • 노인요양시설 등
돌봄시설(中)	• 돌봄시설 권역화 • 돌봄시설 통합화 • 돌봄시설 특성화	• 돌봄시설 다각화 • 돌봄시설 통합화	• 돌봄시설 다각화 • 돌봄시설 확충	• 돌봄시설 다각화 • 돌봄시설 확충	
돌봄시설(大)	• 돌봄시설 다각화	• 돌봄시설 다각화 • 돌봄시설 특성화	• 돌봄시설 다각화 • 돌봄시설 통합화 • 돌봄시설 특성화	• 돌봄시설 다각화 • 돌봄시설 통합화 • 돌봄시설 특성화	

□ 정책 방향

○ 농어촌 지역 복지 자원의 특성과 고령화의 정도에 따른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방안 제시

- 농어촌 지역의 특성별 노인 및 아동 대상 맞춤형 돌봄 전달체계 수립 → 농어촌 지역

을 돌봄 수요와 돌봄 자원의 교차분석을 통해 유형화하고 각각의 농촌 돌봄 수요의 유형에 맞는 돌봄체계 수립

-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자원(복지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을 조정연계하여 마을단위까지 종합적인 방문형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농어촌 지역의 높은 복지수요를 연계조정하여 먼 지역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거점 통합돌봄안전망 구축

- 농어촌 취약계층인 치매노인,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 노인 등에게 적합한 돌봄 서비스 제공 방안 제시
- 농어촌을 생활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 단위 돌봄사업을 통합적으로 연계 조정할 수 있는 거점형 통합돌봄안전망 구축 방안 제시

○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어촌 청년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및 일자리 연계체계 구축

- 농어촌 청년 대상 사회서비스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한 고령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 농어촌 지역의 높은 사회서비스 수요를 청년 일자리와 연계하여 농어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견인
- 농어촌 지역 과소화 마을을 중심으로 청년복지위원 위촉을 통한 방문형 사회서비스 제공
- 농어촌 특화 자활기업 육성을 통한 농어촌 청장년층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창출

○ 농어촌 지역의 동·식물을 활용한 치유농장 육성을 통해 치매노인 및 발달장애인 방문형 돌봄서비스 제공

- 치매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생명 기반 치유농장 육성
- 치유농장과 사회적 기업의 연계를 통한 농촌 노인 및 장애인 돌봄·치유서비스 제공과 농어촌 청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연계

□ 추진 과제

1) 농어촌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인프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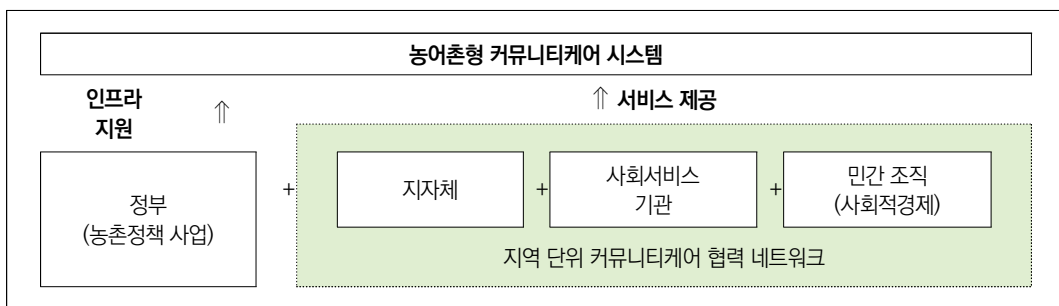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농어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조성

-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의 거점 조성 및 배후마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활용하여 방문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
 - *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독거 고령자 가구가 분산되어 있으나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시설·인력 등 인프라는 부족하여 기존 사업의 연계·확대 필요
-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특수 차량 도입, 보건복지센터 시설 확충을 위한 기존 시설 리모델링 등 지원
- 농촌 폐교, 노후 경로당·마을회관 등을 고령자 공동 생활홈 또는 주택으로 조성하고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
 - * 고령자 공동 시설과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연계

○ 지역 단위 커뮤니티케어 거버넌스 구축

- 지자체, 지역 사회서비스 기관, 민간 조직(사회적경제 조직·민간돌봄 기관 등) 등이 지역 단위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그림 4-2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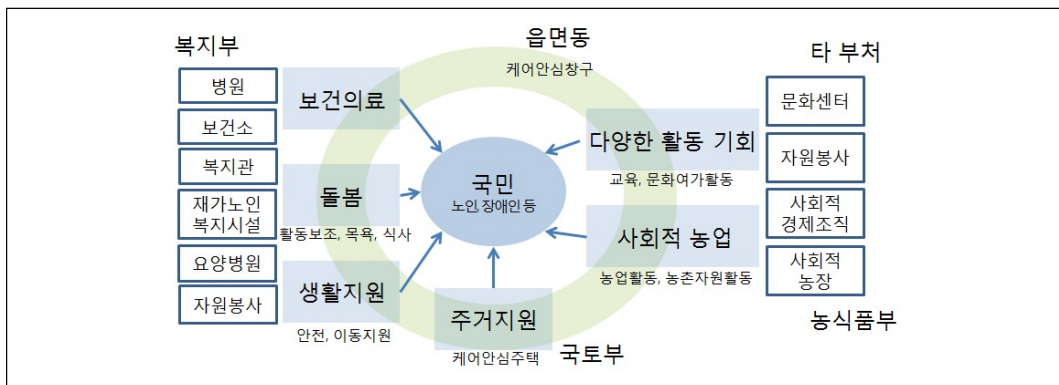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 농어촌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통합 돌봄 확산

○ 사회적 농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 내 사회적 농장의 농업활동에 참여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 농장도 ‘복지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의 지역자원으로 등록하여 관련 서비스 지원이 가능토록 연계

그림 4-3 농어촌 케어안심창구 복지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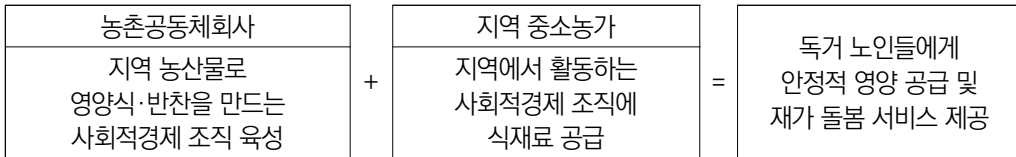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발굴·확산

-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자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지역 고령자 등에게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커뮤니티케어 제공 사회적 농장 예시〉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영양식·반찬배달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모델
- ① 지역 중소농은 판로 확보, ② 독거 고령자는 영양 제고, ③ 지역사회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1.2.3.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귀농, 귀촌, 다문화가정 증가 등의 이유로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인구 감소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에 대응한 육아환경 개선이 필요함.
- 2005년부터 2016년까지 0~4세 영유아 인구 변화율을 보면, 초기 5년간(2005년~2010년) 감소율(7.92%)보다 후기 5년간(2010~2016) 감소율(3.39%)이 4.53%p 만큼 낮아졌음.

표 4-3 2005, 2010, 2016년 농어촌 0~4세 영유아 인구 및 유지율

단위: 명, %

구분	지표	2005	2010	2016	유지율 (2005-2016)	유지율 (2005-2010)	유지율 (2010-2016)
농촌 (읍·면)	전체	414,343	381,532	368,592	88.96	92.08	96.61
	남자	215,686	196,594	189,017	87.64	91.15	96.15
	여자	198,657	184,938	179,575	90.39	93.09	97.10

주: 기준연도 대비 인구 수 유지 비율. 유지율(2005-2016)의 경우 2005년 영유아 인구 수 대비 2016년의 영유아 인구 수임.
 자료: 김은설 외(2018).

- 정부는 농어촌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농어촌 특화 영유아 돌봄 시설을 매년 확충하고 있음.

- * 국공립어린이집: 2016년 19개소 → 2017년 28
- * 2017년 공동아이돌봄센터 32개소, 농번기 주말돌봄방 19개소 지원

○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부모 수요 반영이 필요함.

- 농어촌 양육 환경 개선에 가장 필요한 요구 사항으로 기존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놀이·체험 공간 확충,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 등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 농어촌 주민들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교육 질 향상(읍 18.7%, 면 24.4%), 시간제 보육 확충(읍 11%, 면 13.3%), 놀이·체험 공간 확충(읍 19.8%, 면 13.3%) 요구 (이정원 외 2018)
- 농어업인이 다수인 면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제 보육 요구와 부모를 위한 지원 공간 확충 요구가 높음.
 - * 양육환경 개선 우선 필요사항으로 '부모지원 공간 확충'(면 지역 6.7%, 동 지역 2.5%), '시간제 보육 확충'(면 지역 13.3%, 동 지역 10.7%) (이정원 외 2018)

○ 농어촌의 특징적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가 부족함.

- 시간제 보육, 야간 연장 보육 및 초등돌봄 수요가 높으나 서비스 제공 시설 부족
 - * 어린이집 연간 휴원일 수: 대도시 14.17일, 농어촌 14.38일 (유해미 외 2018)
 - * 시간제 보육 운영시 반당 영아 수(대도시 3.5명, 농어촌 5.01명), 전담 보육교사 인원 수(대도시 1.18명, 농어촌 1.31명) (유해미 외 2018)
 - * 어린이도서관 서비스 공급률: 대도시 0.2% 군 0.06% (이정원 외 2018)
- 농어촌에서의 영유아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상대적 기회 박탈, 심리적 부담감 감소를 위한 지원 필요

□ 정책 방향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충

- 농어업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자녀 돌봄 시간이 불규칙하고 시기에 따라 장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
- 작업에 따라서는 요일과 무관하게 주말에 집중하여 일할 수도 있고 야간이나 새벽에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상황도 빈번함.
- 영유아나 초등 저학년을 둔 부모의 경우 새벽, 야간, 주말에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

나 일반적인 어린이집이나 방과후 돌봄은 이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있음.

- 한편으로는 조부모 동거 가구가 많아, 영아(만 0~2세)를 양육하는 경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시간제 보육 수요가 많음. 그러나 시간제 보육은 대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어 센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에서는 시간제 보육 이용이 어려움.
- 따라서, 농어업인의 육아 지원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별도 정책 추진이 필요함.

○ 농어촌 보육 서비스 질 제고

- 농어촌에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가진 우려 중 하나는 그들 자녀가 도시지역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에 비해 질적으로 낮은 환경에 처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임.
- 자녀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주지 못하고 문화적 자극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농촌 사회환경을 아쉬워 함.
- 농어촌 어린이집이나 공동아이돌봄센터 등에서는 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필요한 적격자를 선발치 못하고 있음.
- 보육의 질 제고 측면에서 농어촌에서도 능력 있는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좋은 근무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농어촌 영유아의 문화적·학습적 체험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함.

표 4-4 농어촌 어린이집 교사 채용 시 어려움 단위: %, (개소)

구분	교사채용 어려움 유무				채용에서 가장 어려운 점						
	있음	없음	계(사례수)	$\chi^2(df)$	지원자 부족	적격자 부족	바른 사직	기타	계(사례수)	$\chi^2(df)$	
어린이집전체	60.2	39.8	100.0(631)		46.8	37.6	9.5	6.1	100.0(380)		
지역 규모				15.8(2)***						85.3(6)***	
읍면	71.4	28.6	100.0(203)		23.4	64.1	4.8	7.6	100.0(145)		
대도시	55.7	44.3	100.0(228)		69.3	15.7	11.8	3.1	100.0(127)		
중소도시	54.0	46.0	100.0(200)		51.9	27.8	13.0	7.4	100.0(108)		

자료: 김은설 외(2015). 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p < .001

○ 행복한 육아를 위한 영유아 부모 지원

- 농어촌에서 육아를 하면서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고립감이나 육아 스트레스, 육아 정보에 대한 갈증 등 양육 부담과 심리적 불안감을 치유하고 해소할 수 있는 육아 공유 공간을 마련함.
-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역사회 차원에서 '0123육아광장'이라는 공립 공간을 마련하여 부모와 영아가 함께 와서 놀이하고, 다른 부모와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간헐적으로 개최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함. 도시지역에서는 이러한 공간으로 사립업체시설인 키즈카페가 있어 일부 양육 지원 역할을 하고 있음.
- 도시지역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부모 교육, 장난감 대여,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용이하나 농어촌은 이러한 지원이 부족함.
- 문화 체험 측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농어촌 영유아 부모의 상황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고안하고 제공함.

□ 추진 과제

1) 농어촌 보육·육아서비스 기반 강화

○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보육 수요가 있으나, 보육시설 미설치 또는 부족한 농어촌 지역 읍·면을 중심으로 거점형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 매년 30개소 이상 확충하되, 생활SOC 사업으로 복합화시 보조율 인상

○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 장거리 통학 차량 운영이 불가피한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원격지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편의 제고

* 매년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에 8,000대 규모의 차량 운영비 지원

○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 돌봄시설이 없는 읍·면에 3인~20인 이하의 소규모 국공립 돌봄시설(농어촌공동아이 돌봄센터)을 설치·운영토록 지원
- 주거지 인근에 돌봄시설이 없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영유아에게 근거리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20) 49개 → ('21) 55 → ('22) 60 → ('23) 65 → ('24) 70
- 주말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토록 지원
- 파종기·수확기 등 주말에도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농번기 동안 주말에도 돌봄방을 운영하여 농어촌 보육 가정의 보육 부담 완화
 - *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20) 25개 → ('21) 35 → ('22) 40 → ('23) 45 → ('24) 50

2) 농어촌 지역 보육·육아 환경 개선

○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 제공

- 기존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을 장난감 도서관 사업과 연계, '찾아가는 서비스'로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 보육서비스 접근성 향상
 - *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20) 7개 → ('22) 8개 → ('24) 9개
 - * (기존) 놀이서비스를 통해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보육서비스 제공 → (확대) 장난감도서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장난감·도서 대여' 사업으로 확대
- '찾아가는 체험교실' 운영으로 농어촌 영유아의 체험학습 기회 확대
- '찾아가는 숲교육(산림청)',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문체부)' 대상 선정 시 농어촌 영유아에 우선 순위 부여
 - * 유아숲체험원 지원: ('20) 63개 → ('21) 64 → ('22) 65 → ('23) 66 → ('24) 67

○ 농어촌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의 지속 유입 및 근무 유도를 위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20: 11만 원 → '21: 12.5)
 - *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단가가 '12년 이후 11만 원으로 동결

- 연장반(오후 4시~7시 반) 운영 시 연장 보육시간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 * 연장 보육 전담교사 1인당 월 111만 2,000원 지원 (담임수당 11만 원 포함)

○ 농어촌 지역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제공

- 아이돌보미 파견 대상을 개인·보육시설에서 농어촌 지역은 마을회관까지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마을 단위의 돌봄서비스 제공
-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1:1 방문 보육지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이돌보미 수혜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마을회관 등 공동 시설 활용
 - * 파견 대상: (현재) 개인, 보육·복지시설 → (확대) 농어촌 지역 마을회관 등

1.2.4.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 선진국 수준의 외형적 틀을 갖추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안전망은 농어업의 산업적 특성(계절성, 자연조건의 절대적 영향 등)이나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취약한 인프라, 산재되어 있는 수요자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실정임.

- 국민건강보험 이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음(농촌진흥청 2018).
- 5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가입률은 아주 낮음(국회입법조사처 2019).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률(2018년): 5톤 미만은 18.6%, 5톤 이상은 90.1%

*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률(2018년): 5톤 미만은 18.6%, 5톤 이상은 71.1%

○ 농어촌 사회안전망 관련 정책에 대한 농어촌 주민 및 농어가의 만족도는 대체로 낮음(농촌진흥청 2018).

- 농어촌 주민의 '사회안전망 이용 종합 만족도'는 평균 66.4점(100점 만점)으로 '약간 만족하는 수준'임.
 - 제도별 만족도(평균)는 기초연금이 69.0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이 67.2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이 64.8점,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가 64.6점으로 나타남.
- 농어촌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소득 지원 서비스'(14.9%), '문화·여가 향유 지원 서비스'(11.2%),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9.8%) 순으로 나타남(농촌진흥청 2018).
- 인구 감소와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사회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주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해야 할 것임.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는 취약계층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사업이 중심이었으나,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는 사회안전망 지원 및 목표의 대상층을 전체 농어촌 주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방향

- 농어촌 주민 사회안전망 강화
 - 농어촌 사회보험 지원 확대
 - 사회보험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 강화
- 농어촌 취약 계층 지원 강화
 - 고령 농업인 농지연금 가입 확대
 - 여성 농어업인 복지 증진
- 농어업인 작업 안전 보장

-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⁴⁾의 개선
- 농어업인 안전재해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추진 과제

1) 농어촌 주민 사회보험 지원 강화

○ 농어업인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실효성 확보

-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현행 97만 원 수준)을 농어업인 평균소득월액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 * 국민연금가입 농어업인 평균소득월액: '15) 104만 원 → '17) 109 → '18) 111
 - *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기준 소득금액(월): '19) 97만 원 → '21) 100
-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가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외 기준을 소득만이 아닌 '재산'까지 포함

농어업인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개정 방안(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 현재 기준: ① 농어업소득이 농어업외소득보다 더 많고, ② 연간 농어업외소득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미만인 농어업인
 - * '19년 기준: '18년 평균소득월액(241만 원) × 12배 = 2,895만 원
- 변경(안): '종합소득 및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자' 포함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가입자에게 최대 28% 지원('24년까지 연평균 325천 세대 지원 예정)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미신청자에 대한 안내·홍보를 통한 지원 확대 및 부정수급자 지원 배제

4) 농업인 안전재해 관련 보험제도는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이 있음.

2) 노령 및 취약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 고령 농업인의 가입 확대 및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농지연금 내실화

- 농지연금 가입률을 제고하여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 지원
 - * 농지연금 가입 목표(누적): ('19) 14천 건 → ('24) 32천 건
- 가입 대상(65세 이상 농업인) 1:1 면담 및 안내문 발송, 연금제도 개선 내용 홍보 영상물 제작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 동시 추진
- 농지연금 수급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농지기금법 개정)
- 연금수급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근거를 신설하고, 전용계좌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

○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을 통한 고령 농어촌 주민의 소득 보장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
- 보조금 지급단가 차등화를 통한 매도이양 중심의 사업 추진 지속
 - * (~'17) 매도·임대 동일 300만 원/ha → ('18~) 매도 330만 원/ha, 임대 250만 원/ha

○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 복지 환경 조성

- 여성농어업인의 출산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출산으로 인한 부담 경감 혜택 확대(농업인 또는 공동경영주 등록 유도)
 -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여성농어업인도 출산급여 수급(월 50만 원씩 3개월 지급) 대상에 포함('19.7~)되었는바, 농업인이나 공동경영주 등록 필요
- 생애주기별 복지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 및 직업역량 강화 방안 마련
 - * 농촌형 모성보호 제도 현황·요구 분석, 농촌형 보육서비스 모델과 직업적 복지 제도 등 개발, 여성농업인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 등 맞춤형 해결방안 모색

3) 농어업인 작업 안전 보장

○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 및 지원 방안 개선

-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을 확대하여 농어가 경영안정 강화
 -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8) 63.3% → ('22) 70% → ('24) 75%
 - *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8) 47.4% → ('22) 52% → ('24) 55.6%
- '배우자 함께 가입하기 캠페인', '농업에 특화된 산재형 보상서비스 도입' 등 여성농어업인, 비조합원, 농어업근로자 가입 확대 방안 마련
- 농가 경영주가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90일 이상 농업 종사 근로자도 '농업인 안전보험' 국고 지원 대상으로 지정
 - * 국고 지원 자격 개정(사업시행지침) 및 근로자인 농업인 보험 가입 현황 통계 생산
- (현행)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 (개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무급가족종사자, 국내·외근로자 포함)
 - * 근로자 안전사고 시 경영주 배상 책임 원칙을 강조하여 가입 독려 병행

○ 어선원·어선 재해 보상 보험 개선

- 현재 3톤 어선 이상으로 되어 있는 당연가입 기준을 확대하여 영세·소형 어선에 고용된 선원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
 - * 3톤 미만 어선원보험 가입률: ('18)8.5% → ('21)11.0 → ('24)12.5
 - * 어업재해율: ('15) 5.56% → ('20) 4.0 → ('24년) 2.8
- 장애 어선원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목적에 재활 규정 신설 및 의료재활 지원 규정 마련
 - * 의료재활급여 신청자: ('18) 176명 → ('21) 200 → ('24) 226

○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예방관리 기반 조성 및 예방사업 확대

- 농업인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통계 조사 확대 및 농업인 건강안전 관련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해 업무상 재해 예방관리 강화
 - * 빅데이터 구축: ('20) 2종(업무상 재해조사, 농업안전보건센터자료) → ('24) 5종

- 농작업 편이장비 및 개인보호구, 작업환경 개선기술 및 농작업 현장 위험요인 평가·예방조치 방안 등 개발·실용화 추진
 - * 농업작업 및 농촌생활의 편이·안전 증진기술 개발(매년 3종)
 - * 작목별 농업노동환경 위험도 DB 구축: ('20) 10작목 → ('24) 34
- 농업인 안전재해예방 교육 확대(전문인력 양성) 및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 등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전국 확대 추진
 - * 농업인 안전 재해예방 교육 목표: ('20) 10만명 → ('24) 50만명
 - *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20) 76개소 → ('24) 2,000
 - * 안전반사판 지원대상: ('20) 370개 마을(15,000대) → ('24) 570개 마을(21,000)

○ 어업인의 업무상 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

- 어작업 환경·장비 개선 추진 및 민관 협업을 통한 수난구호 확대
- 응급구호장비 및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개발·보급, 어작업 환경·장비 개선 및 어선 현대화 연계 추진
 - * (응급구호장비) 심장제세동기(AED), 응급구호 KIT 등 (개인보호장비) 어업용 헬멧, 어선어업 투망 시 추락방지용 벨트, 어업용 장갑 및 작업화 등
-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 조직 통합을 통한 수난 구호 활동 효율화 및 구조대원 자격 강화
 - *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수색구조, 구난 기술에 관한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며 '민간해양구조대'는 해양 사고 시 실종자 수색, 조난선박 예인 등 해경 구조 업무 지원
 - * 민간해양구조대원 수색구조 교육과정(연 10시간 이수 의무) 신설 운영(해경)
- 어선사고 예방 및 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형 영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 지원
 - * '24년까지 VHF-DSC 1,235대, V-PASS 700대, 자동소화설비 227대 등 지원

2. 교육·문화 부문

2.1. 여건 및 개선 방향

□ 농어촌의 교육 여건은 도시에 비해 크게 열악

○ 학교 교육 및 방과 후 교육 여건은 도·농 간 격차가 여전히 크며, 주민 만족도 또한 도시에 비해 낮음(농촌진흥청 2018).

-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농어촌 시·군 비율은 60.2%이며, 농어촌서비스기준 하위지역 일수록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함.

* 지역 유형별 통학시간(분, 일반/서비스기준 하위지역): 초등(9.6/10.1), 중등(14.8/18.4), 고등(21.6/29.2)

- 농어촌 주민의 교육 만족도는 도시 주민에 비해 0.8점 낮은 5.5점에 불과하며, 이주를 희망하는 농어촌 주민 중 40대의 경우 1순위가 자녀 교육 사유(24.2%)인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 응답자 연령별 교육 여건 만족도: 30대 이하 51.7점, 40대 44.5점, 50대 50점 / 도시민 57.7점

- 농어촌 학생들은 방과 후 시간을 '집에서 가족과 있거나 혼자 보낸다'는 응답 비율이 도시 대비 두 배 이상 높음.

*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 면/읍/도시): 학교 내 방과 후 프로그램(35.0/21.9/17.8), 집에서 가족과 보냄(12.0/14.7/1.9) 혼자 보냄(7.9/2.7/2.2)

-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27,1%)',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21.7%)' 등의 정책 수요가 있음.

○ (개선 방향) 농어촌 여건을 고려한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속가능한 지역자원 연계형 교육 활성화

- 주민 참여형 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마을 교육 공동체에 적극 지원

- 농어촌 교통 모델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의 통학수단 지원

□ 인프라 부족이 농어촌 평생교육 활성화를 제약

○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경험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기반과 접근성이 여전히 열악한 실정임.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점차 감소(농촌진흥청 2018)
 - * 평생교육 경험률: '15년 21.9%, '18년 17.0%
- 농어촌 주민들은 거동과 이동이 불편하여 평생교육 참여가 어려운 비율(14.2%)이 도시보다 높으며, 읍(7.8%)보다 면(19.2%) 지역이 더욱 심각(농촌진흥청 2018)
- 지역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시설이 없어 평생교육에 참여하기 힘든 비율이 도시에 비해 2.3배 높으며 특히 면지역은 그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김용욱 외 2018).
 - * 지역 내 평생교육 제공 시설이 부재: 읍 4.7%, 면 8.5%, 도시 3.8%
 - * 평생교육시설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지역은 138개 시·군 중 16.7%만 해당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농어촌 주민은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잠재적인 수요 비율도 높음.

- 농어촌 주민은 평생교육 중 문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으나 문해교육을 경험하는 비율(0.7%)은 극히 낮은 상황
 - * 문해교육 만족도 도·농 비교: 농어촌 76.5점, 도시 65.9점(농촌진흥청 2018)
- 농어촌은 비문해자(1단계) 비율과 무학·저학력자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음.
 - * 비문해자 비율: 대도시 5.7%, 농산어촌 16.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 * 중학교 졸업 미만의 노인 비율: 도시 46.8%, 농촌 71.9% (통계청 2015)

○ (개선 방향)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 연계를 통한 접근성 제고로 평생학습 활성화

- 지역의 유휴 시설(폐교, 공동 시설) 등을 활용한 평생교육 시설 확충
- 주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면 단위 평생학습시설 운영과 함께 농어촌 교통모델과 연계한 다양한 방식의 교통편 제공
- 농어촌 주민의 수요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전문 인력 육성으로 전문성 보강

□ 농어촌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은 여전히 미흡

○ 수도권과 대도시 및 인근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은 문화·여가 인프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함.

-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지역에 비해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과 이동 불편을 문화·여가 활동의 문제점으로 제시(농촌진흥청 2018)

* 농어촌 주민 문화·여가 활동시 어려움: '시설 부족'(농어촌 8.0%, 도시 3.2%), '이동 불편'(농어촌 4.9%, 도시 1.1%), '프로그램 부족'(농어촌 3.2%, 도시 2.6%)

- 문화·여가 기반시설이 설치·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시군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 대도시에서 인프라가 집중(문화체육관광부 2018)

* 문화기반시설분포 현황: '공공도서관'(전국 5.9개, 대도시 44.3개, 군 지역 2.2개), '문예회관'(대도시 8.6개, 군 지역 0.9개)

○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여전히 저조함.

- 농어촌 주민의 문화·여가 부문 정주만족도는 5.4점으로 가장 저조한 부문에 해당하며, 특히 30대 이하, 70대 이상 주민들의 문화·여가활동 만족도가 낮음(유은영 2018).

* 30대 이하 22.5%, 40대 24.4%, 50대 26.4%, 60대 29.1%, 70대 이상 21.7%

- 복지실태조사 결과, 젊은층일수록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문화·여가 향유 지원 서비스를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30대 이하 18.7%, 40대 15.7%, 50대 10.2%, 60대 10.5%, 70대 이상 3.3%

- 2018년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문화·여가 서비스 지원 확대에 대한 수요가 7.8점으로 높게 나타남.

○ (개선 방향) 농어촌의 실정 및 특성에 맞는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 개발, 인적 기반 조성 등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

- 공연예술, 전시,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휴 시설의 리모델링과 신규 시설의 기능 복합화 필요

- 농어촌형 문화·여가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농촌 주민의 자발적 문화·여가 활동조직 육성 및 이들을 통한 문화·여가 기회 확대

□ 지역의 전통·향토 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활문화 육성 필요

○ 농어촌 주민이 고령화되면서 지역의 고유한 전통·향토 문화가 사라져가는 실정임.

- 현재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의 보전과 수요, 전수자 양성 등을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대다수를 차지(송미령 외 2018b)

* 우리 지역에 즐길 만한 전통문화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72.7%), 전통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77.6%)

- 농어촌 주민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여가 활동 참여율은 10% 미만으로 매우 저조(농촌진흥청 2018)

* 전통예술 2.5%, 전통의식주 1.4%, 공동체의례 1.1%, 공동체놀이 2.7%, 전통놀이 8.7%

- 제3차 기본계획 기간의 전통문화 전승·활용 정책은 계속 예산이 축소되거나 지역별 문화관광 축제나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에 편중(송미령 외 2018b)

* 2015년 대비 '18년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 사업 예산 47.4%,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 예산 74.3% 축소

○ 지역의 전통·향토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 인력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전통문화 교육 기회 확대(20.5%), 전통문화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14.4%), 관련 전문가 육성(11.9%) 등에 대한 높은 수요(송미령 외 2018b)

○ (개선 방향)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정책 사업 중 생활 문화 및 전통문화 관련 정책을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확대하여 포함해야 함.

-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 문화 유산을 독창적인 교육콘텐츠로 개발하여, 주민들이 접할 기회를 늘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제고
- 지역 문화에 대한 지식과 활용 능력 등을 갖춘 매개인력(로컬문화가이드)을 양성하여 전통 문화 저변 확대

2.2. 세부과제: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주요 과제	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학생 교육 복지 증진 • 농산어촌 환경을 고려한 교육 제공 • 지역내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도·농간 교육교류 확대 			
	2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성과 지표	3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 소외지역 문화·여가 지원 강화 			
	4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문화 공동체 활성화 • 향토 문화자원 활용 생활문화 육성 			
성과목표			2020	2024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 농어촌 초·중·고 통학버스 지원 - 청년층 농어업 분야 진출 장학금 지원			2,983대 815명	3,027대 1,050명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 노인 문해교육 공동체 운영 -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설			20개소 1,680개	100개소 1,888개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기반 구축 - 농어촌 공공·작은도서관 건립 - 농어촌 지역 체육공간 지원 건수			30개소 100개소	150개소 120개소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활동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건수[누적] -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건수[누적]			40개소 5개소	200개소 50개소

2.2.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제공 노력 부족

- 농어촌 학교 통·폐합 가속화로 통학 여건이 악화되고 농어촌 출신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가 축소되는 등 농어촌 학생 교육 복지 저하
 - *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 미준수 학과 현황(의학계열): ('17) 10개 → ('18) 8 → ('19) 13 (교육부 각 연도)
- 지리적·문화적 여건이 불리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되는 농어촌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 충족에 한계 노출
 - * 방과 후 학생교육 만족도: 도시 6.5, 농어촌 5.7 (유은영 2018)
- 농어촌 학생 수 감소로 복식학급을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하는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 초등학교 복식학급 현황: 복식학급 788학급 중 734학급(93.1%)이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에서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2018)

□ 정책 방향

○ 농어촌 학교 지원을 선별적 방식에서 보편적 방식으로 전환

- 선별적 농어촌 학교 지원은 선정되지 못하는 학교의 교육 환경을 상대적으로 황폐화시키는 결과 초래
- 농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전원학교 모델을 농어촌 지역에서 확산 추진
 - * 기초안전망, 기초학습, 문화·예술·체육, 사회성, 심리·정서 등 차원에서 교육복지 관점 필요
 - * 농어촌 지역자산을 활용한 생태중심 교육, 자연친화적 교육 활성화 추진

□ 추진 과제

1) 농어촌 학생 교육 복지 증진

○ 농어촌 통학여건 개선

- 학생별 통학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통학 수단 제공 확대

-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선 공유형 통학버스(에듀버스) 및 통학 택시비 지원 등 확대
 - * 농어촌 초·중·고 통학버스 지원: ('19) 2,973대 → ('20) 2,983 → ('24) 3,027
- 시·도교육청별 농어촌 학교 통학 지원 현황 조사 및 통학여건 개선 우수 사례 발굴·확산

〈사례〉 강원교육희망재단 ‘꽃님이 통학 프로젝트’

-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하교 시각의 차이에 따른 통학버스 이용 불편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통학 버스(강원도 에듀버스) 이용이 어렵고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원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통학택시’ 혹은 ‘교통전용카드’를 지원

○ 농어촌 취약계층 학생(다문화학생) 지원

-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 학급 및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 * 한국어 학급 수: ('19) 50학급 → ('20) 55 → ('21) 60 → ('22) 65 → ('23) 70
- 대학 멘토링(대학생 멘토와 다문화학생 매칭) 사업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
 - * 대학생 멘토링 일정비율을 농어촌에 할당하고 비중을 지속적 확대
 - ('19) 10% → ('20) 12 → ('21) 14 → ('22) 16 → ('23) 18
- 농어촌 학생 대학 진학 기회 확대 및 도시 거주 지원
-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 학생 등 기회균형 선발전형(고른기회 선발) 관련 지표 활용
 - * 정원 내·외 고른기회 선발 규모의 적절성(10), 고른기회 전형 선발과정의 합리성·공정성(5)
-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에 정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대학의 의·약학 계열 학과의 지역 인재 선발 의무화 추진
 - * 지방대학의 의·약학 계열 학과 입학자 중 해당지역 고교 졸업생을 일정 비율(제주·강원 15%, 기타지역 30%) 이상 의무 선발하도록 지방대육성법 개정 추진
- 농어촌 출신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 지원 방식의 ‘농어촌 출신 대학생 기숙사’ 건립 추진
 - * 부지가 확보된 지역부터 우선적 건립 ('20년, 부산)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농업인 자녀 및 농수산업후계 인력 장학금 지원

-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 소득분위 조정을 통해 저소득 농업인 자녀에 대해 장학금 중점 지원 추진

* 현 소득구간 기준(0~8분위)을 0~6분위로 조정하여 저소득 농업인 자녀 수혜 확대

- 청년층 농어업 분야 진출 효과 제고를 위해 비농대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장학금 지원 확대

* ('19) 학기당 515명 → ('20) 815 → ('21) 830 → ('21 이후) 1,050

○ 학교 시설 및 관사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 도서·벽지학교 등 노후된 학교 시설·관사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 교육 여건 조성

* 노후건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해 준공 시점부터 40년 경과 이후 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 정밀안전점검 대상 학교(총 3,845개교): ('20) 1,112교 → ('21) 876 → ('22) 781 → ('23) 786 → ('24) 290

2) 농어촌 환경을 고려한 교육 서비스 제공

○ ICT 기반 학습활동 지원

- 농어촌 지역의 낮은 접근성을 고려한 ICT 활용 학습활동 지원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프로젝트 활동 등 ICT기반 개별화 수업·학습 지원을 위한 학교 내 무선망(AP) 구축

*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492교(전체 672교 중 기 구축 180교 제외)에 교당 최대 6백만 원 지원

- 농어촌 학교 온라인 화상교실 구축 지원

- 도서·벽지 극소규모학교에 온라인 화상교실을 구축하여 공동교육과정 시범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대안적 수업 모델 개발

* 도서·벽지 학교가 많은 인천·전남·경북교육청과 연계하여 쌍방향 화상교실 구축(17교실) 및 학교 간 협력교육활동 운영 지원

○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운영 지원

- 지역 및 학교 간 연계를 통한 농어촌 학교 교육프로그램 특색화
- 농어촌의 강점을 반영한 교육과정 특색화 및 지역기관·농어촌 단체·마을 등과 연계한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 *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지원: ('20) 957교, 121.7억 원 → ('21) 988, 126.4
-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를 통한 농어촌 학교 특성화 지원
- 농어촌 작은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기능 강화 및 지역과 학교 실정에 적합한 학교교육 특성화 지원
 - * 농어촌 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9청): ('20) 27억 원 → ('21) 54(누적)

<농어촌 학교 교육프로그램 특색화 유형>

- 농어촌 지역 여건(산업, 문화, 생태, 예술, 관광, 환경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 기관(아동센터, 복지, 문화예술단체, 공공기관 등) 및 농어촌 단체, 마을교육공동체 등과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부모 등 지역 주민이 학생과 함께 참여(수강, 재능 기부)하여 단위 학교가 마을과 함께하는 개방형 특색프로그램 운영

○ 농어촌 학교의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 소규모 고등학교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 여건 확보를 위한 교원 및 인프라 집중 지원 등 추진
 - * 농산어촌 중심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24, 총 304억 원): 소수 선택과목 등 개설
- 농어촌 등 교육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간 심화교과 및 진로·진학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 농어촌 방과 후 학교 내실화

-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지원 및 거점형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통한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유도

*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액(보통교부금, 누적: '20) 779억 원 → '24) 3,947

* (초등) 예체능 중심의 특기적성 및 문화예술적 감수성 신장 프로그램 운영, (중·고) 학교별 자유학기제 및 동아리와 연계한 진로적성 신장 프로그램 발굴·운영

- 마을과 연계한 학교 안팎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 및 대학생 교육기부 연계 프로그램(재능 심화·방학 중 동아리 활동) 운영 지원

* 희망사다리프로젝트, 교육기부(대학동아리) 등과 연계하여 농어촌 지역의 수학, 과학, 예체능에 재능 있는 학생 대상 심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

- 도서·벽지 및 농어촌 소재 학생들의 진로체험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원격 진로 특강·상담·멘토링 제공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20) 1,200회 → '22) 1,400 → '24) 1,600

○ 농어촌 학교 원어민 장학생 배치

-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농어촌 초등학교 등에 원어민 장학생 점진적 배치 확대

* 원어민 장학생 배치 규모: '20) 252명 → '21) 260 → '22) 265 → '23) 270

3) 지역 내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도·농 간 교육교류 확대

○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과 연계한 교육활동 활성화

- 마을교육공동체 및 지역 기관(아동센터, 복지·문화예술단체, 공공기관 등), 농어촌 단체 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도시학교와 대비하여 청정 자연환경과 전통 문화가 공존하는 농어촌 지역의 강점 및 마을과 지역이 보유한 자원 활용

- 학교와 지역 간의 긴밀한 연계 교육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학교와 지역의 상생 발전 기반 조성

* '19년 공모로 선정된 9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3년간('19~'21) 매년 3억 원 지원

- 농어촌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강사 육성, 마을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추진

○ 혁신교육지구 활성화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우수사례 확산

-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교육공동체로서 혁신교육지구 활성화 지원

- 학교와 지역사회 협업시스템 구축 지원 및 제도 정비 추진

* '24년까지 총 44개 농어촌 혁신교육지구 추진

○ 도농간 교류 확대 및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유학 지원

- 1군 1농촌유학센터 운영 및 농촌인성학교 등 연계 가능한 자원 활용('19, 27개 → '24, 40개)

- 농촌유학 지원비를 활용하여 시설 개선 강화(지원금 중 10% 이상 시설 개선 활용 의무) 및 유학종사자 교육과정 운영

- 농촌유학 우수센터 인증제 시범도입('20~)

2.2.2.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도 적절한 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미흡

- 도시 대비 높은 비문해 비율을 고려하여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대한 문해교육 지원 활성화 필요

*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노인 비율: 도시 5.3% < 농촌 15.9% (통계청 2015)

* 비문해 비율: 서울 및 광역시 4.8%, 중소도시 5.5%, 농산어촌 2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시설 등 인프라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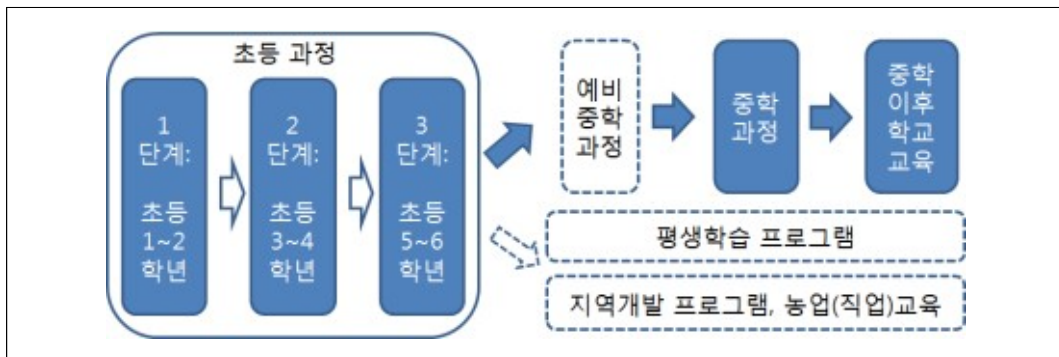
* 거동 및 이동 불편으로 평생교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 읍 7.8% < 면 19.2% (농촌진흥청 2018)

□ 정책 방향

○ 향후 성년 및 노인 대상 평생교육은 문해교육을 기반으로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과 다양한 분야로 연결·확대

- 문자해득, 기능문해 등 다양한 분야의 문해력 향상 평생교육 체제 구축
- 본인이 원하면 나이가 들었어도 중등 이후 학교교육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 체제로 연계하고, 그리고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 농업(직업)교육의 참여로 연계

그림 4-4 문해교육과 평생학습 연계



자료: 마상진 외 (2018)

□ 추진 과제

1) 농어촌 성인문해 교육 활성화

○ 농어촌 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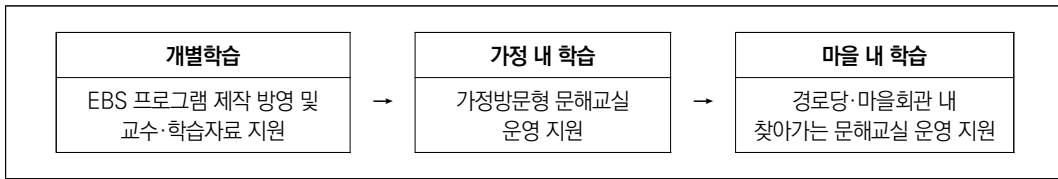
- 경로당 및 마을회관 내 찾아가는 문해교실 및 교육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한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등 지원
- 농어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 문해교육 공동체 운영 확대
 - * 농어촌 노인 문해교육 공동체: (‘20) 20개소 → (‘24) 100
- 학교시설·경로당·마을회관 등 지역기관을 지역주민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하는 주민 교육·편의공간으로 활용

○ 개별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 EBS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작·방영, EBS 프로그램 학습 보조자료 및 초·중학 단계별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등

*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설 수: ('19) 1,600개 → ('20) 1,680 → ('21) 1,730 → ('22) 1,780 → ('23) 1,833 → ('24) 1,888

그림 4-5 농어촌 학습자 유형별 문해교육 지원방안



2)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농어촌 지역 평생교육 기반 확충

-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특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농어촌 평생학습도시 운영: ('20) 47개 → ('22) 48개 → ('24) 49개

*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도입을 통해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내실화 유도(지정 후 만 4년이 경과한 평생 학습도시를 대상으로 도 산하의 군은 '22년부터 평가)

○ 농어촌 인구 구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문화 예술 교육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 세대별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20) 47개 → ('22) 48

- 농어업인 대상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추진하고, 농어촌 지역 양성 평등 전문인력 육성

-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평등 정책 등을 주제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여성농업인 양성 평등 전문강사 육성 추진

〈사례〉 영월다운, 온마을 배움터(강원 영월)

- (목적) 산악지역, 탄광촌 폐광, 고령화율 25%, 아동 및 청소년 비율이 낮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인문학적 도시재생을 통해 정주의식 및 지역 가치 회생
- (프로그램) 마을 사람들의 삶, 배움, 애환, 즐거움이 있는 폐광지의 탄광촌 마을 주민 인생 이야기 제작 (영월다운, 온마을 배움터 마을 인문학 강사 양성)
- (효과) 초고령화 사회, 폐광지역의 아픔이 있는 영월군민의 자기극복 및 자존감 회복, 지역 주민 대다수가 4050, 5060, 6070세대의 지역 평생교육 활동가로서 자기 개발 기회 활용 제공

2.2.3.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기반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은 문화·여가 인프라 접근성이 열악하고 도시 대비 문화서비스 품질이 미흡
 - 문화·여가 기반 시설 대부분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예술·체육 체험 기회 부족
 - *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수: 합계 2,520개소, 도시 1,184개소, 도농복합시 743개소, 군 593개소 (문화체육관광부 2015)
 - * 100㎢당 문화기반시설 수(15): 도시 17.8개 > 농어촌 1.1개
 - 농어촌 주민의 문화·여가 활동은 도시 주민들에 비해 단조롭고, 만족도도 낮은 경향
 - * 문화·여가 활동 만족도: 농어촌 51.8점 < 도시 54.8 (농촌진흥청 2018)
 - 지역 단위 문화 전문 인력 부족으로 지역 내 문화 자원 발굴 및 확산에 한계

□ 정책 방향

○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의 복합화 추진

- 공연예술, 전시, 미술, 음악, 공예,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또는 신규 시설 구축 시 기능 복합화 추진
 - * 예: 충북 증평군의 군립도서관은 기능 복합화로 도서관 기능 외에 영화상영, 연극 공연, 전시, 동호회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문화·여가의 질을 향상시킴.

- 건축물 단위뿐만 아니라 농어촌 중심지 개발 시, 시가지 정비, 상업기능 확충, 문화·여가 기반 확충 등이 복합된 공간개발 촉진

* 예: 영국 Lincolnshire County의 경우 농촌 중심지인 South Holland District를 문화 기능, 사업 기능, 서비스 기능이 복합화되도록 개발하여 중심지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 및 방문객의 이용을 촉진함.

○ 마을 단위, 소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문화·여가 생활 SOC 구축

- 농어촌의 유희시설을 활용한 마을 및 면 단위 문화·여가 생활 SOC 확충

* 예: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는 분교 폐교를 마을 박물관, 노인 평생학습 및 여가활동 장소로 리모델링하여 문화·여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마을축제의 장으로 활용.⁵⁾

○ 농어촌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가는 문화·여가 매개조직 육성

- 농어촌 지자체 단위 중간지원조직 육성 시 문화·여가 전문가(농어촌형 문화·여가 기획 전문 인력) 채용 지원

- 농어촌형 문화·여가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농촌 주민의 자발적 문화·여가 활동조직 육성 및 이들을 통한 문화·여가 공급 촉진

* 예: 진도군의 진도민속예술단은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 여가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여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⁶⁾

○ 학교교육과 연계한 농어촌 문화·여가 인력 육성

- 특성화 학교 육성 지원 등

⁵⁾ 김광선·이규천, 2012

⁶⁾ 김광선·유은영·허주녕, 2017

□ 추진 과제

1)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 농어촌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 농어촌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을 위해 도서관 조성비용 및 설계·시공·운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 * '24년까지 총150개 농어촌 공공·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 공공 체육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에 공공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
- 생활체육공원, 지방체육시설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시설 조성 지원
- * 농어촌 지역 체육공간 지원: ('20) 100개소 → ('24) 120

○ 농어촌 지역 생활문화센터 조성

-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의 일상적·자발적 생활문화 공간 조성
- * 예술활동, 동호회 등을 위한 연습·발표 공간, 주민 커뮤니티 공간, 북카페, 공연장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20년 약 160개소 조성)

○ 농어촌 문화·여가 전문인력 양성

- 지역 청년문화 활동가, 문화관련 대학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문화발전을 촉진하는 전문인력으로 양성
- * '24년까지 매년 220명의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2) 소외 지역 문화·여가 지원 강화

○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인당 연 8만 원 사용 가능

- 내실 있고 다양한 문화 향유를 위해 농어촌 지역 가맹점 확대 및 1인당 사용 가능 금액 상향(10만 원) 추진

○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운영

- 운영기관 사업비 매칭(10%) 및 참여기관(어린이 병원 등) 범위 확대로 찾아가는 도서관 수혜 대상 증대
 - *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 운영 도서관을 '24년까지 총 550개소 지원
- 농어촌 지역 어린이 대상 찾아가는 박물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화 감수성 배양
- 국립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 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원
 - *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교육: ('20) 39회 → ('24) 43

○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 매달 마지막 수요일 및 그 주간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지역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관 참여 지원
 - * 지역 참여문화시설 지원: ('20) 300개소 → ('24) 340
 - * 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

2.2.4.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활동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문화를 기반으로 한 농어촌 공동체 형성이 어렵고 고령화 심화로 지역 전통·향토 문화 전승 한계 노출
 - 지역의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한 자발적·자생적 문화 프로그램 및 동아리 등 공동체 부족
 - * 농어촌 주민의 주된 여가활동: 'TV 및 라디오시청'(33.0%), '휴식'(23.0%), '사회활동'(20.1%), '스포츠 관련 활동'(7.2%), '문화예술 관련활동'(6.9%) (농촌진흥청 2018)

- 농어촌 지역의 전통·향토 문화 자원의 보존 및 이를 활용한 생활문화 육성이 중요함에도 접근성이 지속 하락하여 전통·향토 문화가 소멸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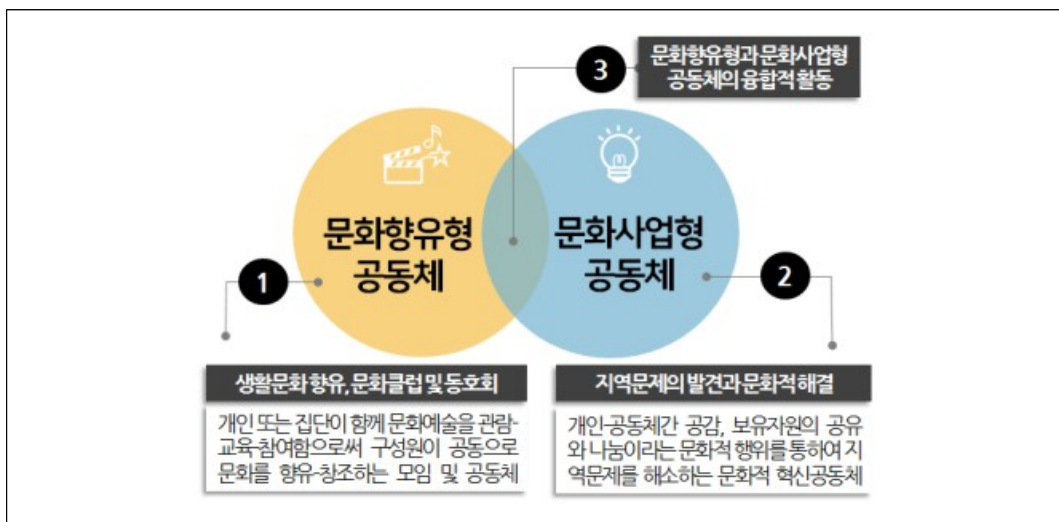
*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향토문화를 접할 수 있다' 문항의 동의 정도: 도시 6.2점 > 농촌 5.6 (유은영 2018)

□ 정책 방향

○ 기존에 강조되어왔던 '문화향유형 공동체'와 지역문제의 문화적 해결을 위한 '문화사업형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 추진

- 문화향유형 공동체: 생활권 중심의 주민이 함께 문화예술을 관람, 교육, 참여함으로써 공동으로 문화를 향유-창조하는 모임 또는 공동체
- 문화사업형 공동체: 개인-공동체간 공감, 보유자원의 공유와 나눔이라는 문화적 행위를 통하여 지역 문제를 해소하는 문화적 혁신공동체

그림 4-6 문화향유형 공동체와 문화사업형 공동체



○ 농어촌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동체를 발굴·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지역문화를 연계하여 혁신해가는 주체로 성장

- 특정 주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주민 주도의 다양한 문화공동체 활동 유도

* 공동체 유형: 문화테크놀로지공동체, 글로벌문화공동체, 취향공유공동체, 문화비즈니스공동체, 전문예술인공동체, 문화상상공동체, 지역생활문화공동체 등

- 문화·여가형 및 문화사업형 공동체별로 활성화를 위한 촉진 인력(강사·기획자·문화메이커즈), 활동공간(생활문화시설, 공동활동공간, 창업공간), 콘텐츠(프로그램), 활동무대(시민장터, 축제)를 발굴하여 지원

- 지역별 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활동을 유도하며, 문화공동체의 소셜벤처로의 전환 등을 추진

○ 기존 정책 대상자(농어촌 주민, 노인)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더불어, 귀농·귀촌인, 청년, 지역예술인 주도의 문화공동체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

- 기존 사업의 경우 도시형 공동체에 밀려 농어촌 공동체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농어촌만의 공동체 지원 사업 개발 및 기존 사업 개선

□ 추진 과제

1) 농어촌 문화 공동체 활성화

○ 생활문화공동체 및 동호회 활성화

- 생활문화를 매개로 한 주민 공동체 형성과 주민교류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 프로젝트 지원

* '24년까지 매년 42개소 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및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생활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교류, 협력 지원 및 생활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협력체 구성 지원

- '전국생활문화축제'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동호회의 문화 활동 지원

그림 4-7 농어촌 문화 공동체 활성화



○ 공동체 촉진 인력 양성

- 지역 문화 매개 인력 발굴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 매개 인력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 역량 강화 추진
 - * 지역별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및 체계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 후 활동 연계 방안을 위한 컨설팅 및 정보제공 체계 구축
 - * '24년까지 매년 130명의 지역 예비 문화 리더 양성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2) 향토문화자원 활용 생활문화 육성

○ 지역문화 원천 콘텐츠의 지속적 발굴 및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

- 지역의 인물, 설화 등을 콘텐츠로 개발하고 생활문화(지명 유래, 지역 대표음식 등), 역사유산(지역변천역사 등) 및 국난극복 등을 기획콘텐츠로 제작
 - *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콘텐츠 주제 선정
- 지방문화원 소장 향토자료 DB화, 시스템 이용자 편의를 위한 DB단위 분리, 메타데이터 보완, 이미지 문서 상 문자 키워드 검색기능 마련 추진
 - * '24년까지 매년 1,500개의 전통문화 원천 콘텐츠 발굴

○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어촌다움 강화 및 소득화 지원

- 농어촌에서만 구현 가능한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한 소득화 모델 구축

* 농경문화소득화 모델 구축: ('20) 5개소, 10억 원 → ('24) 50, 180

- 전통솜씨, 전례놀이, 세시음식 등 솜씨 상품화 및 공동체 활동 지원

* 자료화(놀이·제조 설명서, 동영상), 소규모 공방 및 공연(마당극, 인형극 등)

〈사례〉 농경문화자원 활용: 창작공연

- 지역에서 내려오는 설화나 농경문화에서 행해지던 풍습을 재현하고 예술성 있는 작품으로 극화하여 마을 주민이 공연
 - 금산 평촌마을(농바우끄시기 마당극), 소로1리마을(소로리 뱀씨이야기 마당극) 등

○ 지역 전통문화 중심의 농어촌 문화관광축제 지원

- 농어촌 지역자원을 소재로 한 마을 단위 축제로 농어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규모 축제 지원

3. 정주생활기반 부문

3.1. 여건 및 개선 방향

□ 농어촌 주민은 이동이 불편하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 농어촌 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며,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낮음.

-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 가능한 비율은 88.6%(김용욱 외 2018)

○ 농어촌은 보행로와 안전시설 미비로 상시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 ‘우리 마을은 보행·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 비율은 43.2%로서, 재난·재해(59.8%) 및 범죄(55.7%)에 안전하다는 응답보다 낮음(농촌진흥청 2018)

○ (개선 방향) 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에 다양한 유형의 교통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제시 필요

-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단거리 이동 및 생활 교통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인 교통수단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시스템 발굴

□ 농어촌 노후 주택 및 기초 생활 인프라 개선 시급

○ 농어촌 주택의 평균 노후도는 도시에 비해 높으며, 취약 계층의 주거 문제 또한 도시에 비해 심각한 상황임(농촌진흥청 2018).

- 읍보다 면 지역에 노후주택이 많으며, 고령 주민일수록 노후주택 및 슬레이트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 지역별 주택 평균 건축년도: 읍 20.8년 < 면 23.7년

* 슬레이트 주택 거주 비율: 50대 8.3% < 60대 8.9% < 70대 이상 13.0% (농어촌 평균 9.7%)

-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남.

*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도시 6.3% < 농어촌 9.1%

○ 노후된 주택일수록 공공 상수도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아 수질오염 등 주거환경 악화 요인으로 작용(농촌진흥청 2018)

- 노후 주택 가구에서 공공 상수도 및 공공 하수처리시설 이용 비율이 낮고, 자가 상수도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이용 비율이 높음.

* 공공 하수처리시설 이용 가구 비율: 1960년대 이전 건축 및 신축 71.0% < 1990년대 이후 85.8%

* 개인 하수처리시설 이용 가구 비율: 1960년대 이전 건축 및 신축 26.7% > 1990년대 이후 12.8%

○ (개선 방향) 지역 실정에 맞는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함.

- 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권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최저기준의 적정성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지역에 대한 인프라 정비 및 보급 수준을 평가하는 방안 모색

- 생활용수의 장기적 활용(인구 변화, 토지이용 변화 등)과 타 인프라의 복합개발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도입 방안 검토

□ 농어촌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정주기반 공급 필요

○ 농어촌 주민 인구 유입 추세에 비해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부족한 실정(농촌진흥청 2018)

- 농어촌 지역 거주자 중 이주민 비율은 64.1%로, 원주민 비율 35.9%보다 높게 나타남.

* 이주민 비율: 읍 74.1% > 면 47.8%, 비농어가 78.4% > 농어가 32.1%

- 농어촌의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비율이 74.1%로, 도시의 60.1%보다 높으며, 전세나 월세 등 임대 비율은 도시보다 낮음.

* 주택 점유 형태: (도시) 자가 60.1%, 전세 18.4%, 월세 19.5%, 무상 2.0%

(농어촌) 자가 74.1%, 전세 9.4%, 월세 12.7, 무상 3.7%

○ 반면 농어촌 지역 내 빈집 및 유희시설은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정비 및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통계청 각 연도).

- 2017년 기준 농어촌 지역의 '빈집 증가율'은 13.4%로, 도시지역 평균(12.6%) 및 전국 평균(12.9%)보다 높음.

* 주택 종류별 빈집 증가율: (도시) 아파트 14.66%, 연립주택 10.32%, 다세대주택 7.83%
(농어촌) 아파트 17.61%, 연립주택 15.82%, 다세대주택 15.50%

- 빈집과 유희시설의 양적 증가와 함께, 상대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빈집 및 유희시설도 증가하는 추세

* 농어촌 빈집 수: ('15) 414,890호 → ('17) 482,960

* 건축 5년 이내 빈집 비율: ('15) 12.5% → ('17) 14.3

* 유희시설: ('09) 144개 시·군 1,002개소 → ('12) 23개 시·군 중 466개 마을에서 55개소(이 중 양호한 유희시설 비율: 34%)

○ (개선 방향)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고, 농어촌 지역 내 인구 유지를 위해 양질의 주택 공급 방안 마련 필요

- 농어촌형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여 농어촌 지역 내 자가 주택 위주의 정책에서 임대주택으로 정책의 폭을 다각화 할 필요

- 농어촌 지역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노후 주택 개량, 빈집 정비 등 주택 재고 관리를 포함한 맞춤형 지원 필요

□ 농어촌 주민과 국민 모두 농어촌다움의 중요성을 인식

○ 국민들은 농어촌의 쓰레기, 수질·토양오염, 악취 등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인식(농촌진흥청 2018)

- 농어촌의 주요 환경 문제는 '쓰레기' 8.3%, '수질오염' 6.1%, '토양오염' 2.3% 등 순으로 응답함.

-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축사'가 39.9%가 꼽힘.

- 농어촌 주민은 농어촌 환경·경관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며, 자발적 환경·보전활동 참여 의사가 높음(농촌진흥청 2018).
 - 지켜야 할 농어업·농어촌 가치로 ‘자연환경/경관 보전’을 꼽은 비율이 농어촌 37.4%, 도시 39.7%로 공통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인식
 - 마을 경관보전 활동 참여 의사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마을 가꾸기 활동 참여 의사가 있다(필요한 자재, 활동비 등)’(46.5%), ‘우리 마을은 깨끗하고 아름다워 자랑할 만하다’(45.3%) 등 응답자 절반가량이 공감

- (개선 방향) 농촌협약을 농촌공간계획 및 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농촌 발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율적 환경·경관 보전활동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형성 지원
 - 중앙정부는 중장기 농촌정책 구상을 아젠다 형태로 제시
 - 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 협약(협정)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농어촌다운 경관 관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지원
 - 국민이 농어촌 환경·경관관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채널 구축

3.2. 세부과제: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주요 과제	1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개선	2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교통모델 고도화 • 첨단 교통의 농어촌 도입 • 농어촌 지역 교통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 계층 주거 여건 개선 •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농어촌 지역 빈집 정비 및 활용 	
	3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구축	4	환경·경관 보전으로 농어촌다움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기술을 활용한 정주기반 고도화 • 통합적 지역개발을 통한 정주기반 내실화 • 농어촌 지역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다양한 계층 대상 농어촌 임대주택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 농어촌 지역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환경자원 활용 •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성과 지표	성과목표	2020	2024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개선 - 대중교통 조정을 통한 기·종점간 연계 시스템 - 고령자 교통안전수칙 방문교육	217대 3,974개소	350대 4,454개소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농어촌 지역 시·군 단위 하수도 보급률 - LPG 소형저장 탱크 및 배관망 공급 - 빈집 철거 건수	71% 1,350세대 8,000동	75% 5,400세대 10,000동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구축 - 고령자 복지주택 및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구축 - 농어촌 복합서비스거점 구축	20개소 16개소	60개소 56개소
	환경·경관 보전으로 농어촌다움 실현 -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 구축 - 농어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800개소 25개소	1,600개소 40개소

3.2.1.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의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은 주민 이동권을 제약하고 생활의 만족도를 저하
 - 농어촌 시내버스 하루 운행 빈도를 살펴보면 전국 농어촌 지역 행정리 기준 47.6%가 10회 미만이며, 이중 25.1%에서 하루 1~3회만 운행됨(통계청 2015).
 -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에서 도시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농촌진흥청 2018).
 - * 대중교통 만족도: 농어촌 48.6점 (읍: 51.5, 면: 46.2) < 도시 66.8

- 농어촌 버스의 낮은 서비스 수준으로 농어촌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약
 - 마을과 정류장 간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고령자의 이용 여건은 열악
 - 적은 배차 횟수로 인해 시설 이용 가능 시간에 맞춰 배차가 불가능
 - * 농어촌 주민의 주 교통수단: 70대 이상의 경우 버스 이용률이 61.1% (농촌진흥청 2017)
 - * 정류장 접근 보행시간: 평균 31.6분으로 고령자의 이용이 어려움.

-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농어촌 교통여건 악화 우려
 -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비수익 노선 효율화가 추진되고 있어 지선 구간을 중심으로 버스 운행 횟수 감소, 노선 감축 예상
 - * 근로 형태에 따라 시·군당 최소 777명에서 1,691명의 농어촌버스 운전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총 소요 인원의 23.8%에서 40.5% 수준)

- 농어촌은 보행로와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생활 안전성이 도시 대비 열악
 - 농어촌 교통·보행 여건이 불리하여 교통사고 등 위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도시 대비 5.4배 높음.
 - *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도시 413.1건, 농어촌 478.5 (한국교통연구원 2017)
 - * 인구 100명 당 교통사고 치사율: 도시 1.2명, 농촌 6.5 (도로교통공단 2018)

- 농어촌형 교통모델사업의 문제점으로 운행 횟수 부족, 정산시스템 부재 등이 지적됨.
 - '18년 사업 모니터링 결과, 대상 주민이 주당 1.6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 교통 수단으로서는 운행 횟수 절대적으로 부족

- 농어촌형 교통모델사업 시행 지역은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어, 향후 사업 모델 확장 및 고도화를 통해 교통 여건 개선 필요
 - ('14~'17년 시범사업) 총 30개 시·군 / 39개소 → ('18년) 76개 군 / 87개소 운영
 - 농어촌형 교통모델 도입 이후, 읍·면 소재지까지 소요시간이 평균 19.6분(도입 전 38.5분), 버스 대기시간 평균은 13.2분(도입 전 18.9분)으로 개선

□ 정책 방향

- 단순 수요 대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대중교통 정책에서 탈피하여 농어촌의 통행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농촌형 교통모델 구축
 - 고령자가 많은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 검토
 -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지역기반시설을 각 생활권간 공유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생활권간 이동 중심의 교통시스템 도입 검토
 - 농어촌 생활권에 부합하는 복합적 사업 방식(운행 수단, 운행 방식) 선정
 - 획일적 지선구간(마을·면 중심지) 운행을 지양하고 생활권을 고려한 효율적 운행 범위 설정
 - 3·6·5 생활권 구축을 위한 생활권 연계 및 중심지 거점시설의 플랫폼 전환사업 추진
 - 보건소 등 주요 공공시설은 셔틀버스 방식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추진
 - * 황성군에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청일면 일대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의 경우 생활권을 고려하여 인근 홍천군의 면소재지까지 운행
 - 운영-운행 주체에 따른 다양한 사업 방식 제시를 통해 주민 조직의 사업 참여 확대 적극 유도

○ 고령자가 많고 안전에 취약한 농어촌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중교통 및 개인교통에 첨단 교통시스템 도입 검토

- 주요 생활권 간 대중교통에 자율주행시스템 및 전기차 도입, 버스 운행 정보 제공, 농어촌형 개인교통시스템 도입 검토

〈일본 중산간 지역의 첨단교통〉

- 중산간 지역의 거점지역인 ‘미치노에키’, 고속버스터미널 등과 각 마을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 검토
- 소형 자율주행 버스, 골프카트,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한 생활권 간 이동 교통수단 도입 검토(시범사업 후 도입 검토)

○ 높은 교통 사고율, 교통사고 치사율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농어촌형 교통안전시스템 도입 검토

- 열악한 도로여건 및 교통안전시설, 고령운전자, 고령보행자, 농기계 등의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해소할 수 있는 농어촌에 적합한 교통안전대책 수립

□ 추진 과제

1) 농어촌 교통모델 고도화

○ 농어촌 대중교통체계 가이드라인 마련

- 농촌, 근교 지역, 산간·도서 지역 등 지역 특성 및 운영·운행 주체를 고려한 사업 방식 제시

* 근로기준법 개정(18.2월)으로 버스 운행 노선 조정 등 농어촌 주민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벽·오지 등 노선에 대중교통 수단 지원: 사업시행자로서 운수회사뿐 아니라 자율방범대,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마을자치회, 비영리법인, 운수사업체(지방공기업 포함) 등 활용

*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오지마을 취약 주민을 대상으로 100원택시, 효도택시 등 운행: '18년 이용자 만족도 종합점수 79.1점 (농림축산식품부 2018)

○ 다양한 노선 형태를 고려한 운영체계 다변화

- 수요응답형(15인승)과 노선운행(25인승)의 혼합 방식을 도입하고, 중·장거리 교통거점인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 사례: 기존노선 A→B→C(중심지)에서 A→B→C(읍내)→D(터미널) 노선 개편
 - * 대중교통 노선 시스템을 조정하여 기·종점간 연계 시스템 구축: ('19) 217대 → ('24) 350
- 생활구간 운임할인 등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한 도서민 교통복지 향상
 - * 생활구간: 전체 1,803개 연안여객 운임 구간 중 단거리·저운임 구간(1,252개)
- 물리적으로 1일 2왕복 이상 운항이 불가능해 지원이 어려웠던 낙도 지역에 교차운항(섬→육지) 지원을 통해 접근성 향상
 - * 백령→인천, 가거도→목포 등 장거리 항로 교차운항 지원

○ 지역 주민 참여형 교통모델 확산

- 벽지노선 선정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공청회 등)하여 주민참여형 교통모델로 정립될 수 있도록 추진
 - * 주민참여형 교통모델 운영(영농조합, 방범대, 운수협의회 등, '19년 14개 군→ '24, 30)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전사 부족 등의 영향으로 농어촌·벽지 버스 노선이 감축되는 지역에 한정면허 발급 등 비영리법인 운영 확대

2) 첨단 교통의 농어촌 도입

○ 농어촌형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실증 추진

- 농어촌 지역 자율주행 이동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추진
 - * 자율차 원격제어, 관제센터 모니터링, 최적경로 생성 및 운행 스케줄 수립 등 자율주행 이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레벨4 수준)
(레벨4 고등자동차: 특정 주행 모드에서 시스템이 차량제어를 전부 수행, 위험 발생시에도 운전자 개입 불필요(자율주행 기술 레벨은 0~5의 6단계))
- 교통소외 지역 자율주행 셔틀 운영을 위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농어촌 지역을 선정하여 자율주행 이동지원 서비스 실증 사업 추진
 - * 다수 수요자의 요청 → 운행경로 최적화 → 픽업시간 안내 → 목적지 도착

○ 농어촌형 교통모델 효율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 보급

- 콜·배차·정산을 통합 관리하여 운전자, 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
 - * 전산시스템 미구축 지자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이용을 권장

○ 여객선 승선 관리 전산 시스템 보급

- 연안 여객선 승선 인원 및 명부 관리 시스템 전산화 추진
 - * 모바일 승선권 검표 기능 및 도서민 신분 확인 기능을 추가하여 선사, 도서민, 일반승객의 사용 편의 증진 추진

3) 농어촌 지역 교통안전 확보

○ 농어촌 위험도로 구조 개선

- 급커브 선형 완화, 급경사도로 경사 완화, 노폭 협소구간 노폭 확대 등 위험구간 구조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 및 주민불편 해소
 - * 제2차 위험도로 중장기계획('14~'23)에 따라 '23년까지 총 715개소 위험도로 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수행

○ 농어촌 지역 고령자 교통안전 강화

- 고령자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 수칙 방문 교육 실시
 - * 고령자 교통안전수칙 방문교육: ('20) 3,974개소 → ('22) 4,214 → ('24) 4,454
- 농어촌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대상 안전용품(농기계·화물차 야간반사지, 이륜차 안전모, 안전지팡이 등) 보급
 - * 교통안전용품 보급(농기계/지팡이): ('20) 2만 개/2만 개 → ('24) 3만/3만
- 노인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농어촌 지역 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개선

○ 연안여객선 현대화 및 교통편의 시설 마련

-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 및 이동이 편리한 여객선 도입을 위해 선박 신·개조 비용을 단계적으로 보조
 - * ('20) 국고여객선 26척(국고 100%) → ('21) 일반항로 선박(국고 50%)

-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일률적으로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연안여객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현실화

* 휠체어 사용자 전용공간 기준 마련, 장애인 전용화장실 출입문 등 설치기준 재정비 등

○ 스마트 해상 안전 교통망 구축

- 최대 100km 해상까지 안전정보 등을 송·수신하기 위한 해상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

* '20년부터 LTE-M 기지국 600개소 및 운영센터 등 망 관리체계 구축

- 전 국민 대상으로 안전항로, 위험 경보 등을 지원하는 지능형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21~)

○ 쾌적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인프라 확충

- 노후 여객선의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용객에 쾌적한 여객서비스를 제공

*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규모 확대: ('16~'19) 1천억 원 → ('20~'23) 추가 1천억 원 확보 추진

* 국고여객선 대체 및 예비선 건조: ('20) 대체건조 3척 / ('21~'23) 예비선 신조

- VTS 미설치 연안 해역 및 신설 부두·좁은 수로에 관제구역 확대

- 부두 신설로 인한 선박 통항량 증가, 과거 사고 사례를 토대로 사고 위험이 높은 수로 레이더 설치 및 관제구역 확대

* 연안해역: 군산·목포('18~'21) → 제주·서귀포('20~'23) → 동해·포항('21~'25)

* 신설부두: 울산신항·영흥수도('18~'20) → 포항구항('19~'21) → 속초신항('21~'23) → 새만금('22~'24)

〈VTS (Vessel Traffic Service System, 해상교통관제시스템)〉

-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Vessel Traffic Service System)은 첨단과학장비(레이더·VHF·AIS 등)를 이용하여 통항선박의 동정 관찰, 다른 선박의 항행 의도 식별, 위치 확인, 항로, 기상조건 등 선박교통질서 유지 및 해양환경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여 이를 제공하는 정보교환체제

3.2.2.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속적인 농어촌 정주·주거환경 정비 사업 등 정부의 정책 지원 추진에도 불구하고 주택 노후화 및 빈집 문제 심각

- 농어촌 주택의 평균 노후 정도가 도시보다 높게 나타나며(농어촌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20.7%, 전국 노후주택의 47.1%가 농어촌 소재) 고령자일수록 노후주택에 거주(농림축산식품부 2018)
- 도시로 이주, 소유주 사망 등에 따라 빈집이 발생하나 미등기, 세금 문제, 복잡한 소유 관계 등으로 정비 기피
- 노후된 주택일수록 공공 상하수도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고 자가 상수도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이용 비율이 높아 주민의 건강 및 수질오염 악화 요인으로 작용
- 농어촌 과소화·공동화에 따른 빈집 지속 발생으로 환경, 위생, 보건, 치안 등 사회문제 발생 우려(농림축산식품부 2018)
 - * 연간 7천여 동을 철거하고, 일부 활용을 추진 중이나 농어촌 지역에 4만여 동 빈집 존재
 - * 활용 가능한 빈집은 28.7% 수준이나, 활용 동의는 2.2%로 낮아 활용도 미흡
- 빈집 활용을 위한 공공의 노력과 귀농·귀촌 수요와 간극(농림축산식품부 2018)
 - * 귀농·귀촌인은 신축·구매를 선호하며(귀농 76%, 귀촌 74%), 빈집 활용 비율은 낮음(귀농 3.8%, 귀촌 1.2%).

표 4-5 농어촌 빈집 및 빈집 철거 현황

(단위: 동)

구분	'14	'15	'16	'17	'18
빈집(동)	48,901	48,685	50,801	45,524	38,988
철거(동)	6,843	7,652	7,395	7,468	8,24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 빈집실태조사

○ 농어촌 상수도 보급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상수도의 보급률이 낮으며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경우 수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수도 보급 정책 추진 필요
- 물 사각지역에 대한 급수시설 관리방안 마련 시급(환경부 2017)
 - * 상수도 보급률: 면 지역(75.6%) < 전국(96.8%)
 - * 하수도 보급률: 면 지역(52.3%) < 전국(96.8%)

○ 농어촌은 도시가스 공급 비율이 낮아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고, 기후 변화로 인한 폭한 및 폭염으로 농어촌 지역의 고령자들이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고 있음.

- 도시가스 보급률의 도·농 격차가 크고, 농어촌 내에서도 읍·면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 * 도시가스 보급률: 동 88.3% > 읍 68.6% > 면 14.6%
 - 수도권·광역시 제외 지방 61.6% < 전국 83.0% (산업통상자원부 2018)
- 난방비를 월 20만 원 이상 부담하는 가구 비율은 농어촌 지역이 도시보다 높으며, 특히 면 지역의 난방비 부담이 높음.
 - * 농어촌 30.9% > 도시 19.4%, 면 40.2% > 읍 19.0% (농촌진흥청 2018)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공동시설의 에너지 절약 건물 모델 개발 및 보급 필요

○ 노인 독거가구가 증가하여 주거위생 등 생활 여건이 열악

- 농어촌 지역 노인 독거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불량한 위생여건 등으로 건강 및 안전 위험
-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경우 집 안에 쓰레기와 폐기물, 부패된 음식물 쓰레기, 찌든 때, 오염된 화장실 등으로 건강과 위생, 환경이 매우 심각

○ 과소·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의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필요

-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 고독사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
- 고령화 시대에 농어촌 노인들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주환경 조성 필요

○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주거환경 인프라 취약 지역 선정 및 주민 수요에 적합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

□ 정책 방향

○ 주거 취약지역의 주거환경정비 확대 및 정책 개선 방안 마련

- 농어촌 주택 정비 지원 사업 계속
- 취약 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 확대
- 농어촌 주민의 자율적인 빈집 관리 방안 및 농어촌 주거 정비 정책 마련(빈집은행 등)
-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비 증액

○ 안전한 물 보급을 위한 농어촌 상수도 확충 사업 및 소규모 수도 시설 관리체계 구축·운영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지속 추진(상수도 확충, 마을 공용관정 개발사업,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을 통한 농어촌 먹는 물 확대)으로 물 사각지대 해소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
-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안전한 관리시스템 마련
- 상수도 공급 확대뿐 아니라 농어촌 급수 취약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질 관리 시스템 마련으로 보건 위생과 삶의 질 향상

○ 농어촌 주민 에너지 비용 절감 방안 마련 및 안전관리 제도 도입

- 농어촌 지역의 도시가스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확대
- 공급과 함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마련
- 기후변화로 인한 폭한 및 폭염으로 취약한 상태로 노출된 주민들에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농어촌 주택·마을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실증단지 사업 추진
- 농어촌형 에너지 절약 주택 모델 개발 및 보급

○ 주거위생 사각지대 환경개선사업 추진

-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공간 정비
- 노후화된 주택의 곰팡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주택의 쓰레기 악취 및 음식물 방치로 인해 열악한 주거 위생 상태 개선 및 위생 능력 배양

〈시흥시 ‘주거위생환경개선사업’〉⁷⁾

- 2019년 6월 주거취약 계층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주거위생 환경개선사업’을 시행
- 집안 정리가 되지 않아 바퀴벌레와 곰팡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 등 건강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고 또한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오랫동안 방치된 상한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저장 강박증이 있어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 놓은 경우 악취 등으로 이웃에게도 커다란 불편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을 인지하고 주거위생환경개선 사업 실시
- 이 사업은 주거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주거위생이 열악한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위생 능력을 배양해 주는 사업
- 청소 및 방역서비스를 제공해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정리 수납 등 10회의 정기적인 가사관리서비스와 교육 지원을 통해 본인 스스로 청결한 주거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능력 배양
- 사업 대상은 독거노인 가구,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 아동이 포함된 맞벌이 가구, 저장강박증, 알코올 중독 등 질병적인 사유로 집안 정리가 어려운 가구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며, 기타 주거위생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청도읍 주거환경개선사업(2019. 7)〉⁸⁾

- 집안 쓰레기와 폐기물 등으로 가득 차 건강과 위생, 환경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평소 집안 청소나 정리정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양 의무자가 없는 독거노인 대상으로 사업 실시
- 청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30여 명의 재능기부로 진행
- 먼저 생활쓰레기와 폐물건이 뒤엉켜 있던 방과 주변을 정리하고 대청소를 실시한 후 전기 분야, 씩크대·도배 분야, 문 교체 등 각 분야별 자원 봉사자들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로 활동

〈홍성군, '신개념 GIS 방역 시스템' 본격 도입(2019.8)〉⁹⁾

- 공간정보(GIS)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개념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방역소독이 가능해지고 감염병 매개체 발생도 사전에 차단
- 2017년 GIS 기반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전산화를 구축하고 2018년 스마트폰앱 활용으로 1,425회 시범 운영 진행
-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GIS 기반 방역 시스템을 본격 도입
- 방역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지역의 지리정보, 방역 취약시설, 감염매개 유충 발생지, 민원소독대상지, 정화조 방재시설 등을 수치화해 질병관리본부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분석해 과학적인 방역 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
- 14개 팀의 방역기동반이 업무 시작 전 핸드폰앱을 통해 시작 버튼을 누르고 방역 차량 탑승 후 작업을 진행하고 끝나는 시점에 종료 버튼을 눌러 간단히 사용
- 이 시스템을 현장 방역기동반의 스마트폰과 연계해 방역 민원처리 경로 및 방역 시간을 모바일 GPS를 이용해 표시하고, 이를 저장·전송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독 실적 결과 확인과 효과적인 방역 약품 관리

〈주거환경 개선 스마트 방역 서비스(2017)〉¹⁰⁾

- 모기 발생 상황 정보 수집 등을 바탕으로 모기 대량 발생의 피해를 예방하는 스마트 방역 서비스
- 질병 매개체인 암모기만을 유인 포집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의 스마트 모기
- 경기도 고양시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
- 주거환경개선 스마트 방역서비스는 고양시가 주관하는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의 하나로써 고양시 보건소가 서비스를 운영·관리
- 고양시 외에도 서울 구로구 및 영등포구 울산시와 경기도 일부 보건소에서 유사 서비스를 운영 중
- 체계적 방역계획 수립 및 대응으로 모기에 의한 피해 최소화 등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방역비용도 감소
- 모기 살충제 비용이 절감 효과와 모기 피해 민원은 매년 평균 반 이상 감소

7) 자료: <https://m.ajunews.com/amp/20190530095221837>

8) 자료: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384>

9) 자료: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78>

○ 농어촌 고령자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 과소·고령 마을의 맞춤형 정주환경 조성
- 농어촌 마을회관이나 보건진료소 등 복지서비스 제공 장소 인접지역에 주거공간을 집단화하여 함께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공동생활환경 마련

〈전남도 전국 첫 노인 위한 안심 공동홈 조성사업 추진(2019.4)〉¹¹⁾

- 농촌 노인거주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대신 독립 모듈러(조립식) 주택을 제공해 이를 한곳에 모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남형 안심 공동홈' 조성사업 추진
- 초고령화 시대 도내 농어촌 노인들이 노후 걱정 없이 살도록 독립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
-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1·2인 가구용 모듈러 주택 10여 동을 마을회관이나 보건진료소 등 복지서비스 제공 장소와 가까운 곳에 모아 배치하고 이곳에 노인들이 함께 거주
- 기존 노후주택 철거를 조건으로 신규 조성되는 단지로, 시장·군수가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입주자에게 영구 임대
- 사업 대상지는 마을 공동화 현상이 진행 중인 곳을 대상으로 시·군 공모를 거쳐 3곳을 선정하고 모듈러 주택 3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
- 사회문제로 대두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향후 빈집 발생이 예견되는 노후주택을 철거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추진 과제

1) 취약 계층 주거 여건 개선

○ 농어촌 지역 노후주택 개량 지원 및 취약 계층 주거급여 지원

- 노후주택 개량 소요자금을 저리로 융자(농협자금 100%, 이차보전)지원하고, 취득세 및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 지원(연 7천 동 수준)

- * 연면적 150㎡ 이하, 280만 원 한도 내 감면(지방세제한특별법)
- *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자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거환경 개선 스마트 방역서비스, 2017. 04

11) 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3125200054?input=1195m>

-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 계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로 구분하여 보수 지원(최대 1,026만 원)

○ 노후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 과거 지붕재로 집중 보급된 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하여 석면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 (매년 3만 동)
- 주택과 인접한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창고, 축사 등)에 대한 철거 지원(총 5,200동)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내실화

-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 * 동작감지센서, 비디오폰, 좌식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설치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 단가 현실화(현재 380만 원) 추진
 - * 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수준(457만 원) 이상 인상 추진

2)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농어촌 인프라 취약지역 지원

- 노후위험시설 정비 등 안전확보, 상하수도 보급·재래식 화장실 개량 등 생활·위생인프라, 주택정비, 휴먼케어 등 지원
 - * 최소 30가구 이상이면서 ① 30년 이상 주택 50% 이상 또는 ② 슬레이트 주택 50% 이상인 마을에 대해 3년간 지구당 국비 15억 원 내외 지원

○ 농어촌 지역 하수처리 시설 설치

-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률 지속 확대
 - *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08) 48.0% → ('17) 70.0 → ('23) 75.0
- 소규모(50톤/일 미만)의 경우 인근 처리장의 연계 검토 후 시설 설치

○ 도시가스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통한 균형 있는 에너지 공급

- 도시가스 보급이 저조한 지방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 도시가스 공급: ('20) 1,288km(54만 가구) → ('23) 4,855km(211만 가구)

- 도시가스 미 공급 150세대 미만 농어촌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지원

*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공급: ('20) 27개 마을, 1,350세대 → ('23) 108개 마을, 5,400세대

○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한 도서민 교통복지 향상

-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단거리·저운임 생활구간의 여객운임과 5톤 미만 소형 화물차 운임 할인을 확대하여 도서민 교통비 절감

* 생활구간 여객운임: 기존 40% → 확대 70%

* 화물차 운임: 기존 20% → 확대 50% (도서민 보유 5톤 미만 화물차 약 24만대)

- 해상배송비 추가 소요로 인한 육지 대비 고가인 생활필수품(유류·가스·목재펠릿·연탄 4가지 생활연료) 운송을 지원하여 도서 주민 기초생활비 부담 완화

3) 농어촌 지역 빈집 정비 및 활용

○ 중앙정부-지자체 간 추진체계 정비

- 중앙정부는 마을 단위의 빈집정비의 가이드라인 및 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빈집 활용을 위한 빈집은행 운영, 귀농·귀촌인 대상 빈집 리모델링 지원 등

○ 빈집 정비 관련 제도 개선 및 실태조사 시스템 강화

- '농어촌정비법'의 개정(2020년 2월) 이후 특정 빈집의 정의, 빈집 신고제, 빈집 정비절차 등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세부 수단 마련

- 신뢰도·실효성 있는 빈집정보 관리를 위해 빈집실태조사 방법을 내실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빈집관리시스템 구축

* 빈집 상태를 일반조사·상세조사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빈집 정비 여부 결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빈집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예시: 철거형, 활용가능형 → 철거형, 활용가능형, 보존형)

○ 지역·주민 주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체계 정착

- 지역 특성에 맞는 빈집정비계획을 통해 마을 단위의 빈집 정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마을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발굴
-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빈집 등록을 유도할 수 있도록, 등록된 빈집을 우선 지원하는 빈집 선 등록·후 지원 체계 구축
- 개별 빈집 정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빈집에 대한 인식 개선

○ 빈집의 상태·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빈집 정비 지원

- 안전·위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빈집은 철거하되, 활용·이용 수요가 높고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리모델링 지원

* 빈집 철거 규모: ('20) 8,000동 → ('21) 8,500 → ('22) 9,000 → ('23) 9,500 → ('24) 10,000

3.2.3.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주기반 제공 및 생활권 구축에 한계

- 읍·면 소재지와 배후마을 간 서비스 기능의 연계·통합 부족으로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우려
- ICT 활용 인프라 구축 및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과소화·고령화 문제 해결 필요

○ 인구감소·과소화-생활·공공서비스의 공급 감소의 악순환에 따른 농어촌 정주 여건 악화

- 주민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공공서비스 최소 기준인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의 경우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중기목표치를 달성한 항목은 17개 항목 중 2개에 불과하며, 이행 실태가 하락하거나,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항목들이 나타남(김용욱 외 2018).

* 2018년 기준 전년 대비 이행 실태 하락 항목: 진료서비스, 영유아서비스, 소방출동, 창업·취업 컨설팅

* 목표 달성률 70% 이하 항목: 초·중학교, 평생교육, 소방출동, 창업·취업 컨설팅

- 농어촌 내에서도 원격지의 정주여건이 더욱 열악한 실정이며, 인구밀도가 희박한 농어촌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 투입의 효율성, 타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서비스의 공급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 어려운 실정

* 2015~2018년 사이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 하위 1분위 지역에 계속 포함되거나, 하위1분위로 하락한 41개 시·군 중 37개가 군 지역

○ 최근 정주환경 개선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및 혁신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

-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 종합계획(2018~2027)에서 사람 중심의 국토교통 기술 개발을 강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
-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통해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입각하여 농어촌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실시

* 강원 삼척시 근덕면(스마트 에너지 혁신), 전남 무안군 무안읍(참여형 커뮤니티케어 서비스)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

○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에 대한 정책 고려가 부족한 실정

-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15~’19)’에서도 국민 행복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농어촌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비중이 높지 않은 실정이며, 증가율 또한 타 부문에 비해 낮음.

* '18년 농식품 연구개발 예산 중 농촌가치 제고 관련 예산 비중: 2.7%(26,407백만 원)

표 4-6 7대 농정 과제별 연구개발 예산 현황('17~'18)

(단위: 백만 원)

7대 농정과제	'17년		'18년		증가율
	예산	비중	예산	비중	
농업의 첨단산업화	74,275	7.8%	77,262	7.9%	4.0%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50,038	5.3%	50,594	5.2%	1.1%
시장개방 대응	101,161	10.7%	104,427	10.6%	3.2%
농생명자원 가치 제고	82,829	8.7%	91,388	9.3%	10.3%
기후변화 대응	16,645	1.8%	18,224	1.9%	9.5%
현장문제 해결	90,610	9.5%	92,283	9.4%	1.8%
농촌가치 제고	25,789	2.7%	26,407	2.7%	2.4%
7대 농정과제 합계	441,347	46.5%	460,585	47.0%	4.4%
농정부문 연구개발 예산	949,981	100.0%	982,414	100.0%	3.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 2018년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하에 실시되는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 중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극히 소수에 불과

* 2019년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4,822억 원)의 국토·교통기술 분야 연구개발 과제 중 농어촌 지역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과제는 총 137개 과제 중 1개 과제(2억3천만 원)에 불과

○ 귀농·귀촌 및 청년 창업농 증가 등으로 농어촌에서 주거 및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서 주택정책이 연계 시행되지 못하고 별도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 주거복지차원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매우 미흡

* 체류형 귀농·귀촌(귀농인의 집 등) 지원 정책 수혜 경험 비율(%): 귀농인 3.7, 귀촌인 3.1

- 농식품부가 소규모로 진행 중이던 임대주택 조성 관련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으로 정책 추진 여건이 더욱 악화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도시를 대상으로 대규모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

- 농어촌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아파트 형태의 집합화된 주택을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적합하지 않음.

○ 농식품부에서 부분적으로 임대주택(농어촌뉴타운, 공동생활홈,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귀농인의 집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비중은 매우 미미함.

- * 농식품부에서는 122지구 615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
- * 2014년 12월 전체 임대주택 비율 8.8%(1,709천 호) → 농어촌 지역 2.7%(537천 호)
- * 전국 임대주택 공급량 중 농어촌 지역 공급 비율 30.6% (국토부 2017)

- 농어촌 뉴타운은 출향 자녀 등 미래 농산업의 핵심인력(25~55세)을 농어촌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신규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

- * 시범사업 5지구 추진('09~'12), 65세대 중 289세대(화순 150, 장성 130, 장수 9) 임대주택 공급

- 공동생활홈 사업은 마을회관, 폐교, 창고 등을 리모델링하여 농어촌 지역 고령·독거 노인에게 공동 주거시설을 지원해 주거·영양·위생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

- * '14~'15년 시범사업(농특사업, 66지구) 시작, '15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50지구)으로 116지구 계속 추진

- 기업 유치, 주거 및 생활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 지원, 농어촌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력·자본 집중되는 활력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를 추진

- * 시범('16~'18) 6지구 중 3지구, 75세대(정선 40, 괴산5, 의성 30) 임대
- *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생활여건 개선, 주거 지원 등을 종합 지원하는 통합적 개발 추진

- 귀농인의 집 사업은 귀농·귀촌인의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거처로 매년 70동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5년간 임대('16년까지 135동 운영)하는 사업

- * '15년 70동 → '16년 70 → '17년 70(계획) → '18년 70
- * 빈집을 수리하여 귀농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5년간 임대 후 소유주에게 반환

○ 국토부와 LH공사는 농어촌 지역에 3가지의 새로운 유형(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공실버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음(3개형 61개 지구 6,291세대).

- 지방중소도시와 읍·면 지역 위주로 150세대 내외의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중

- * 33개 지구 3,680세대

- 공공실버형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의 저층부에는 건강관리, 생활지원 등 복지관을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

- * 22개 지구 2,304세대

- 지자체 공유지를 활용하여 귀농·귀촌인에게 임대주택과 농지를 함께 제공하는 귀농·귀촌형 공공임대 사업을 통해 주거와 소득창출을 지원

* 6개 지구 307세대

○ 농식품부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농어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추진함.

- '19년부터 5개 지구 106호 규모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으나, 해당 사업이 '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됨.
-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과 연계하여 청년 보금자리 사업도 추진

□ 정책 방향

○ 지자체 또는 생활권 단위에서 농어촌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수요와 소요에 대한 분석 및 계획 수립 필요

- 삶의 질 계획의 정주생활기반 부문에 농어촌 공공임대주택 5개년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의무화 추진 필요
- 농어촌 지역의 취약 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거복지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 정책 시행, 모니터링, 관리 필요

○ 농어촌지역개발 정책사업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주택·주거환경의 종합적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

- 일자리, 지역개발, 농산업, 교통 등 농어촌 지역의 생활권 단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정책연계 강화 추진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농어촌지역개발 정책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신규 일자리 수요와 관련된 사업추진의 경우 주택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연계한 사업의 추진 필요
-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등 지역개발과 주택 부문, 특히 공공임대주택과의 정책 연계 강화가 필요

○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

- 농어촌형 공공임대주택은 도시의 공공임대아파트와는 다른 형식으로 공급이 필요하며, 농어촌 고령자 건강 유지 및 정서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 생활환경(단독주택, 텃밭, 공동체 등)을 유지한 공공임대주택 조성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서 나아가 복지,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독거노인 등 농어촌 취약 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 연계 방안을 마련함.
 - * 일본의 경우 단독주택형 공공임대주택이 일반적이며 고령주민 등이 커뮤니티센터 문화·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중심마을의 커뮤니티센터 옆에 단독주택형으로 공영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추진 과제

1) ICT 기술을 활용한 정주기반 고도화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 스마트기술(AI, 빅데이터 등)을 접목하여 농어촌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 빌리지 및 지능형 ICT 타운 조성
 - * 드론 기반 농작물 생육관리, 스마트 에너지 बैं크,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지능형 영상보안관, 생체감지 센서를 통한 건강정보 모니터링 등
 - * 스마트빌리지 보급(과기부): ('19) 2개 읍·면(삼척시 근덕면, 무안군 무안읍) → ('20) 2개 읍·면 → ('21) 4개 읍·면 예정
 - * 지능형 ICT 타운(행안부): '19년 시범마을 2개 군(청도, 완도) 추진 후 확대 예정
- 지자체, 마을협의체 등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 밀착형 지능정보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속 운영 가능한 서비스 실증 사업 추진
 - * 주민이 직접 서비스 개선 수요 제기, 기획·피드백·평가 등 참여가 가능한 리빙랩(Living Lab)기반 실증 사업으로 현장의견 적극 반영

2) 통합적 지역개발을 통한 농어촌 정주기반 내실화

○ 지역·기능 간 통합적 개발을 통한 농어촌 생활권 구축

- 중심거점 ⇄ 하위거점 ⇄ 배후마을 간 상호 기능 연계를 강화하여 농어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생활권 구현

- 인접 도시의 기능을 보완·연결시키고 배후마을 접근성이 높은 하위거점과 협력, 복합 서비스 공급지 기능 확충(중심지 활성화)
 - * 중심지활성화(누적): ('20) 16개소 → ('21) 26 → ('22) 36 → ('23) 46 → ('24) 56
- 인접 배후마을 주민들의 기초생활 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중심지 서비스 전달의 매개·보완 역할을 하는 하위거점 조성(기초생활거점)
 - * 기초생활거점(신규): ('20) 80개소 → ('21) 80 → ('22) 80 → ('23) 80
- 낙후된 선착장 등 기반시설을 현대화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어촌과 어항을 통합한 지역특화개발(어촌 뉴딜 300)로 어촌 활력 제고
 - * 어촌 뉴딜300사업 (신규): ('19) 70개소 → ('20) 100 → ('21) 70 → ('22) 60
-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한 통합적·입체적 시설물 조성 등 뉴딜사업의 공공디자인을 개선하여 어촌뉴딜의 브랜드 육성 및 성공모델 창출
 - * 사업 대상지 중 8개소(경기 백미항, 충남 난지도, 전북 말도, 전남 달리도·안도항, 경남 설리항, 부산 동암항, 강원 어달항)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디자인 개선 업무 기준 시범 적용

○ 한국형 정주환경 모델 및 농어촌 생활서비스 모니터링 기술 개발

- 공간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주여건 평가체계, 한국형 정주환경 모델 및 농어촌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 중심지활성화 사업 및 기초생활거점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의 지표 및 표준 모델로 활용
 - * 기술 개발 목표 (누계): ('20) 2 → ('22) 6 → ('24) 10

3) 농어촌 지역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수리시설 안전관리를 통한 재해예방 및 영농안전 기반 구축

- 저수지, 양·배수장 등 노후 파손되거나, 홍수배제 능력 및 내진 성능이 부족한 재해취약시설 및 용배수로 보수·보강
 - * 수원공 개보수(누적): ('19) 121개소 → ('30) 2,082
 - * 용배수로 개보수(누적): ('19) 197km → ('30) 12,383
- 노후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사전에 정밀진단하여 보수·보강 공법 제시

- 홍수 발생시 침수 피해를 겪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 배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침수 피해 예방

* '30년까지 113.2ha 규모 상습침수피해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추진

○ 취약 어항시설 안전 대책 마련

- 해수면 상승, 태풍 강도 증가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한 국가 어항 방파제 등 외곽시설 보강사업 추진

* 국가어항 외곽시설 보강(누적): ('18) 11개 항 → ('23) 25

- 국가어항 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고('20), 내진보강설계 및 내진보강사업 추진

* 국가어항 기본시설 내진보강(누적): ('18) 11개 항 → ('23) 46

○ 산림지역 자연재해 예방 추진

- 산불진화 중심에서 예방정책으로 전환하고 산림보호 및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를 통해 농산촌 재해 취약 계층 보호

* 매년 산불재난특수진화대 435명 투입 및 산불안전공간 20개소 조성

* 산사태 현장예방단: ('20) 652명 → ('24) 1,028

4) 다양한 계층 대상 농어촌 임대주택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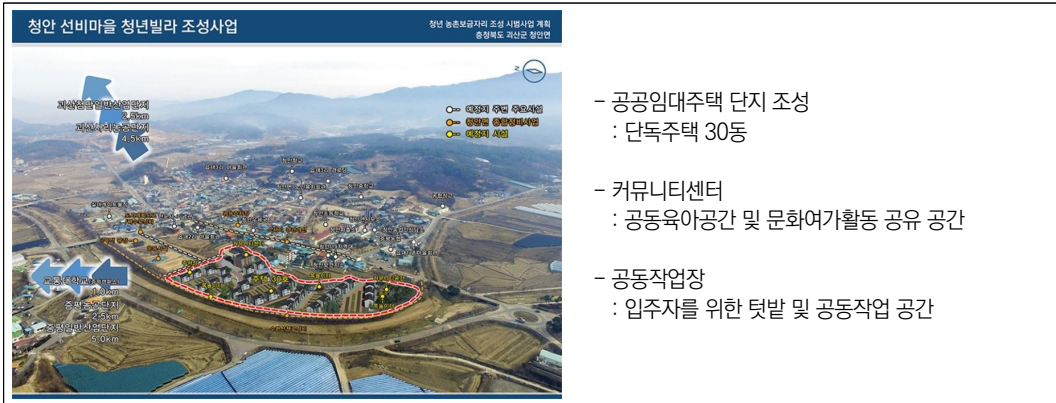
○ 청년층 농어촌유입 촉진을 위한 임대주택 단지 조성

-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개소당 30호 내외)를 조성하고, 단지 내 공동육아나눔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 동 복합·설치

*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 양육 가정 대상

* 청년보금자리 조성 목표(누적): ('21) 4개소 → ('22) 6

그림 4-8 청안 선비마을 청년빌라 조성 사업(충북 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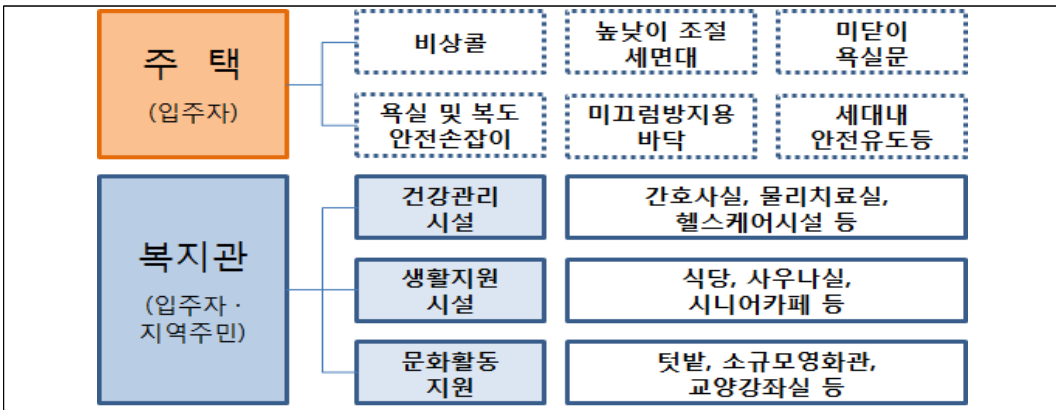
자료: 괴산군 (2019)

○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지역 임대주택 공급

-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용 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 주택 공급
- 주거여건이 낙후된 농어촌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을 연계하여 시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 고령자 복지주택 및 마을정비형 공공임대 주택: (‘20) 20개소 → (‘23) 50

그림 4-9 고령자 복지주택 개념도



자료: 국토교통부 (2019)

3.2.4. 환경·경관 보전으로 농어촌다움 실현

□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으나 난개발 심화로 인한 농어촌 어메니티 훼손 우려
 - 도시민들은 농업·농촌의 중요한 역할로서 ‘자연환경·경관의 보전’(39.7%)과 ‘전원생활 공간 제공’(19.4%)을 1·2위로 응답하였음(농촌진흥청 2018).
- 농어촌의 폐기물 문제는 주민들이 농어촌에서 개선해야 할 주된 환경문제로 인식
 - 농어촌의 주된 환경 문제: ‘쓰레기’(8.3%), ‘수질 오염’(6.1%), ‘토양 오염’(2.3%) (농촌진흥청 2018)
- 농어촌 지역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 폐기물 수거는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투기가 지속되고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는 미흡(환경부 2018)
 - 영농 폐비닐: '17년 발생량 31.4만 톤 중 19.8만 톤을 수거하였으며, 폐비닐 수거율은 지속 개선되고 있지만 '12년 이후 발생량 대비 수거율은 59.0% 수준
 - 영농 폐농약 용기: '17년 발생량 7,351만 개 중 수거량 6,079만 개를 수거하였으며, '12년 이후 발생량 대비 수거율은 78.8% 수준
 - 방치·매립된 영농 폐기물(41%) 및 영농 폐농약 용기(32%)로 인해 토양 오염과 미관 훼손 등을 초래하고 건강 위협을 가중

표 4-7 연도별 영농 폐비닐 및 영농 폐농약 용기 수거·처리 현황

(단위: 톤, 천 개)

구 분		'12	'13	'14	'15	'16	'17
영농 폐기물	발생량	331,490	332,575	329,239	322,964	314,420	31.4만 톤
	수거량	178,130	189,306	188,279	186,965	205,951	19.8만 톤
영농 폐농약 용기	발생량	74,014	72,350	73,290	71,824	72,458	7,351만 개
	수거량	51,916	57,987	55,953	58,469	59,295	6,079만 개

자료: 환경부 (2018), 환경백서 및 환경부 내부자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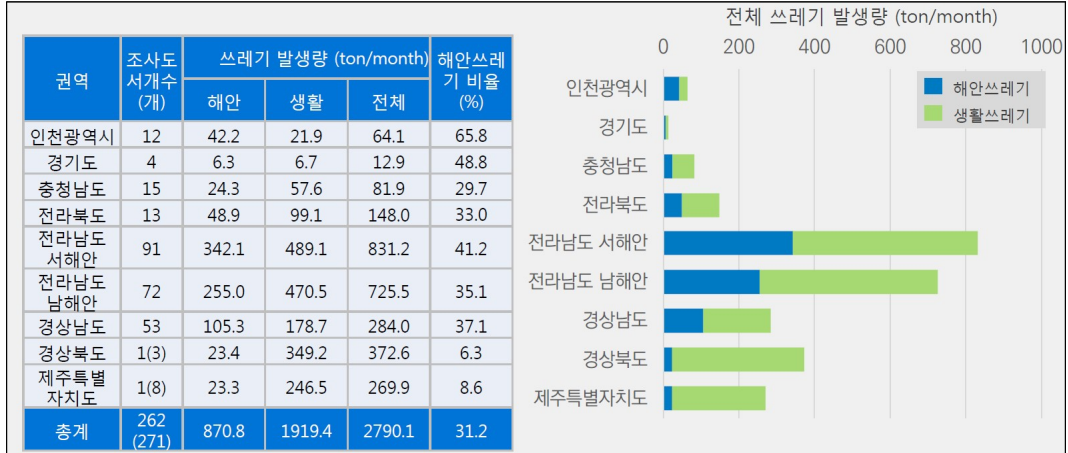
- 해양폐기물은 선박사고의 1/10의 원인, 어업 생산성 저하, 생물 서식지 파괴, 수거·처리 비용 발생 등을 초래¹²⁾
 - 매년 우리나라 바다로 들어오는 해양쓰레기 총량은 약 177천 톤으로 추정(육지로부터 67%, 바다로부터 33%)되고, 2010년 이후 매년 국가해양쓰레기 연안 모니터링을 실시 중
 - 육지에서는 홍수 때 하천을 따라 들어오는 양이 제일 많고, 바다에서는 수산업에서 발생한 폐어구가 제일 많이 들어옴.
 - 해양폐기물 수거율('18): 68,850ha의 면적에서 95,632톤 수거

- 이러한 해양쓰레기가 섬·도서지역에 집적되어 해안쓰레기로 나타나고, 주민 및 관광객 등에 따른 생활쓰레기도 섬·도서 지역에 따라 다량 발생
 - 해안쓰레기 발생량을 분석하면, 매달 최소 265톤에서 최대 약 871톤이 발생하고, 해안쓰레기 발생량의 68%가 전남 도서지역에서 발생
 -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8)을 토대로 추정하면, 총 1,919톤/월이고 이 중 403톤/월이 생활쓰레기 관리 제외 도서지역에서 발생
 - 도서지역에 대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최대 2,790톤/월로 산정되고, 전체 쓰레기 발생량 중 해안 쓰레기 발생량은 31%에 해당

¹²⁾ 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www.malic.or.kr) 운영을 통해 연안 해양쓰레기 분포 및 변화 추이를 분석

그림 4-10 도서지역 해안 및 생활 쓰레기 발생량 추정

(단위: 톤/월)



자료: 김용진 (2019). 도서지역 쓰레기 실태 및 관리방안 제안, KEI 세미나 발표자료

○ 농어촌에 만연한 슬레이트¹³⁾ 지붕의 노후화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유해폐기물 발생 및 주민 노출 확대

- '10년 기준 농어촌 소재 슬레이트 지붕 약 57만 동 중 66.7%(38.3만 동)이 30년의 내구 연한을 경과하여 지속적으로 폐기물 발생
- '13년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1,409천만 동의 슬레이트 건물이 존재하고 도 지역에 91.2%가 분포, 용도별로는 주택용이 52.0%, 축사 5.4%, 창고 31.4% 등으로 분석

표 4-8 농어촌 슬레이트지붕 연식별 분포

(단위: 천 동)

총계	'60년 이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이후	확인불가
574 (100%)	213 (37.1%)	55 (9.5%)	72 (12.6%)	43 (7.5%)	79 (13.7%)	12 (2.0%)	100 (17.5%)

자료: 환경부 (2012), '09.11-'10.10. 슬레이트 사용실태 조사 및 내부자료 참고

13)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10~15%) 건축자재로서, '60-'70년대 보급되었던 석면 플레이트 지붕의 내구 연안 경과로 부식비산 또는 주변토양 오염 등 석면피해 우려(환경부, 2012, 농어촌 폐기물 적정관리대책 연구)

○ 토양 및 수질 등 오염원으로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관리 필요

- 지하수 시설 수는 전국적으로 169만 개('17)로 생활용 51.6%, 농업용 47.4%, 기타 0.2%이며, 허가 형태별로는 허가 1.7%, 신고 90.2%, 경미 및 기타시설 8.1%임(환경부 2018).
- 수량 부족 및 고갈, 시공 불량 및 운영관리 소홀, 상수도 대체, 소유주 변경, 노후화 및 염분 증가 등에 따라 방치공 발생
- 방치공 찾기운동 등을 통해 '18년까지 약 8.2만 공을 발굴하였지만, 방치공은 토양 및 수질오염원 등으로 농어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

그림 4-11 농어촌 지역의 방치공 사례



자료: <http://www.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429>,
<https://blog.naver.com/0810water/221620314636> (검색일 2019.8.23.)

○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산간·오지, 섬·도서 지역 등 폐기물 처리 사각지대가 아직 존재하며, 수거가 어려운 폐기물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

- 폐농약용기 및 폐비닐 회수·보관을 위해 '14년부터 마을 단위의 1차적인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농약용기 회수 촉진을 위해 수거 보상금을 '16년에 현실화하여 지급 중
- 농기계, 농작업도구, 온실 등 영농시설·도구의 재활용체계 강화 필요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14-'18)을 마련하였지만, 섬·도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쓰레기 관리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 필요
 - 섬·도서지역은 육상과 달리 고립된 지역에서 생활쓰레기에 더해 해양쓰레기도 발생하여 적정 수거, 운반, 처리 등 쓰레기 관리에 어려움 존재
 - 섬·도서지역의 해안쓰레기는 예산, 인프라 제약 및 육지 우선 접근으로 도서해안 관리가 부족하고, 생활쓰레기의 경우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으로 지정되어 부정적인 자체 처리가 이루어짐.

- 지정폐기물인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2010년 12월에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11-'21)과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17)을 마련하였고, 환경부는 슬레이트 처리 국고사업을 통해 매년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
 - '11년부터 '18년까지 153,900동(국고 1961억 원)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이루어졌으며, 현 추세대로 간다면 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철거지원 계획('21년 188,600동)은 달성할 것으로 판단
 - 영세 농어가의 경우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만 지원하여 지붕 개량비 부담으로 지붕 철거에 소극적이고 무단폐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우려
 - 농어촌 지역의 슬레이트 주택(574천 동) 처리를 위해서 현 추세('11-'18)대로 간다면 앞으로도 19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여 보다 적극적인 슬레이트 처리 노력이 요구됨.
 - 주택 인근의 축사, 창고 등 비주거용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도 철거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 확대가 필요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현장조사에서 ① 생활쓰레기 혼입, 쓰레기 무단 투기, 비닐류 분리배출 미흡 등 관리 문제, ② 적합한 부지 선정, 사용 부지에 대한 적정한 보상 미흡 등 시설 입지 문제, ③ 사업 시행 후 발생량과 수거량의 모니터링 미흡 등 성과측정 문제가 제기됨.

○ 고투입 집약 농업과 축산의 규모화 등으로 수자원 함양 및 정화, 물질에너지 순환, 생태 서식처 제공 등과 같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훼손되고 있음.

- 농어촌 폐기물 및 축산분뇨 등 위해요소의 체계적 관리 부재로 인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 수요 대응 한계

* '90년 대비 사육두수 136% 가축분뇨 발생량도 76% 증가(환경부 2017)

- 우리나라는 양분수지 측면에 있어 OECD 평균보다 질소는 3.4배로 1위, 인은 8.6배로 2위임. 이로 인해 수질오염은 물론 토양 양분 과도로 인한 합성화학 농약 사용이 증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67.7조 원으로 추산되며(국민농업포럼 2014),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환경보전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3.6조 원(정학균 외 2015)

○ 농어촌 환경·경관 보전에 대한 주민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남(농촌진흥청 2018).

-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중 '자연환경/경관의 보전'(37.4%)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원생활 공간 제공'(19.4%), '국토의 균형 발전'(12.4%), '농어업 유산 보존/계승'(12.2%), '식량의 안정적 공급'(10.4%), '관광/휴양 공간 제공'(8.1%) 순으로 나타남.

- 마을 경관에 대한 인식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마을(동네)을 가꾸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필요한 자재, 활동비 등)'고 응답자의 절반인 46.5%가 공감하는 태도를 보임.

○ 경관보전직불제는 행정(지자체)이 주도하여 경작활동을 수행하고 주민들은 보조금만 수령하는 형태가 고착화되어 있음.

□ 정책 방향

○ '깨끗한 청정 농어촌마을 구현'을 위해 기존 정책의 강화와 자원순환 및 오염 관점에서의 사각지대 해소를 고려, ①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②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③ 농어촌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 ④ 농어촌 폐기물 등 주민 인식 개선을 방향으로 도출

- * 농어촌 폐기물 수거·재활용 확대, 해양폐기물 발생 집중관리, 노후 석면슬레이트 조기 처리 등
- * 산간·오지, 섬·도서 등 관리 강화, 폐농기계, 폐어구, 폐어선 등 관리 강화

○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 농어촌 지역에 매립, 소각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확충 및 분리 배출환경 개선사업 확대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 농기계·기구, 폐온실, 폐선박(FRP어선 등), 폐어구 등 재활용 강화
- 산간·오지지역, 섬·도서지역 등 폐기물 처리 사각지대 개선

○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 하천·하구 쓰레기 해양 유입 사전 관리
- 해양폐기물 정화 및 섬·도서 폐기물 관리체계 강화

○ 농어촌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

- 노후 석면슬레이트 조기 처리
 - * 내구 연한 경과(30년 이상) 노후주택 전면 철거·처리
 - * 축사 및 창고 등 비주거용 슬레이트 지붕 철거 추진
- 방치공 오염원 관리 강화
 - * 방치공 오염원 실태 조사, 원상복구 지원사업 확대 등

○ 농어촌 폐기물 등 주민 인식 개선

- 다량 배출 시기에 '집중 수거 기간' 운영 및 주민 교육 확대 등
- 농어촌 폐기물 및 환경오염원 관련 정보 공개, 인식도 개선 등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다움 증진의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 제30조(농어촌경관의 보전),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관 보전을 위한 시책 마련과 주민과의 협약을 명시하고 있음.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구현하는 보다 포괄적 농어촌다움 증진활동을 담아야 함: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은 경관 형성, 환경 보전(재생 가능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지역 사회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함(김병률 외 2017).
- 농어촌 경관 보전 측면에서 구체성이 떨어지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조문을 보완하여 지역 중심의 경관보전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법으로 개정함.
- 지역별로 특화된 농촌공간계획을 지자체가 수립함을 전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농어촌다운 공간의 형성을 위한 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일본은 경관법을 기초로 행정단체를 경관행정단체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경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50만 이상 도시, 20만 이상 도시, 특별시의 경우는 자동으로 경관행정단체로 지정되고 시정촌의 경우는 도도부현 지사와 협의 및 동의를 얻어 경관행정단체로 지정함.
- 경관법을 기초로 자주조례에 의거하여 지자체가 경관계획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하게 하고 행정구역 내 도시계획구역 경계와 별도로 경관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경관법에는 경관협의회 구성, 주요 건조물 및 수목의 지정과 관리, 경관 중요 공공시설 및 경관농업 진흥지역 정비 등 지정, 경관협정, 경관 정비기구 지정이 포함되어 있음.

○ 농어촌다움을 증진하는 활동 주체의 육성과 지원

- 주민 자율적 농어촌 경관 가꾸기 활동의 다양한 주체(농업인, 지역 주민, 단체, 관심 있는 도시민)를 육성하고 경관관리 활동을 촉진
- 농어촌다움을 증진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공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주민 공동

체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에 대하여 경진대회를 통해 시상하여 자긍심을 제고

- 주민 활동 주체가 사회적경제 주체로 발전하도록 법인격을 부여하고 활동에 따른 제약요인 제거 및 법인활동에 대한 교부금 지원

○ 산림청은 주민과 국민이 키워가는 산림을 만들기 위해 국유림과 채종림 관리에 주민참여를 촉진

-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의 산림자원 보호·육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유림관리소와 지역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함.
- 마을 주민은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 등의 국유림 보호활동을 전제로 국유림 내에서 생산 가능한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 받아 활용할 수 있음.
- 국유림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여 국유림 활용을 통한 마을 주민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자발적 국유림 관리활동을 촉진함.

○ 국외에서는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농촌환경보전 활동을 지원

- 영국의 농촌환경관리협약(Countryside Stewardship), 스위스 공익형 직불제, 일본의 다원적 기능 직불제 등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시행
- 미국 농무부 자연자원보호청과 캐나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양분계획대로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정량의 비료를 적정 비율로 적정 시점에 시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농촌환경을 관리
- 일본은 「생물다양성 기본법」을 통해 사람들의 생활, 생산, 활동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고자, 이차림·농지·저수지·초지 등의 사토치사토야마(里地里山)를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이자 주민들의 생산활동의 다원적 기능을 가진 곳으로 가치를 부여하여 주민이 각각의 환경을 유지관리 하고자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고 다면적 교부금 제도로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의 유지 발휘에 기여하는 지역 공동 활동을 지원

○ 재정분권과 연계한 농어촌경관계획 수립과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마련

- 농어촌의 생태환경을 복원·유지·관리하기 위한 농어촌 주민들의 활동을 농업환경프로그램(공익형직불제)과 연계 지원
- 친환경농업을 확대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의 관리기반을 마련

○ 일본의 NPO법과 EU의 리더(LEADER) 프로그램은 마을만들기 지원조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 세제·금융, 예산의 기반을 마련

- NPO법을 통해 보건·의료, 복지, 사회교육, 마을만들기, 문화·예술, 스포츠, 환경, 재해구호, 지역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기부나 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공공활동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LAG(Local Action Group)는 농어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촉진함. LAG가 사업계획(business plan)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EU집행위원회가 그것을 승인하면, LEADER 프로그램의 재정 및 활동상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추진 과제

1)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 영농폐기물·부산물 집중 수거 기간(봄·가을 농번기 전후) 운영, 수거 보상금 지급 물량 확대 및 종량제 봉투 등 폐기물 수거비 지원

*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물량: ('20) 197천 톤 → ('24) 203

- 농어촌 지역 공동집하장 확대(~'21년, 매년 815~950여 개),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 확보 등 영농폐기물 수거·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 확보: ('19) 800개소 → ('24) 1,660, 매년 172개소

- 도서, 산간 등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 폐기물종합처리시설: ('19) 101개소 → ('24) 116

○ 해양폐기물 저감 방안 마련 및 해양 오염 자율 방제 활동 추진

- IT 등을 활용한 수거 스마트화, 도서 등의 사각지대 수거 및 바다환경지킴이 확대 등 해양쓰레기 수거 강화

* 해양쓰레기 수거: ('20) 10.7만 톤 → ('24) 11.9

- 유실된 페어구·폐그물 등 침적폐기물 수거를 확대하고 어구 부표 보증금 제도 도입 및 어업용 페어구·부표 집하장 확충

* 침적폐기물 수거: ('18) 19백 톤 → ('24) 38

- 해양오염 사고 시 자율적 방제 활동을 위한 '국민방제대' 운영

* 국민방제대 운영 계획: ('20)300개소 → ('21) 500 → ('22) 700 → ('23) 1,000

2) 농어촌 지역 미세먼지 관리 강화

○ 농어업·농어촌 미세먼지 저감 추진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등 농민의 자발적 수거 유도 및 장기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으로 소각 원인물질 원천 차단

* 지자체·농협·농업인단체 등과 협업, 봄·가을 농번기 전후(2~3월, 11~12월)

- 12~4월 불법소각 기동단속반 확대 등 지도·점검 강화 및 불법소각 금지 홍보 병행

* 주말과 일출 전·일몰 후 산림 주변 등 불법소각 집중 단속(시·군별 2개 반 이상)

* 농진청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연간 252천 명), 반상회보, 마을방송 등

○ 축산·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 농가의 퇴비 부숙도 관리를 위해 퇴비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퇴비 부숙도 관리반을 구성하여 농가 부숙도 지도·점검 강화

*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 촉진 및 농경지 살포 퇴비의 부숙도 관리 등을 위한 퇴비유통 전문조직 육성('19: 140개소 → '22: 160 → '24: 180)

* 지도·점검 대상을 대규모 농가 → 중·소규모(1,500㎡미만)까지 확대('20~)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와 관리 강화로 농가 자율적 암모니아 저감 관리 유도

* 가축 사육밀도 관리, 환경오염 방지 등 축사 내·외부를 청결히 관리하여 악취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가축 분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축산농장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19) 2,565개소 → ('22) 5,000 → ('24) 8,000

- 악취(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확대, 배출기준 설정 등 축사관리 환경규제 강화 및 축·돈사 현대화를 통한 축산 암모니아 저감 추진
 - * ('19년) 15개 지역 / 186 농가 → ('22년) 33/400 → ('24년) 43/500
 -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강화, 위반시 처벌 조항 강화 등을 위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20년), 악취(암모니아) 배출 기준 재설정('21년)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어촌 환경 자원 활용

○ 친환경 농어업 프로그램 도입 및 생태 복원을 통한 소득화 추진

- 농업환경 개선 필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별 환경 개선·보전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 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규모: ('20) 25개소 → ('24) 40
- 바이오플락, 순환 여과 등 선도적인 환경 친화적 첨단양식기술을 접목한 민간 양식시스템 지원 (~'24년, 매년 13개소)
- 갯벌복원사업으로 갯벌의 가치를 살리고 복원지역 소득 증진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19년, 5개소 → '22년, 7)

○ 축산분뇨·농림축산부산물 자원화 및 대체에너지 활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증설 및 노후시설 개선 시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고체연료화 등 바이오에너지화 활성화
 - * '23년까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5개소 신·증설 및 노후시설 25개소 개선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부산물 비료 구입 지원
 - * 유기질 비료 지원 대상 농가: ('20) 75만 → ('24) 375
- 농어촌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양식어가에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 * 친환경 에너지 시설 보급 규모: ('20) 240대(51천kW) → ('24) 260대(55천kW)

○ 산림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보급

- 농산어촌 에너지취약지역 등에 목재펠릿보일러를 보급하여 연료비 절감 유도 및 목재펠릿의 안정적인 수요처 마련
 -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0) 1,450대 → ('22) 1,600 → ('24) 1,600
- 산촌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22년까지 4개소 조성)

4)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 농촌공간계획을 통한 난개발 방지

- 공간에 대한 용도가 지정되고 활용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先계획 - 後지원체계' 마련
- 공간에 대한 활용 전략과 그제 맞는 용도의 설정, 지원 가능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계획 없이 투입되는 사업 방지
- 농어촌 공간 형성 및 발전계획과 이에 기초한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계획을 승인하면 사업이 확정되는 '농촌계획시설' 도입
 - * 농어촌 지역에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 시설이나 기초적 인프라의 설치 요건 제시

○ 주민 자율적 경관보전활동 활성화

- 경관 형성 효과가 높은 작물 중심으로 경관보전직불제도 개선
 - * 경관작물: 갯,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달맞이꽃, 라벤더 등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보조금 중 일부(매년 3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어장 정비 등 마을 경관 보전에 활용

○ 농어업 유산 발굴·관리 및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 유산 지역 내 핵심지역 지정, '주민협의체' 대상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한 유산 보전 관리

- 국가 농어업 유산 지정 및 FAO 세계 중요 농어업 유산(GIAHS) 등재 지속 추진

* 국가 중요 농어업 유산 지정 목표: 농업 20개(~'24) / 어업 10(~'24)

* 세계중요농업·어업유산: 담양 대나무밭 농업시스템,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구례 산수유 농업,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등 총 4개소(농업), 제주 해녀어업,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등 총 2개소(어업) 단계적 등재 추진

○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 관리 방안 및 활용 기술 개발

- 농어촌 경관 평가지표 개발 및 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지역 자원관리 모니터링 기술 개발 연구

*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 기술개발 및 현장 지원: ('20) 2개 → ('22) 10 → ('22) 18

4. 경제·일자리 부문

4.1. 여건 및 개선 방향

□ 경제활동 다각화를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 필요

○ 농업소득 정체에 따라 새로운 농가소득원 발굴 등 다각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제3차 기본계획은 6차산업화 등 농어촌 산업의 융복합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초점을 두었으며, 향후 기반 내실화와 농어촌 융복합산업의 고도화 필요

* '지역 단위 6차산업화 육성 기반 마련',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농수산물 가공 및 신유통 활성화', '사업 주체별 맞춤형 지원', '지역에 적합한 6차산업화 육성'에 집중

- 2018년 실시한 농어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정책과제 중 6차산업화 기반 마련은 '중요한' 정책으로 26.0%(총4개 부문 중 2위), '우수한' 정책으로 31.5%(총4개 부문 중 1위)가 응답

○ 농어촌 관광, 로컬푸드 등 도·농 교류 관련 농어촌 주민 및 국민의 수요가 증가

- 농어가 가공, 직거래/로컬푸드 참여 및 의향층에서 느끼는 도·농 교류 및 6차산업 추진시 어려움은 '고객·판로 확보(홍보 및 마케팅)' 비율이 높음(농촌진흥청 2018).

- 2019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국내 관광 중 농어촌 관광 비중)' 목표를 980만 명으로 설정하였으나 2016년에 1,001만 명을 유치하여 조기 달성함(송미령 외 2018b).

□ 농림어업·농어촌 일자리 증가 추세 지속

○ 농어촌 생활에 대한 높아진 선호도, 농업법인 중심 인력구조 개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가 최근 증가 추세로 전환

- 2017년 3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다시 늘고 있음. 2018년 8월 기준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8.4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6.9만 명이 증가함.

-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증가 추세는 농업 및 비농업 부문 모두 도시지역의 증가 추세를 상회함.

* 총 일자리 증가 및 증가율('10~'15): 270만 명, 18.4%(도시) vs 126만 명, 26.2%(농어촌)

□ 청년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고용 지원

- 농림어업 청년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 서비스 만족도는 여전히 낮음(유은영 2018).

-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일자리 지원, 정착 지원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항목에 5.0점(10점 만점)으로 최저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연령별 차이에서 20~30대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세부항목은 '소득 기회(4.9점)'로 나타남.

- 귀농·귀촌 인구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나 소득 문제로 인해 역귀농, 역귀촌 현상 발생

- 귀농·귀촌인은 2013년 41만5천 명에서 2017년 50만9천 명까지 증가(송미령 외 2018a)
- 역귀농, 역귀촌을 희망하는 이유로 생활하기에 소득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농림축산식품부 2016).

* 역귀농자: 37.8%, 역귀촌가구: 44.2%

- '소득 기회', '경제여건 향상', '농외소득', '일자리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등 모든 항목에서 귀농·귀촌인의 만족도가 가장 낮음(유은영 2018).

- (개선 방향) 청년 및 귀농·귀촌인은 농어촌 지역에 활력이 되는 인적자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필요

- 실제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농업경영역량 개발 지원
- 농어촌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청년의 창업 공간 및 기회 마련
- 지역 단위 창농 지원조직 운영으로 농업인력 육성 거버넌스 활성화 및 연계 지원체계 구축

□ 미래 농어촌의 핵심인력으로서 다문화·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 고령화 및 과소화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에 특히 청년 여성 인력 부족 문제 심화

- 2017년, 농가인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5.3만 명 더 많았으나 20~30대 청년 여성 농업인은 2010년에 비해 8.6만 명이 감소한 11.2만 명으로 집계됨(송미령 외 2018a).

○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수는 2018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 새 약 3배 증가하면서 농업 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

- 농어촌 지역 외국인 수: ('10) 13만 명(전체 인구의 1.5%) → ('15) 37.7만 명(4.0%) / 군 지역 국제결혼 건수 ('03 - '17): 40,422건(송미령 외 2018b)

○ (개선 방향) 농어촌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농어촌 여성 및 다문화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및 고용 지원 확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농어촌 여성·다문화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직업훈련 및 교육 강화를 통하여 다문화·여성 인력이 농어촌 경제활동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4.2. 세부과제: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주요 과제	1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산업 고도화 •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푸드플랜 체계화 			
	2	농어촌 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연계강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콘텐츠 발굴 • 농어촌 관광 인프라 개선 			
성과 지표	3	농어촌 주민 창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및 귀농·귀촌인 창업 촉진 • 농산어촌 신산업 육성 			
	4	농어촌 주민 구성을 고려한 일자리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여성 역량강화 및 고용지원 • 귀농어·귀촌인 및 잠재적 농어촌 이주 대상자 취업 지원 •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 			
성과목표			2020	2024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건수(누적) -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			90개소	130개소 전 시·군
농어촌 관광 활성화 - 농어촌 관광 여행 일수 (1인 평균)			0.9일	2일
농어촌 주민 창업 촉진 - 농산업 창업 교육 인원 (연간) -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 육성			400명 150명	800명 450명
농어촌 주민 구성을 고려한 일자리 다변화 - 진로 체험농장 육성 - 농어촌일자리지원센터 운영			6개소 78개소	50개소 102개소

4.2.1.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 현황 및 문제점

- 소비시장 변화에 대해 개별 경영체가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 간 시너지 효과 구현 필요성 증가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간편식 수요 증가,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욕구 증가, 외식 수요 증가 등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에 각 경영체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
 - 농산물 생산자의 수평적 연합에 따른 규모화 효과와 가공, 제조, 판매 등의 수직적 연합과 연대를 통한 범위의 경제 효과 추구 필요성 증가

- 농업의 융복합화는 산업적 경쟁력뿐 아니라 농촌공동체 활성화 전략인데 그간 파급효과는 미미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정책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100점 만점 기준 50점 미만으로 낮음. 세부적으로 소득 기회 획득, 경제활동 여건 개선, 다양한 소득기회 제공에 대한 만족도 모두 50점 미만
 - 성공 또는 우수 사례는 개별 경영체 중심 사례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우수 사례는 발굴되지 않고 있음.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융복합화를 위한 기반 구축 중심이었으며, 향후 기반 내실화와 농어촌 융복합산업의 고도화 필요
 - 융복합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에 적합한 6차산업화 육성 기반 마련’,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농수산물 가공 및 신유통 활성화’, ‘사업주체별 맞춤형 지원’, ‘지역에 적합한 6차산업화 육성’에 집중함.
 - 융복합화 기반 구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안이 부족했고, 기반 구축 이후의 전략에 대한 부분이 미약했음.

○ 2017년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국가 및 지역푸드플랜 수립이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푸드플랜의 개념과 실행 방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한 실정임.

- 푸드플랜은 1970~80년대부터 대안 먹거리 운동으로 시작되어 도시 단위의 푸드플랜 수립으로 추진되었음(김종안 외 2018). 이후 2007년 세계 식량위기를 거치면서 국가 단위 푸드플랜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함.

- 우리나라에서는 농식품부가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기 이전에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시작함.

* 푸드플랜 수립 완료: 전주시(2015년), 서울시(2017년), 화성시(2017년), 홍성군(2018년), 경기도(2018년)

- 국가푸드플랜은 범부처 차원에서 식품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복합적인 과제를 발굴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및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 과제 제시(정은미 2019)

- 지역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식품부가 2018년 선도 지자체 9개 지역을 선정하였음.

* 농촌형 2개소: 충남 청양군, 전남 해남군

* 도농복합형 4개소: 강원 춘천시,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전북 완주군

* 도시형 2개소: 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 광역형 1개소: 충청남도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푸드플랜 정책의 세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허남혁 2018).

- 푸드플랜 추진에는 보건, 환경, 문화, 교육, 주민자치, 공동체, 사회적 농업 등의 주제를 다루어야 하지만 현재는 농산물의 지역적 유통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 지역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농식품부 내 다른 부서와의 협력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역푸드플랜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통합적 지역먹거리 관리 센터의 운영에만 초점

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단지 먹거리의 유통이나 식품 생산 판매, 교육 정도에만 중점을 두는 문제가 있음.

- 지역푸드플랜 수립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가 미흡함.
- 지역푸드플랜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의 행정 주도로 추진하게 되면서 지역푸드플랜이 지역 내 식품관련 시설이나 건물을 신축하고 관련 사업체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현상이 나타남.

□ 정책 방향

○ 농촌융복합산업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종 산업간 수평적·수직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업종·지역·민관 여부에 제한되지 않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독려

- 농어촌 지역 및 지역 단위 다양한 민간단체 및 기업의 참여를 장려할 필요
- 지역 단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부처 사업 연계 활용 필요
- 농업인의 부가소득 향상 활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민들이 농촌융복합산업 주체로 활동하도록 육성

○ 지역 단위 모델 등 다양한 농촌융복합산업 성장 모델 육성

- 기존의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이 개별 경영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 단위 시너지 효과에 따른 농촌공동체 지역활성화 기여에는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려는 목적
- 마을 단위, 읍·면 단위, 시·군 단위 융복합 시범 사업(지구 선정 작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사업 중심)
- 로컬푸드의 기획생산 개념 및 지역푸드플랜의 지역 내 식품 생산·유통·소비 개념과 연계한 지역 단위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

○ 지역 특색에 맞는 푸드플랜 수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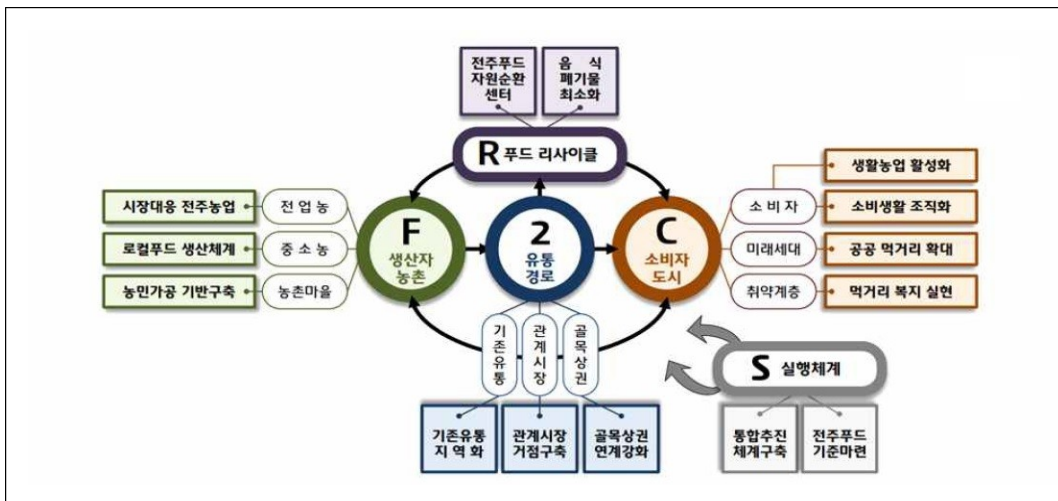
- 지역 농산물에 대한 생산, 소비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먹거리 계획

- 먹거리 정의 실현, 유통비용 감소, 안정적인 판로 및 소득 증대 기회 제공(송미령 외 2019)
- 지역 단위 먹거리 실태 분석에 기반하여, 지역의 먹거리 정책 목표와 우선 순위 설정 지원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푸드플랜 유형별 지원 검토 필요
- 푸드플랜 수립 및 실행을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전주시 푸드플랜 추진 사례〉

- 외국의 푸드플랜 사례를 국내에 적용한 최초의 지역먹거리 종합계획
-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순환의 푸드플랜 과정을 제시
- 해외 사례를 참고하였지만 전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특성있는 계획을 수립
- 2015년: 푸드플랜 수립 완료 후 관련 조례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 2016년: 소규모 참여농가의 생산물을 공급받는 푸드 직매장 3곳 개설
- 2017년: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참여 본격화
- 2018년: 서울시와 도·농 상생 협약을 추진하여 재도약의 계기 마련

그림 4-12 전주시 푸드플랜 추진 체계



자료: 김종안 외 (2019)

□ 추진 과제

1)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산업 고도화

○ 융복합산업 제품을 위한 성장단계 맞춤형 판로 다각화

* (초기)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등 지역내 소비 촉진, (성숙)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등 전국 단위 대형 유통망, 해외진출 지원

- '지역먹거리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로컬푸드에 지역 융복합산업 가공제품 우선 소비 추진
- 편의점·수도권 무인판매대 등 국내 판로 확대 및 해외박람회·k-food fair 등 수출시장 개척 참여 지원

○ 지역 특화상품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

- 농진청 지역특화작목연구소(46개소)와 협업을 통해 지역 특화 품목 발굴·개발, 생산 및 상품 개발 추진

* '24년까지 지역 특화품목 지구 총 20개소 신설

- 지역특화 수산물 생산, 가공 및 유통이 집적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확대('19, 13개소 → '24, 19)
- 임산물 주산지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 기반과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 단위 클러스터 조성·확대('20, 8개소 → '24, 13)

○ 융복합 산업체 취·창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 교육 확대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지역 대학 내 융복합 사업체 연계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융복합 분야 취·창업 활성화

* 학교와 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간 현장 연수 및 연수 후 취업 약정 MOU 추진

2)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푸드플랜 체계화

○ 농산물 먹거리 선순환체계의 내실화 및 지속적 확장

-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하고, 직매장에 체험·교육·복지 등의 기능을 추가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조성

* 로컬푸드 유통 비중: ('18) 4.2% → ('19) 6 → ('22) 15

* 농협과 협력하여 하나로마트를 거점으로 판매장 구축('18 : 229개→'22 : 1,210)

- 시민사회-지자체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민간 우수모델·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실적 측정이 가능한 '(가칭)로컬푸드 지수' 개발·운영

* 지자체, 로컬푸드 운영자, 시민활동가, 생산자 등으로 4인 1팀을 구성하여 지자체별 푸드플랜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실무 교육·소통 과정을

-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연계된 역량 있는 창업 경영체 육성 및 지역 농산물 공동 가공 활동 지원

* 가공장비 및 설비 공동 활용, 가공기술·식품위생 등 창업교육·코칭, 시제품 개발 등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누계): ('10~'19) 86개소 → ('20) 90 → ('22) 110

-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한 농가 조직화 및 생산자·소비자 거버넌스 운영을 지원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품질·안전 관리체계 구축

○ 지역 수산물의 유통체계 확충

- 산지 거점유통센터, 대도시 거점별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와 연계한 전국 단위 유통망 구축 및 온·오프라인 직거래 망 등 확충

* ('19까지) 8개소 → ('20) 9 (신규 1)

* ('19까지) 2개소 → ('20) 3 (신규 1)

-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광역 개념의 로컬푸드 지구를 설정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에 수산물 입점 등 지역 단위 수산물 공급처 확대

- 지역 내 신선한 로컬 수산물을 집적·유통하여 인근 단체급식(학교·유치원·군 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 공공급식센터 설립('22~)

4.2.2. 농어촌 관광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농업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웰빙(well-being) 소비 트렌드, 주5일 근무제 등 농어촌 관광 수요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농어촌 관광을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

- 2002년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시작으로 행안부, 문화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등 다양한 부처가 10여 년에 걸쳐 꾸준히 상품 및 서비스 공급 정책을 실행한 결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을 비롯해 관광농원, 교육농장, 농가맛집, 농가민박 등 공급 기반이 크게 확충
- 마을 단위 농어촌 관광 사업은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공동경영의 문제, 시설물의 과잉 공급,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마을 공동체 내의 갈등 발생, 무임승차 문제 등으로 인해 농어촌 관광 경영의 혁신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박시현·김용렬 2012)
- 상당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마을 간 차별성이 부족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도가 낮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박주영 2016)

○ 2016년 한 해 동안 농어촌 관광을 경험한 응답자는 24.4%로 2014년에 비해(14.7%) 9.7%p 증가(농촌진흥청 2016). 하지만 2016년 국민 여행경험률이 89.5%(문화체육관광부 2017)임과 비교하면 국민의 농어촌 관광 경험 저조

- 도시민 농어촌 관광 실태조사가 실시된 이래 농어촌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하지만 평균 관광 일수는 2009년 대비 0.15일(2016년 1.96일) 증가

○ 농어촌 관광의 공급 기반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관광을 경험한 소비자가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농촌관광 인프라 부족(47.2%)'. 그 뒤를 이어 '바가지 요금'과 '빈약한 체험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지적(15.1%). 이와 같은 이유는 농어촌을 재방문할 의사 없음으로 연결(농촌진흥청 2016)

○ 농어촌 관광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정부 주도로 등급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체험휴양마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개별 경영체의 품질 개선에 한계

- 제3차 삶의질 기본계획 종합평가 결과, ① 농어촌 관광 등급제 체계화, ② 농가민박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 ③ 체험농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④ 농어촌 관광 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등의 개선 과제 도출

□ 정책 방향

- 농어촌이 보유한 자원과 인프라 활용이라는 공급자적 접근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콘텐츠와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수요 지향의 관광 콘텐츠 개발과 품질 제고 노력 추진

- 한국관광공사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한 2019년 여행트렌드는 ‘BRIDGE(브릿지)’라는 키워드로 제시. B(break the generation gap: 베이비붐 세대부터 밀레니엄 세대까지 모두가 함께 즐기다), R(recreational activity: 다양한 액티비티와 즐길거리를 체험하다), I(influential contents: 영상에서 본 그곳으로 떠나고 나의 기록을 영상으로 남기다), D(delicious foods: 음식과 맛집을 찾아다니며 미각과 시각을 만족시키다), G(go anytime: 특별하지 않은 날에도 일상처럼 언제든지 여행을 즐기다), E(east coast: 심리적, 물리적으로 가까워진 강원도에서 여행을 즐기다) 등의 트렌드는 농어촌 관광으로도 충족 가능
-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의 이용, 자연관찰과 체험에 의한 육체적·정신적 재충전, 아름다운 농어촌 경관에서의 휴식·휴양, 고유한 지역문화와의 만남 등 도시민이 필요로 하는 가치(기능) 부각

- 개별 농어촌 관광 인프라의 시설 개선 및 현안 해결보다 통합적 관점의 체계적 노력과 역량 강화 필요

-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삼삼예예미미’ → 유희시설을 관광트렌드 수요에 맞게 재생
 - * 전북 완주군은 마을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예술가들과 힘을 모아 1920년대에 지은 삼례 양곡창고를 문화공간으로 재생하여 관광객들에게 호평
- 담양군 담빛예술창고(복합전시실, 문예카페(1층)와 문화체험실(2층) 등으로 재생)
- 프랑스의 농어촌 관광 품질인증 공동체인 BAF(Bienvenue a la ferme·농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민간 주도적으로 관광 품질 관리

- * 농업회의소가 주도하며, 농업인의 이익을 위해 만든 네트워크 조직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경영다각화 활동 수행
- * 자체적으로 BAF에 속한 농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교육 시행

○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지방분권형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 체계 정립 필요

- 기 추진사업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사업간 내실화와 실효성 강화를 위한 6차 산업 고도화 방향 수립 필요
- 지역 단위 융복합산업화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획·집행·평가·환류의 기본 체계가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중간지원조직인 6차산업지원센터와 지자체, 중앙정부 그리고 지역 단위 경영체 및 유관기관들 간의 협력체계와 운영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 과제

1) 지역 자원 연계 강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발굴

○ 농어촌·농식품 자원 연계 및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사업화 촉진

- 세대별 선호하는 여행 유형, 치유·힐링 등 수요가 높은 농어촌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유관기관·업계 협업을 통해 사업화 추진
- 지역별 대표 음식·전통주 등 음식자원이나 경관농업 활성화 지역 등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 * 찾아가는 양조장: ('20) 42개소 → ('21) 46 → ('24) 50
 - * 전북 고창 학원농장의 청보리 축제, 강원 봉평 메밀꽃 축제 등
- 우수 해양치유자원·환경을 갖춘 해양치유 특화형 어촌마을을 조성, 해양레저·어촌체험과 치유가 결합된 4계절 관광 모델 개발

○ 지역 단위 농어촌 관광 협업체계 강화

- 지역 고유 농어촌 관광 상품·브랜드 개발, 홍보 등을 위한 지자체·주민·전문가 등 다

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협의체 확대

* 시·군 농어촌 관광 협의체: ('19) 10개 → ('24) 26

- 마을·경영체와 지역 활동가·현장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농어촌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주민 주도형 농어촌 관광 콘텐츠 사업체계 구축

2) 농어촌 관광 서비스 인프라 개선

○ 농어촌 방문 관광객의 편의성 제고

- 우수 농어촌 관광 자원의 체험·숙박·관광을 패키지화한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화폐 사용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시너지 유도
 - * 2등급 이상 농촌체험휴양마을, 농가 민박, 농촌융복합사업장, 관광농원 등
 - *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로, 현재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는 약 177곳
- 주요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인접 농어촌 관광 시설로 이동시 지자체와 협업하여 교통비 일부 지원(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연계)
- 체류 방문객이 많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위생·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침구류 세탁 서비스 지원 등 운영 부담 절감
 - * (현행) 안전·위생의무교육 4시간 → (개선) 안전·위생의무 4 + 서비스 2

○ 농어촌 관광 시설 안정성 및 품질 제고

- 가스공사·소방서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농어촌 관광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실시
 - * 가스공사,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업무협약(MOU) 체결
- 농어촌 민박 등 농어촌 관광 시설의 소방·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화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현재 체험마을만 적용)
 - *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화,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등 강화

○ 농어촌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청년농 및 귀농·귀촌인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농어촌 관광 전문인력풀을 확대하고, 농

어촌 관광 해설사·플래너를 한국 직업사전에 등재

* (현행) 귀촌생활 교육 → (개선) 기업가 정신·농어촌 관광 인턴십·창업시뮬레이션 등 추가

- 체험마을 사무장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민관 협치형 농어촌 관광 전문화 중간조직 육성

* (현행) 주민갈등, 안정위생 등 → (개선) 고객센터, 마을해설, SNS 등 활용 능력 강화 등

4.2.3. 농어촌 주민 창업 촉진

□ 현황 및 문제점

○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던 귀농·귀촌 가구 수의 증가 추세가 정체되는 양상을 보임.

- 2018년 기준, 귀농 가구는 11,961가구로 전년(12,630가구)보다 5.3% 감소하였으며, 귀농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49명으로 전년(1.55명)보다 다소 낮음(통계청 2018).

- 2018년 기준, 귀촌 가구는 328,343가구로 전년(334,129가구)보다 1.7% 감소하였으며, 귀촌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44명으로 전년(1.49명)보다 다소 낮음(통계청 2018).

- 귀농 가구의 68.9%, 귀촌 가구의 71.9%는 1인 가구였으며, 대부분의 가구는 귀농·귀촌인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단일가구 형태를 띠.

○ 정부는 귀농·귀촌 '촉진'에서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정책 방향 전환

- 정부는 2013년 귀농·귀촌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하면서 귀농·귀촌 정책 방향을 종전의 농어촌 유입 촉진 위주에서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힘(농림축산식품부 2014).

- 현재까지도 이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창업 지원체계 미흡

-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50여 농어촌 시·군에 '지원센터'가 설치되었으나, 단순 '상담창구'로만 기능하고 있음.

-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군에서 법률에 의거한 지원센터를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안정적으로 경상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없음.
- 전국 농가 중 가구주 연령 40세 미만 청년 농가 비율은 약 1.3%에 불과하며, 이 중 절반 정도가 귀농 가구이지만, 청년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 정책은 미흡함(김정섭·김종인 2016).
 - * 40세 미만 귀농 가구들이 영농활동에서 어려운 점으로 꼽은 1순위 항목은 ‘자금 부족’(43.4%), 2순위는 ‘영농 기술·경험 부족’(30.2%)이며, 40세 미만 귀농 가구의 60%가 연간 2,000만 원 미만의 농산물 판매에 그치고 있음.

○ 지역활력화를 위한 청년 창업 정책 강화 필요

- 청년들의 대도시 유출에 따라 지역의 활력화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으므로, 청년 유출 방지대책과 함께 대도시의 청년층을 유입 대책 필요
- 농업 부문 진입을 어렵게 하는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청년 신규 취농에 초점을 맞춘 정책 없으며, 따라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 초기 젊은 귀농인을 포함, 청년 신규 창업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창업지원 정책 강화 시급

○ 여성에 적합한 취·창업 프로그램 미흡으로 가구의 안정적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귀농·귀촌 가구의 증가는 가구 단위의 이주에서 귀농·귀촌 여성도 증가 추세를 보임.
- 귀농·귀촌 여성의 증가는 여성 인적자원의 농어촌 유입으로 이어져 농어촌 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귀농·귀촌 가구의 정착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의 적응력 저하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 후 지역사회 정착에는 여성의 지역 적응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많은 경우 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실패로 역귀농이 발생함.
- 그러나 여성 귀농자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취·창업 지원은 미흡함.

□ 정책 방향

○ 농어촌 마을 활성화 연계 청년 일자리 지원

- 도시 청년을 마을 유희시설(운영 중단 시설)에 투입하여 정상화시키고 수익을 창출하여 마을은 소득 창출 확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융복합 시스템 구축
- 농어촌 고령화 및 과소화로 보조금으로 조성된 마을 시설의 가동이 미흡함. 이와 함께 대다수 농어촌 마을은 엄격해진 가공식품 법적 요건, 고도화된 마케팅 기법, 인터넷·모바일 대중화 등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운영 인력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농어촌 고령화로 젊은층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농어촌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배치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 및 농어촌 활력화 추진

- 부안군의 경우 '02~'15년까지 27개 농어촌 마을 생산·체험·가공·숙박·식사시설이 조성되었으나, 이중 상시 운영되는 마을 시설은 3개소에 불과함('15 마을만들기협력센터(現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조사 결과).
- 전라북도는 '17년부터 현재까지 15억 원(지방비)를 투입하여 연인원 50명의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간지원조직들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전문성 있는 교육 등으로 중도 이탈 없이 고용 유지율 90%를 유지하고 있음.

○ 여성맞춤형 취·창업 정책 강화로 안정적 정착 유도

- 귀농·귀촌 가구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구주와 함께 유입된 귀농·귀촌 여성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 강화 필요

○ 귀농·귀촌 창업 민·관 거버넌스 구축

- 귀농·귀촌 창업 효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별적 자금 지원 방식의 정책 추진 관행을 벗어나 정책을 추진할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행정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 거버넌스 형성 필요
- 현재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원센터'는 대부분 정책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단순 상담 창구로 기능하고 있어, 취·창업이 필요한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기구'로서 기능은 미비함.

* 이와 함께 귀농·귀촌인 및 토박이 주민이 어울려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모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여건과 과제,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귀농·귀촌 정책을 실행하고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추진 과제

1) 청년 및 귀농·귀촌인 창업 촉진

○ 농어촌 유희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조성 활성화

- 시행 주체를 농협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노후시설 활용 취지 및 다양한 용도 활용 촉진을 위해 공사비 상향(3억/개소 → 4.5억)
- 초기 창업자들의 경영 문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농협·6차산업지원센터·청년벤처 컨설팅 등)을 통한 현장 컨설팅 지원

- 정읍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전통문화·전통음식 교육 및 갤러리 등으로 활용하여 방문객 연간 1만 명, 음식축제 개최를 통한 마을 소득 증대
- 홍천군: 폐교를 농장학교로 리모델링하여 출향민 및 도시민(연간 1,100여 명) 등의 농장 체험 등으로 활용

○ 청년 농어업인 영농어 정착지원사업 연계 강화 및 제도 개선

- 영농정착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농지·창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후계농자금 상환기간 연장 추진
 - * (현행) 3년 거치 7년 상환 → (개선) 5년 거치 10년 상환
- 귀어 창업·주택자금 지원 확대('19, 500억 원 → '20, 1,000) 및 청년 어업인 정착자금(3년간 월 1백만 원, 연 2백 명) 지원으로 청년의 어촌 정착 유도
 - * 청년어업인 후계영어자금 지원 한도 확대(3억 원 → 5)

○ 농수고·농수대 등 예비 농어업인의 농어업 분야 취·창업 지원

- 예비농어업인에게 실습 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의 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업 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학기당 500명)
 - * 미래농업선도고교('19, 3개소 → '24, 10), 영농창업특성화대학('19, 5개소 → '24, 10)
- 농어업법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법인 취업 희망자에게 인턴 기회 제공 및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여 전문·후계인력 양성
 - * 인턴 채용 시 월 최대 10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인턴 6개월 + 정규직 채용시 3년 추가)

○ 예비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 청년층 귀농 확대를 위해 체류형 실습교육 과정 지속 확대
 - * 체류형 실습 연간 교육 인원: ('20) 150명 → ('24) 250
- 농산물 가공·유통·마케팅 등 귀촌인의 농산업분야 창업교육 활성화
 - * 농산업 창업교육 연간 교육 인원: ('20) 400명 → ('24) 800
- 창업 애로 해소를 위한 귀농·귀어닥터, 품목 전문가 등을 통한 1:1 맞춤 컨설팅 지원 강화
 - * 연간 1:1 컨설팅 목표: ('20) 800건 → ('24) 1,000

○ 청년농업인의 농산업 분야 창업 지원 강화

- 청년 임차농 간 정보 교류 및 효율적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5개소 이상 집적시설에 대해 청년 창업농 실습 농장 지원(연간 30개소)
 -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에 3년간 임대 제공
- 청년농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결합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초기 사업비 지원
 - * 지원 개소 수: ('20) 40개 → ('22) 40 → ('24) 40 (누적 200개)

2) 농어촌 신산업 육성

○ 스마트팜 현장 보급 및 전문가 양성

- 스마트 시설원예 및 축산 보급을 추진하여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 * 스마트 시설원예 및 스마트 축산 보급(~'22): (시설원예) 7,000ha (축산) 5,750호

- '20년까지 총 4곳의 혁신밸리를 착공하고, '22년까지 조성 완료하여 '22년까지 스마트팜 청년 전문 인력 500명 육성
- 스마트농업 기술소개와 교육, 컨설팅을 목적으로 ICT 시설을 포함하는 하우스·교육장 등을 조성하여 스마트농업 현장 전문가 양성
 - *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21년, 70개소)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소개, 체험형 교육 및 농업데이터 활용 컨설팅 제공
 - * '20년까지 핵심인력 150명 → '24년까지 핵심인력 포함 전문 지도인력 450명 육성

〈스마트농업 전문지도사 양성〉 (1기)〉

-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운영 및 확대를 위한 전문가 육성
 - 개요: 3~10월, 10회, 2일/회, 23명, 스마트팜 실습(기초, 심화)
 - 운영: 교육 → 현장과제 도출 → 지역별 적용 → 보고서
 - 성과: 이론 및 현장지도 역량 향상 (44.5점 → 71.6)



- 스마트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역 내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에 기여
 - :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스마트농업 기술교육, 스마트기기 활용 사업 발굴 등

○ 스마트 양식장 및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 '22년까지 스마트 양식장과 가공·유통·수출 단지, R&D, 인력양성 등 연관 산업을 집적화한 대규모 클러스터 3개소 조성(개소당 400억 원)
 - * 다양한 유형의 테스트베드 조성 및 기술 도입 추가 지원
 - * 내수면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사업('19~, 충북괴산, 100억 원),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 사업(연간 20개소/300억 원 내외) 등 활용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을 위해 비즈니스센터, 종자 공급 및 양묘기술센터, 생산단지 등이 복합된 거점(~'22, 4개소) 조성
 - * 연구·유통 지원(비즈니스센터) + 원료식물 우량 종자·묘목, 재배기술 개발·보급(기술센터) + 종자·묘목 증식(생산단지)

○ 농식품·해양 수산 벤처 기업 창업·투자 생태계 구축

- 벤처창업센터를 통해 창업 기술,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농어업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

* 농식품 벤처펀드 운용 규모: ('20) 3,703억 원 → ('22) 3,953

* 수산펀드 운용 규모: ('20) 2,020억 원 → ('22) 2,420

-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를 개편하고,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보육할 엑셀러레이터 발굴 후 지원

* (현재) 인턴제 수료 후 학점 불인정 → (개편) 다양한 대학 및 학과와 학점 인정 추진

○ 산림 휴양·치유 공간 조성 및 산림 일자리 창출

- 산림 유형에 따라 산림휴양·레포츠·치유 숲·유아 숲 체험원·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 등 산림복지시설 확충

* 산림복지시설: ('20) 636개소 → ('24) 1,500개소 이상

- 나무의사 등 신규 업종 발굴 및 산림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 산림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20) 230개 → ('22) 400 → ('24) 500

○ 말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수요 창출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

- 재활 힐링 센터 전국 확대 설치를 통해 말 산업 Hub를 구축하고 학생·재활·사회공익 승마체험 지원 확대

* 재활힐링센터 설치: ('19) 4개소 → ('22) 17

* 승마체험 지원 규모: ('19) 7만 명 → ('22) 8

4.2.4. 농어촌 주민 구성을 고려한 일자리 다변화

□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 여성 인력의 다양성 증가

- 귀농·귀촌 여성, 다문화 여성 등 농어촌 여성 인력 구성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정착에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송미령 외 2018b).

- * 귀농·귀촌인 수: ('13) 41.5만 명→('18) 48.4
- * 2013년 대비 2018년 여성 귀농인 717명 증가, 여성 귀촌인 약 2.6만 명 증가
- * 군 지역 국제결혼 건수('03~'17): 40,422건

○ 농어촌 여성 인력의 다양성 증가와 농촌 산업구조 변화에도 비농가 여성과 다문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저조함(통계청 각 연도).

- 비농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농가 여성에 비교하여 16.5% 낮음.
 - * 2013년 대비 2018년 농가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3.8% 증가
 - * 2013년 대비 2018년 비농가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2.7% 증가
- 저소득층 다문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저조
 - * 2018년 기준 100만 원 미만 가구소득 다문화여성은 500만 원 이상 가구소득 다문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보다 36.09% 낮음.

○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 여건 개선 필요

-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직업훈련에 참가한 여성은 설립 이래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새일센터를 거친 취업자 수는 2012년 12만 명에서 2018년 약 17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어촌 지역 새일센터의 고용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 2019년 5월 기준, 총 156개의 새일센터 중 농촌(군) 지역 내 입지한 새일센터는 15개소에 불과함.
- 2014년 농어촌형 새일센터 2개소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6개소¹⁴⁾의 농어촌 새일센터가 운영 중에 있지만, 농어촌 새일센터 만의 차별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농어촌 여건에 맞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정 및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활용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새일센터와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의 체계성이 부족한 상황임.

14) 강원 영월군, 전북 완주군, 충북 영동군, 충남 홍성군, 부여군, 제주 서귀포시

○ 농어촌에 신규 유입 중인 귀촌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수요 증가

- 농어촌 지역에 유입되는 귀농·귀촌인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귀농·귀촌인의 역귀농 현상도 발생함.

* 역귀농 희망 이유로는 '생활하기에 소득이 부족해서'의 응답률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남(농림축산식품부 2016).

- 이에 따라 신규 귀농·귀촌인들에게 단순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적응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농어촌 일자리 마련의 필요성 증대

○ 귀농·귀촌인의 역량을 활용한 지역 활력화 정책 미흡

- 다양한 직업 경력을 갖춘 귀농·귀촌인이 농어촌에 정착하면 여러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사회의 발전 잠재력이 증가함.

* 귀농·귀촌인 중 기술자격증(기능사, 기사, 기술사 등) 보유자가 31.1%, 기타 자격증 보유자(교사, 보육사, 사회복지사, 조리사, 상담사 등)가 21.5% (마상진 외 2015)

-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지역사회 서비스를 공공 부문이 전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농어촌 실정에서 주민과 귀농·귀촌인의 협력을 통한 '내생적 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들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미흡한 실정

○ 농어촌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해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어촌 거주 외국인 노동 인력의 중요성 부각

* 연령별 농어가 인구 현황 : ('10) 323.4만 명 → ('18) 243.2만 명. 이중 60세 이상은 7만 1천 명 증가, 20세 이상 39세 이하는 2만 명 감소(통계청 2018)

* 농촌지역 외국인 수: ('10) 13만 명(농촌인구의 1.5%) → ('15) 37.7(4.0%)

○ 농업 분야 내국인 취업자 수 감소에 따라 인력 공급을 위한 정책 대응방안으로서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농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총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

- 여전히 초과 수요가 존재하며, 외국인 고용 체계 내에서 현장과 정책 간 괴리,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의 문제

* 농업 노동력 수요가 집중되는 6월을 기준으로 농업 부문의 총 취업자 수 감소('04: 189만 → '16: 138만)(엄진영 외 2019)

○ 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도농연계일자리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농어촌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개선이 필요함.

- 도·농 연계 일자리 지원사업의 사업목표치였던 연 10만 건의 일자리 알선 목표는 2017년 15만 9천 건의 실적으로 조기에 달성함.

- 농산업 일자리 지원센터 개소 등의 물리적 인프라는 확대되었지만, 단기간에 숙련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작업의 성격 등을 고려한 인력 중개서비스 제공이 필요 (원광희 외 2017)

□ 정책 방향

○ 농어촌 여성을 농어촌경제 활성화의 핵심인력으로 인식하고 여성 취·창업 인프라 및 교육·훈련 기회 확대

- 1차 산업(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의 농업 경제활동 지위 향상과 예비 농어업 여성인력 풀 확대, 새로운 농어촌 경제 산업구조에 적합한 여성 인력 육성을 위한 귀농·귀촌여성과 다문화 여성, 청년 여성 등 다양한 농어촌 여성 인력의 역량강화와 고용 지원 강화

- 다문화 및 여성 대상 2·3차 산업 취·창업 교육·훈련에 경험이 있는 여성가족부와 협력 확대

- 농어촌 지역 내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된 취·창업을 지원하는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된 취·창업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할 확대

〈농어촌 여성 일자리 창출 사례〉

-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2009~2013) 수립 및 로컬푸드 정책
- 농촌형 새일센터 사례
 - 흥성: 농촌 팜파티 전문가 양성 과정
 - 부여·영동: 지역특산물 가공프로그램, 마을공동체·협동조합 등 지역 특성 살린 교육과정 운영
- 충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적 기업 교육 및 이주여성 채용, 결혼이민자 특성을 살린 전통의상 제작 및 판매

○ 귀농·귀촌인 투잡(Two-Job) 지원

- 지속적인 귀농·귀촌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 역귀촌이 증가하고 있으며, 역귀농·역귀촌의 첫 번째 이유는 소득 부족으로 나타남(농림축산식품부 2016).
 - * 귀농 가구의 평균소득이 2,861만 원으로 2015년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소득 3,722만 원의 약 77% 수준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2021년 5년 간 귀농하는 가구의 평균소득을 2021년 기준 전체 농가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함.
-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귀농·귀촌 가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영농과 더불어 귀농 이전 직업·재능 활용할 귀농·귀촌인 투잡(Two-Job) 지원
 - * 지역공동체 사업단, 작목반, 법인, 중소기업체, 단체 등이 파트타임으로 귀농·귀촌인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 지원

○ 지역 문화·교육·복지 분야의 귀농·귀촌인 일자리 연계 확대

- 농외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구직자)과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곳(구인자) 사이의 연계 활동을 강화
- 농어촌 시·군의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일자리 연계 서비스 제공
- 귀농·귀촌 가구원 중 농외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의 인적 자원 풀(pool)을 만들고, 구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일자리 연계 서비스 실시
 - * 관내 유관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구인 정보 집적
 - * 귀농·귀촌인의 전직(前職) 현황을 파악하여 적재적소 연계

- 진안군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인 현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지원
- 일부의 경우에는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의 예산으로 임금을 소액 지불
- 이 같은 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를 확보, 제공
- 귀농·귀촌인이 참여하는 농외 일자리는 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강사,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 등
- 판매, 홍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지속성을 갖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 노력

○ 농어촌 인력 증개 사업의 확대 및 증개서비스 체계화

- 도시 유휴 인력이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농 연계 일자리 증개센터의 확대
- 구인·구직자 DB 구축,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력 등을 통한 농어촌 일자리 증개 서비스의 질적 제고

○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도 개선을 통해 농림어업 부문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 근무처 추가제도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추진
- 외국인 노동자 고용 경로 안내서 배포 등 농가 대상 외국인 고용 관련 정책 홍보 확대
- 농가들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매칭이 가능하도록 인력 수요, 공급, 배분 과정을 사전적으로 계획

□ 추진 과제

1) 농어촌 여성의 고용 확대 및 다문화 여성 취업 역량강화 지원

○ 농어촌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농어촌형 '새로일하기센터' 확대를 통해 농어촌 지역 경력단절 여성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농어촌형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설립 규모: ('19) 7개소 → ('24) 9

- 맞춤형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 직업 교육훈련, 취업 연계,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을 지원

* 전국 새로일하기센터에서 740여 개의 교육과정을 국비로 지원

○ 농어촌 지역 다문화여성 역량 강화

-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기관·농업인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전문 강사 교육 및 현장 체험 확대

- 수요가 높은 정보화 교육, 유통 및 마케팅 교육, 현장체험 등의 신규 교육과정 개발·확대

* 교육 수료 다문화 여성: ('19) 1,500명 → ('24) 7,500명(누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국 218개
- 주요 프로그램: 가정, 성평등·인권, 사회통합(한국사회 적응교육), 상담 등으로 다문화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족

2) 귀농어·귀촌인 및 잠재적 농어촌 이주 대상자 취업 지원

○ 농산업 진로 체험 농장 육성을 통해 직업탐색 기회 제공

- 농업·농촌 분야 유망직업 12가지를 중심으로 진로체험농장 육성

* 진로체험농장 육성: ('20) 6개소, 3.6억 원 → ('24) 50개소, 30

- 농산업 진로체험농장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농장별 맞춤형 컨설팅 및 워크숍(연 2회), 진로체험 전문가 양성교육(연1회)

〈농업·농촌 12가지 유망 직업〉

- 곤충사육사, 초음파진단관리사, 농촌교육농장 플래너, 마을기업 운영자, 농산물유통 전문가, 식생활교육 강사, 스마트농업 전문가, 협동조합 플래너, 농가카페 매니저, 재활승마 치료사, 유기농업 전문가, 치유농업사

○ 귀농·귀촌인 일자리 연계 지원 강화

- 기존 교육·상담 기능 중심의 귀농·귀촌종합센터를 개편하여 귀농·귀촌인 정보를 분석·활용하는 기능까지 확대
 - * (현재) 귀농·귀촌 교육·상담 → (개편) 귀농·귀촌 관련 DB구축·제공, 요구 분석·조사, 사업모델 발굴·확산 등으로 확대
- 지역 귀농·귀촌 지원센터(71개소)를 중심으로 농외 일자리 희망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DB 구축
 -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정보를 축적하여 매칭·활용도 제고
 - * 구축 DB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 등 민간까지 제공 확대
- 장기적으로 귀농·귀촌인 정보와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 채용희망 농산업체 등의 정보가 통합 관리되는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

3)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

○ 농어촌 인력 증개 기능 강화

- 농촌인력증개센터 및 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를 확대하여 농어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 수급 지원 거점 확대
 - * 농촌/어업센터: ('20) 70/8개소 → ('21) 75/9 → ('22) 80/10 → ('23) 85/11 → ('24) 90/12
- 각 센터를 통해 농어촌 인근 도시 및 지역의 유휴 인력과 농어업 분야 인력증개 기능 강화
- 농촌인력증개센터 내 영농작업반 확대('19, 6,000명 → '24, 10,000)
 - * 영농작업반: 일용인력 5~20명 단위 수개 반 구성, 상시적 농작업 인력으로 활동

○ 외국인 노동자 적정 배정 및 처우 개선

- 농축수산업 수요에 맞는 외국인 노동자 적정 배정: 상시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적정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고용허가제(E-9)와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등 병행 추진
 - * 외국인 근로자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부, 법무부와 협조 추진
- 고용허가 쿼터 확대 및 허용 업종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현지 농업종사 경력, 직업훈련 이수 여부, 기능 수준 등을 고려한 선발포인트제 시행

을 통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외국인력 적정 배치

- 사업장의 모범적인 고용지표를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신규 인력을 배정하는 등 농축수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

* 전용보험 가입, 산업재해 예방, 부당처우, 임금 등 체불, 기숙사시설 기준 준수 등

5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기반 확충 방안

1. 범정부 차원의 삶의 질 정책 실행력 제고

1.1. 농어촌서비스기준 내실화

-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정부의 생활 SOC 확충 기조를 감안하여 일부 항목을 보완·신설 추진
- 생활 SOC 시설 공급 기준인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과의 정합성 및 농어촌의 현실·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완
 - 기초생활인프라 기준의 시설 공급 조건을 반영하되, 접근성 개념 적용이 가능한 항목과 서비스 도입 여부가 중요한 항목으로 구분
 - * 상·하수도, 난방(도시가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 접근성 개념 도입 시 농어촌 배후마을을 기준으로 중심지 유형에 따라 접근성을 세분화하여 기준 설정
 - * 면 소재지 10분, 거점 읍·면 소재지 15분, 시·군청 소재지 20분

- 공공의료, 공동돌봄, 공공체육 등 국가적 생활 SOC 확대 계획(생활 SOC 3개년 계획)을 고려하여 6개 항목 신설

* 공공의료, 공동돌봄, 유치원, 도서관, 공공체육, 폐기물 처리 항목

표 5-1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비교

구분	농어촌서비스기준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근거법령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3조,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도시재생특별법 제4조 및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국토부 공고)
대상지역	농어촌 및 도농복합시	도시
목표치 설정 (최저기준)	농어촌 및 항목의 특성을 고려해 설정 (접근성, 행정구역 내 존재 유무 등)	시설에 도착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설정 (기본방침 상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고려한다고 명시)
차별항목	주택, 상수도, 하수도, 난방, 대중교통, 방법설비, 경찰순찰, 소방출동	근린 공원, 거점 공원, 주거편의시설, 마을주차장

- 기준 달성 정도 및 정책이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미흡한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제도화

- 이행 실태 부진 항목과 관련된 사업은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사전협의안을 도출하고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후속조치 이행

* 해당 사업 예산을 조정하거나,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발굴

- 농어촌서비스기준 평가 결과가 취약한 지역에 각종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역이 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토록 유도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정부의 기초인프라 지원 사업은 농어촌서비스기준 취약지역에 우선 실시

* 마을안길 정비, 상하수도 개보수, 마을회관 리모델링,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 지원

- '농촌 3·6·5 생활권' 조성계획 수립 시,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를 근거로 사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별·항목별 달성도 공개

* 농촌 3·6·5 생활권: 농촌 지역 어디서나 30분 내 기초적 생활서비스, 60분 내 고차·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시스템을 구축

〈농촌 3·6·5 생활권 계획 수립 시 농어촌서비스기준 활용 방안〉

- 지자체는 지역 내 생활권의 현황(기초인프라 중 부족한 시설·분야, 부족한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생활 SOC 확충 계획 수립
- 정부는 사업 지원 시 해당 지자체의 계획이 기존 시설의 서비스 도달 범위 내 중복은 없는지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객관적으로 결정 가능

[농어촌서비스기준 평가 결과를 활용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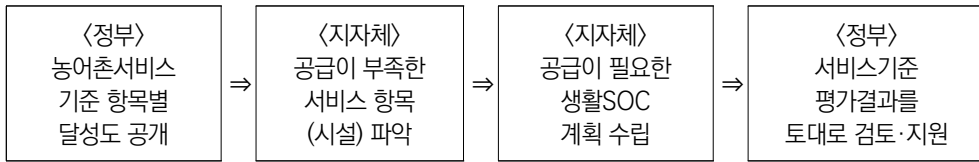


표 5-2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과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비교

분류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	세부시설	최저기준	농어촌 서비스기준	비고	
교육	유치원	국공립·민간	5~10분	10분	항목 신설	
	초등학교	-	10~15분	10분	항목 유지	
학습	마을	도서관	공공·사립·작은도서관	10~15분	10분	항목 신설
	거점	공공 도서관	국공립도서관 (국립, 도립, 시립, 교육청 설립)	10분(차량)		
돌봄	마을	어린이집	국공립·민간, 놀이터	5분	10분	항목 유지
		마을 노인복지	경로당 노인교실	5~10분	-	검토 중 (불필요)
	거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20~30분(차량)	15분	항목 신설
의료	마을	기초의료시설	건강생활지원센터	10분	20분	항목 신설
			의원, 약국	지역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서비스 전달추진	20분	항목 변경
	거점	보건소	-	20분(차량)	-	불필요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	30분(차량)	30분	항목 유지	
체육	마을	생활체육시설	수영장, 간이운동장 체육도장 등	10분	15분	항목 신설
	거점	공공체육시설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15~30분(차량)		

(계속)

분류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	세부시설	최저기준	농어촌 서비스기준	비고
휴식	마을	근린공원	도시공원	10~15분	-	검토 중 (불필요)
	거점	지역거점공원 (10만㎡이상)	-	10분(차량)		
생활편의		주거편의시설	무인택배함, 폐기물수거시설 등	5분	마을 내	항목 신설
		소매점	-	10분	관련 기준 없음	불필요
교통	마을 주차장		시군구 운영 노상·노외·사설 주차장	주거지역내 주차장 확보율 70%이상	관련 기준 없음	불필요
문화		공공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20분	20분	항목 변경
노인	없음		주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 가능	없음	86%	기존 농어촌 서비스 항목
평생교육			읍·면 내에서 평생교육을 이용 가능		100%	
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23%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		85%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100%	
난방			읍 지역 도시가스 확충 및 면지역 소규모 LPG 저장탱크 보급		72%	
대중교통			대중교통 일 3회 이상 이용가능		100%	
방범설비			마을 단위 CCTV 설치율		60%	
경찰순찰			탄력순찰 실시 여부		100%	
소방출동			지역 별 목표시간 내 소방차 도착비율		70%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시·군내 취창업 관련 컨설팅·교육 이용 가능		86%	

표 5-3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부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접근성 기준 (시간거리, 분)	24년 목표치 (%)
보건 · 복지	공공의료	시·군 내에서 주민건강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20분	100
	진료서비스	시·군 내에서 민간·공공의료기관을 통해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 가능하다.	20분	90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30분	100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 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0분	83
	공공돌봄	노인·장애인 대상의 주간보호·재활·건강관리 제공을 위한 공립요양시설을 시·군 소재지 외 1개소 이상 운영한다.	15분	100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6
교육 · 문화	유치원	읍·면 내에서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10분	100
	도서관	읍·면 내에서 공공·사립·작은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0분	100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분	85
	평생교육	읍·면 내 평생교육 거점시설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00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 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생활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은 시·군 소재지 외 1개소 이상 운영한다.	20분	100
	공공체육	생활체육수요 충족을 위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을 시·군 소재지 외 1개소 이상 운영한다.	15분	100
정주 생활 기반	주택	농어촌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철거 혹은 개량한다.		23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85
	난방	읍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72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농어촌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100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00
	폐기물 처리	행정리 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마을 내	100
	방법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법용 CCTV를 설치한다.		60
	경찰순찰	농어촌 범죄취약 지역은 1일 1회 이상 탄력순찰을 실시한다.		100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지역 별 목표시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70
	경제 활동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 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신설항목은 음영 표시

표 5-4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 점검 방법 및 수단

부문	핵심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1. 보건 복지	공공의료	(주민건강센터 이용이 가능한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지자체 조사: 주민건강센터 운영 현황
	진료 서비스	(일반 병원, 한방병원,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 등 1차 진료 가능한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데이터 지자체 조사: 산부인과·물리치료실
	응급 서비스	(현장도착시간 30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소방청: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 소요시간 자료(혹은 평균소요시간)
	영유아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수) × 100	i)행자부: 전국 읍·면별 영유아 현황(주민등록인구데이터) ii)보건복지부: 읍·면별 보육시설 현황
	공공돌봄	(시·군 소재지 및 주요 면에서 공립요양시설 이용이 가능한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보건복지부: 공립요양시설현황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 ×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지자체 행정조사: 노인돌봄종합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서비스 수혜자 현황
2. 교육 문화	유치원	(유치원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읍·면별 유치원 현황
	도서관	(도서관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지자체 조사: 도서관 운영 현황
	초·중학교	(운영 학교가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읍·면별 학교 현황
		위 학교 중 스쿨버스 등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학교가 없는 읍면 가운데 스쿨버스 등 통학수단을 이용하여 통학이 가능한 읍·면 수 / 학교가 없는 읍·면 수) × 100	교육부: 학교별 통학수단 제공 현황
	평생교육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평생교육통계 지자체 조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읍·면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점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기반시설총량):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지역문화행사 프로그램 횟수) / 12 * 1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원연합회): 전국 지방문화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공연예술 공연 횟수) / 4 * 1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회관별 공연 현황	
공공체육	(시·군 소재지 및 주요 면에서 체육관·수영장 이용이 가능한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지자체 조사: 체육관·수영장	

(계속)

부문	핵심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3.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시·군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누적 호수 / 총 슬레이트 지붕 주택 수) × 100	환경부: 슬레이트 지붕 주택 전수조사 지자체조사: 슬레이트 지붕 개량 현황
	상수도	(시·군별 면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인구 / 시·군별 면지역 주민등록인구) × 100	환경부: 상수도현황
	난방	(읍 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전체 가구 수) × 100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보급 가구 현황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마을 가구수 / (읍·면지역 총가구 수 -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 × 10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LPG산업협회)
	대중교통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도시지역 여객선 운항현황	해양수산부: 도서별 여객선 이용실적
		행정리별 농어촌 교통수단 이용 가능 여부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하수도	(시·군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수 / 시·군별 인구 수) × 100	환경부: 하수도 보급현황
폐기물처리	(영농·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지자체 조사: 폐기물 처리 시설	
방법설비	(방법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지자체조사: 방법용 CCTV 설치 현황	
소방 출동	(시·군별 목표시간 이내 도착 건 수 / 총 건 수) × 100	소방청: 각 시·군별 화재 출동 건별 도착소요시간	
4. 경제 활동 일자리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별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컨설팅·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지자체 조사: i) 창업지원센터 유무 ii) 일자리지원센터 유무 iii) 전담인력 고용 여부 iv) 전문프로그램 운영 횟수

2. 농어촌 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 중요 정책들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어촌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 미운용

○ 영향평가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 사회 이슈화 추진 및 평가절차 제도화를 위한 운용지침 제정 등 체계화 필요

- 분과위원회 논의를 통해 범부처 조정이 필요한 정책 이슈 발굴, 현장모니터링단을 활용한 현장 수요 파악 등 공론화를 위한 의사소통 채널 확보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농어촌 영향평가의 주체·방향·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지침을 수립토록 규정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한 지침 제정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 중 농어촌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

-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여론 수렴, 이슈 발굴, 평가 대상 정책 추천 수행

- 연차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부진 과제, 현장모니터링단이 제시한 의견 등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선정

○ 특정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평가 대상 정책을 선정

○ 고용영향평가: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대상 정책에 대한 평가 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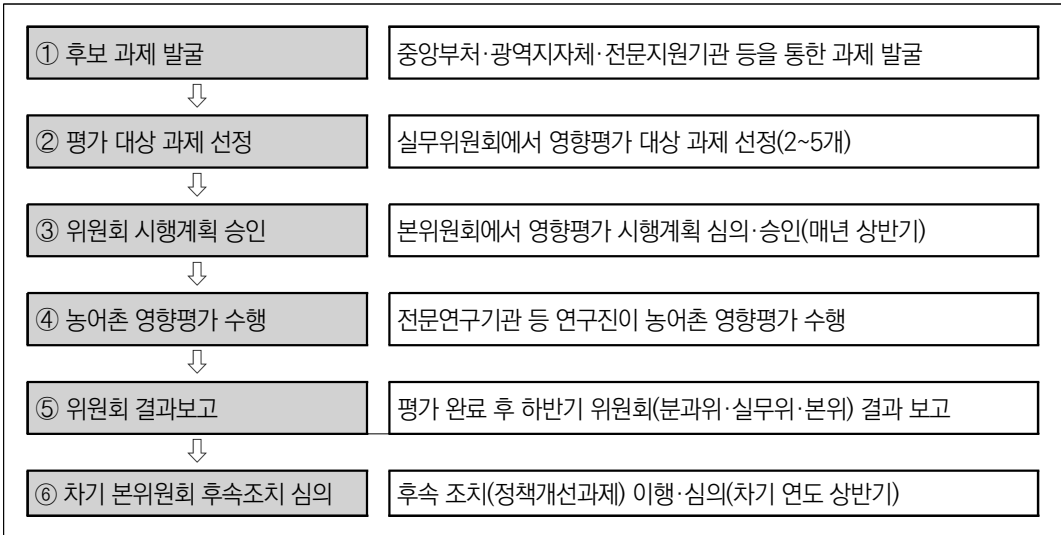
○ (방식)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선정한 과제에 대해, 영향평가 수행 후 위원회 보고, 이를 해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실무위원회가 중앙·지자체와 전문지원기관이 검토·추천한 대상 과제(매년 2개 이상)를 심의 및 선정

- 삶의 질 위원회에서 영향평가 시행계획의 심의·승인 후 평가를 수행하고, 부처는 후속조치 이행 후, 개선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

- (타 영향평가 운영 방식) 정책 담당자 차원의 내실 있는 평가가 어려워 평가 절차가 전문평가 방식으로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중앙(1개소) + 도(16개소)
 - 고용영향평가센터: 한국노동연구원 내 평가기획팀, 정책평가팀, 재정사업평가팀 3개 조직으로 운영 전담인력 16명 규모로 수행

그림 5-1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용지침에 의한 수행 절차



-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을 삶의 질 위원회 심의(별도 심의 안전 상징)로 확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훈령으로 공포·시행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5조3항은 농어촌 영향평가 지침 제정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

3. 사전협의제도 도입

□ (도입 배경) 삶의 질 향상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환류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제기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19.8)으로 연차별 시행계획 점검 결과의 개선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됨.

- [제9조] 전년도 시행계획 점검 결과의 제반조치 시행 의무화, [제10조] 위원회에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서비스기준 달성도 등 심의 기능 부과

- 위의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부처 간 사전협의를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농어촌서비스기준, 영향평가제도 등 기존 제도들과 연계성 강화가 필요

* (사회보장제도-복지부) 신설·변경제도에 대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와 다르게 사업 추진하는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가능

□ (제도 개요) 이행 부진, 차년도 예산 반영 필요 정책·사업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쳐 필요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책 실효성 제고

○ (대상) 매년 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사전협의 대상 과제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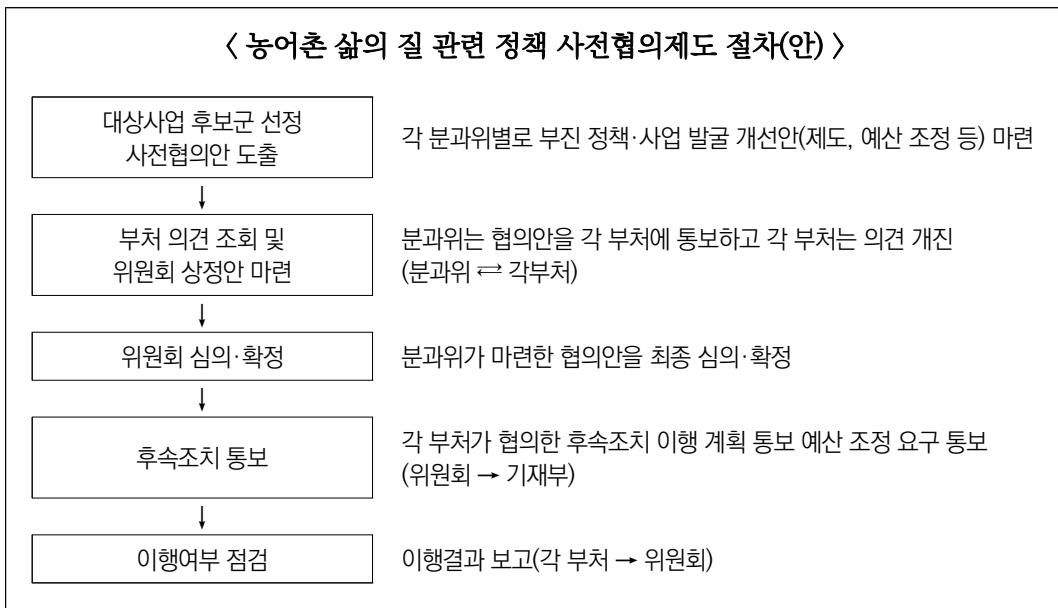
〈 농어촌 사전협의 대상 3대 과제(안) 〉

- ① 전년도 삶의 질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 부진 과제
- ② 농어촌서비스기준 중에서 달성도가 미흡한 항목과 관련된 정책·사업
- ③ 농어촌 영향평가의 결과로 사전협의의 필요성이 제시된 중앙 부처 및 지자체의 계획·정책·사업

○ (방식·절차) 분과위에서 협의안을 도출, 각 부처에 통보하고, 상반기 삶의 질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확정하여 후속조치 이행

- (사전협의안 도출) 각 분과위는 대상의 문제를 파악하여 제도 개선 사항 관련 예산 확충 방안 등 마련·권고

- (부처 의견 청취) 분과위의 협의안에 대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부처의 의견을 청취·조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협의안 확정
 - * 부처는 의견 제출시, 후속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 (위원회 심의·확정) 위원회에서는 사전협의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차년도 예산 정부안 확정 전 기재부에 결과 통보
 - * (예시) 재난안전예산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소속)에서 사전협의안(행안부)을 심의·조정하고, 6월 30일까지 기재부에 결과 통보
- (후속 조치 이행) 관계부처는 필요한 제도 개선(법 개정 등) 등을 이행하고, 검토의견을 기재부에 제공하여 예산 수립시 반영 유도
- (이행 점검) 후속 조치 이행에 미온적인 부처에 대해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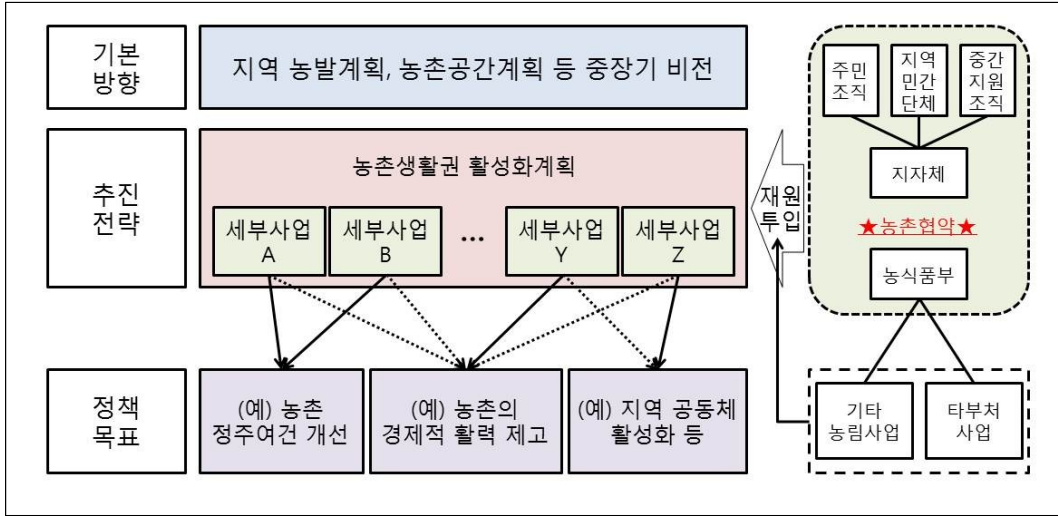
- (향후 계획) '20년 사전협의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삶의 질 법 개정)하고 이후 일부 중점 정책을 중심으로 시범 시행('21~)
- 농어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협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
 - 사전협의의 대상 및 절차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

- 시행계획 점검·평가 부진과제 및 서비스기준 미달성 항목 관련 과제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향후 농어촌 영향평가를 통한 과제 등으로 확대

4. 현장 추진체계 개편 및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 (추진 배경) 지방분권 추진으로 삶의 질 관련 정책 기능 중 일부가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른 정책 공백 해소를 위해 협업 필요
- 지역의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상호 시너지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 필요
 - 2019년 기준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대상 과제 169개 중 38개 이양(20~)
- (농촌협약 도입)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정책을 토대로 협업 지원
- 지자체가 국가 기본계획을 기초로 자체적인 삶의 질 계획 수립 시 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협약 체결)
 - 지자체는 정부의 삶의 질 관련 사업을 비롯하여 자체 사업 및 민간 부문의 투자나 협업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정부는 해당 시·군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을 고려하여 지역의 투자계획 타당성(사업 내용, 투융자 계획 등)을 평가, 협약 사항을 조정
- 정부·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민간 주체 등도 협약의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거버넌스 구축 유도

그림 5-2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지자체 실행력 제고) 시·도 및 시·군 삶의 질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을 통해 자체적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유도
- (법적 근거)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5조 및 제10조의 2에 따라 각각 시·도 및 시·군 단위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의무화
 - 시·도 및 시·군 기본계획 수립(제5조) 및 위원회 구성·운영(제10조의2) 규정이 2010년도에 신설되었으나, 현재 지자체 단위 운영 실적 부재
-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필요시 전문지원기관을 통한 컨설팅 제공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공 및 지방이양에 따라 지자체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추진이 필요한 과제 제시 등
 - 지자체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농촌협약을 통해 관련 정책 추진 시 협업 지원

- (위원회 구성·운영) 지역 내 농어업인 및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운영
 - 다수 부서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들의 조정·연계 및 민간과의 협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무국 기능 강화
 - * 청양군은 농촌공동체과 신설('19년)을 통해 마을만들기 지원, 삶의 질 향상, 농촌개발, 푸드플랜, 6차산업 등 농촌정책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

- (현장 모니터링 체계 마련) 현장 단위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상황 점검, 주민들의 정책 개선 요구 수렴을 통한 정책 피드백 강화

- 분야별 현장 전문가와 농어촌 주민이 참여하는 '삶의 질 향상 정책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 및 협업 강화
 - 전문지원기관에서 운영해온 기존 모니터링 그룹(KREI리포터)에 관계 부처·지자체 추천을 받아 모니터링단 확대

- 핵심 과제 현장 평가, 정책 영역별 개선 의견 수렴, 새로운 정책 이슈 발굴 작업을 모니터링단을 통해 정례적·상시적으로 수행, 반영

5. 스마트기술 기반 삶의 질 향상 정책 지원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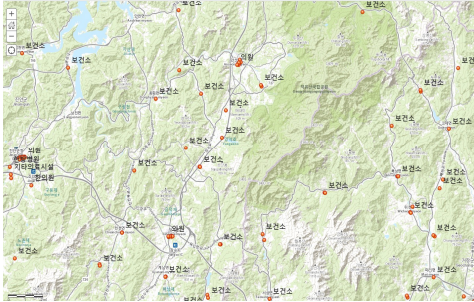
- (추진 배경)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이양 이후에 지자체 주도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위한 지식기반과 정책소통 창구 구축 필요성 증대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기술 발전을 정책 의사결정 지원 및 도·농간 서비스 격차 축소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32조의2를 근거로 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추진(본조 신설 2018.12.31.)

-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지자체 삶의 질 정책을 지원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활용
- 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EPIS)에서 구축·운영 중인 농식품 공간정보 서비스, 농림사업 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 추진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4항은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의 위탁 기관을 EPIS로 규정
 - 관련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정보의 융복합, 지역 맞춤형 삶의 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업·농촌 공간정보 종합정보체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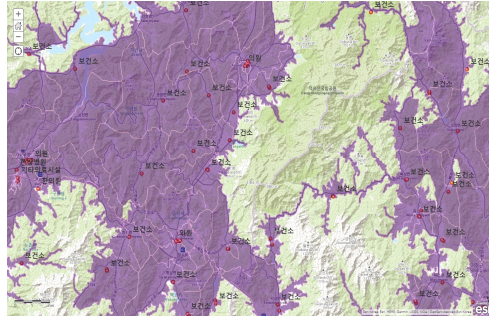
그림 5-3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삶의 질 정책 지원 활용 예시

- 농어촌 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서비스 취약지역 탐색
 - 건축물관리대장, 도로망 등의 공간정보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 취약지역 탐색과 서비스 접근성 향상 정책 수립

〈보건의료시설 분포〉



〈차량 15분 이내 보건의료시설 도달 범위〉



□ (다부처 R&D 추진) 미래형 기술에 기반한 삶의 질 서비스 분야 R&D 확대

-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 시 사전기획연구 주제(10대 분야 41개 주제) 선정 단계에서 농어촌 삶의 질 개선 주제를 의무적으로 포함

- 다부처 공동기획사업(과기정통부 주관) 중 사회문제 해결형 공동사업 대상 10대 분야 중 '사회통합' 분야에 '도·농 삶의 질 격차'를 새롭게 포함할 필요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 이후 전체 24건의 공동사업 중 농어촌 관련 사업은 2014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사업'이 유일

- 연간 1~2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R&D 사업 선정 추진을 위한 삶의 질 위원회 관계 부처 및 전문지원기관 간 협의체 구축

- 농어촌 정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리빙랩 방식을 도입한 실증 R&D 단지 확대

- 스마트빌리지 구축 후 실증 R&D 단지로 활용하여 국가 차원의 정주 서비스 분야 스마트기술(자율주행 자동차 운영 등) R&D 추진

부 록

부 록 I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비교

□ 시설 접근성 기준에 따른 두 기준의 비교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보완)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세부항목	접근성기준(차량)	세부항목	시설 접근성기준(도보)
보건·복지	진료서비스	20~30분	기초의료시설(의원·약국)	지역 수요에 고려
	응급서비스	30분	기초의료시설 (건강생활지원센터)	10분
	영유아	10~15분	보건소	20분(차량)
	공공의료	20~30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30분(차량)
	공공돌봄	20분	어린이집	5분
			마을노인복지	5~10분
교육·문화	초·중학교	10~15분	사회복지시설	20~30분(차량)
	평생교육	10~15분	유치원	5~10분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20~30분	초등학교	10~15분
	공공체육	20분	도서관	10~15분
			공공도서관 (국립도서관)	10분(차량)
			생활체육시설	10분
정주생활기반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하수도, 방법설비 등	※ 농촌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 개념 적용 제외	공공체육시설	15~30분(차량)
			공공문화시설	20분
			주거편의시설	5분
경제활동·일자리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20~30분	소매점	10분
			마을주차장	주차장 확보율 70% 이상
환경·경관			근린공원	10~15분
			지역거점공원	10분(차량)

부 록 Ⅱ

농어촌 삶의 질 영향평가 운용 지침 수립(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법”이라 한다)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및 해당 법 시행령 제16조(정책 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의거하여,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운용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농어촌 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사업 중에서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제3조(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할 책무가 있으며, 해당 지침을 제정하고 변경할 때 ‘농어업인 삶의 질법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의거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대상) 농어촌 영향평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혹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할 예정이거나 시행 중인 주요 재정 사업 혹은 연두 업무 보고에 포함된 정책·사업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과 관련되어 위원회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정책·사업(별표)
2. 기타 위원회에서 농어촌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계획 혹은 정책·사업

제5조(절차) 농어촌 영향평가의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후보 과제 발굴) 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농어업인 삶의 질법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의거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 등이 영향평가 대상 후보 목록을 추천한다.

-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법 시행령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⑥에 의거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관련 부처의 정책 조정을 위한 협의를 수행하여, 영향평가 대상 후보군 선정 및 평가방식, 개선방향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 필요할 경우, 위원회 사무국과 전문지원기관 등은 농어업인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평가 대상 관련 의견 청취, 정책 개선 수요 파악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2. (평가 대상 과제 선정)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의거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평가 대상 과제를 매년 2개 이상 심의·선정한다.

- 전문지원기관에서 후보 과제 각각에 대해 농어촌 영향평가의 실시 필요성 및 실무 차원의 의견을 실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3. (위원회 시행계획 승인)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심의·승인한다.

- 전문지원기관에서 매년 농어촌 영향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한다.
- 시행계획에는 평가 대상 과제 및 조사·분석을 담당할 전문연구진 명단, 조사·분석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농어촌 영향평가 수행)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과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의 구성원 혹은 전문 연구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농어촌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 영향평가 수행 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과 협의한다.

가. [대상 정책·사업 현황] 정책·사업의 목적 및 내용, 예산 계획 및 집행, 세부 달성 목표 등을 포함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중에서 달성도가 미흡한 항목과 관련된 정책·사업의 경우, 농어촌 지역 및 주민에게 끼치는 불리한 영향을 정량 지표 등으로 제시한다.

나. [농어촌영향평가의 틀 및 기준] 평가의 관점·방법·절차·기준(평가지표 등)을 제시한다.

다. [내용 분석 및 성과 평가] 정책·사업 목표와 수단 설정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성과의 투입·산출·효과를 분석하며, 정책·사업의 도·농 간 성과 차이를 분석한다.

라. [대상 정책·사업의 한계 및 개선과제] 해당 정책·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제도, 예산 투입, 추진체계 등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5. (위원회 결과 보고) 매년 하반기 또는 차기 연도 상반기 위원회에 농어촌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한다.

- 결과보고서에 영향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 사실 및 현황, 관련 정책·제도 개선·조정 제안, 차기 연도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대상 추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보고서에 포함된 제안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6조(후속조치 이행) 평가 대상 정책의 소관 부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소관 부처는 농어촌 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이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2. 해당 부처는 후속조치 이행 후 그 내용을 차기 연도 상반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과제(안) [제4조 관련]

농어촌 서비스기준 항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세부과제명
응급서비스	①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보건복지부) ②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소방청)
진료서비스	분만의료 도·농 간 격차 해소(분만취약지 해소)
영유아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 제공
초·중학교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
평생교육	농어촌 지역 평생교육 내실화
문화시설·프로그램	생활문화센터 조성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대중교통	농촌형 교통모델
	주민참여형 교통모델 확산
	도서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주택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취약 계층 집 고쳐주기 추진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하수도	농어촌 지역 하수도 설치
난방	도시가스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경찰순찰	농어촌 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
창업 및 취업컨설팅·교육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 지원
	영농승계 다변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농업법인 취업지원)
방범설비	지능형 CCTV 및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 구축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4. 『2015-2019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 _____. 2019.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 _____. 2019. “생활SOC 3개년계획(안).”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2017년 성인문해능력조사.”
- 국승용·임지은·이형용.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토교통부. 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19.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5권」. 국회입법조사처.
- 김광선·유은영·허주녕. 2017.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여가정책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이규천. 2012. 「농촌 공동시설의 유희화 실태와 활용 증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정도채·민경찬·유은영. 2016.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유찬희·임영아·이명기·김덕호·우성휘. 2017.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새로운 농정패러다임 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욱·민경찬·박지숙. 2018. 「2018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진. 2019. “도서지역 쓰레기 실태 및 관리방안 제안”. KEI 세미나 발표자료.
- 김은설·김지현·이재희·안석·김혜진. 2018.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은설·윤재석·윤지연. 2015. 「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섭·김종인. 2016.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종안·최문식·길청순·황윤재. 2018. “제8장 푸드플랜, 추진전략과 활성화 방안.” 「농업전망 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종안·정상택·길청순·이소진·송기선·김현일·김진희·이지은·노순웅·박은희·김연하·권재현. 2019.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15. 『2015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_____. 20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15년 추진실적 및 '16년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_____.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16년 추진실적 및 '17년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_____. 20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17년 추진실적 및 '18년 시행계획』. 농림

축산식품부.

- ____. 20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18년 추진실적 및 '19년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2014. “귀농·귀촌 정착지원 계획.”
- ____. 2016. “귀농귀촌 실태조사.”
- ____. 2017.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안).”
- ____. 2018. “2018년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 ____. 2018.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농촌진흥청. 2016. “도시민 농촌관광실태조사.”
- ____. 2018.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마상진·박대식·최윤지·남기천·임지은. 2015.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안석·김남훈. 2018. 「농촌 노인의 문해력 제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정도채·민경찬. 2019. “농업·농촌 일자리 증가, 어떻게 볼 것인가.” 『농업전망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6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____. 2018.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 박기환·서홍석·김충현·김문희·이수환. 2019. “2019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시현·김용렬·권인혜·류경선. 2012. 「농촌관광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주영. 2016. “농촌관광과 마을활성화 방향.” 『농어촌과 환경, 통권(132호)』, pp. 48-57. 농어촌연구원.
- 성주인·박시현·정문수·민경찬. 2018.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5의4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성주인·김광선·심재현·서형주. 2018a.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박대식·마상진·김광선·심재현·안석·성주인·정도채·민경찬. 2018b.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총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성주인·김광선·심재현·정도채·서형주. 2019.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성환·박혜진. 2018.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엄진영·박준기·유찬희·김선웅. 2019.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엄진영·우병준·김윤진. 2017.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엄진영·유은영·류재현. 2015.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원광희·안경아·좌민석. 2017.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지역평가 보고서(경제활동·일자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은영·박지숙. 2017. 「2017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은영. 2018. 「2018 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해미·강은진·권미경·박진아·김동훈·김근진·김태우·이유진·이민경.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보고」.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운진·윤지연·엄혜경.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 육아정책연구소.
- 이태호·김민지·신한수·김지수·윤기쁨·곽미영·이태식·황교상·황종윤. 2018. 「2018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국립중앙의료원.
- 자치분권위원회. 2018. “자치분권종합계획(안).”
- 정경희·오영희·강은나·김경래·이윤경·오미애·황남희·김세진·이선희·이석구·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도채·민경찬·박지숙. 2017.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 2019.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지역 푸드플랜 구축방안”. 유기농업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
- 정학균·김장길·김종진. 2015. “친환경농업 환경보전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평가”. 「농촌경제」 제38권 제3호: 61-8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농림어업조사, 귀농귀촌인통계.
- 허남혁. 2018. “해외의 식생활정책 사례 -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식생활학회 학술발표 대회 논문집.
-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2018. 「2018 지하수 조사 연보」. 환경부.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검색일: 2019. 8. 20.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http://taas.koroad.or.kr>>. 검색일: 2019. 8. 21.
-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https://nhiss.nhis.or.kr>>. 검색일: 2019. 7. 15.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https://opendata.hira.or.kr>>. 검색일: 2019. 8. 20.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검색일: 2019. 10. 14.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https://saeil.mogef.go.kr>>. 검색일: 2019. 8. 20.
-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https://www.e-gen.or.kr>>. 검색일: 2019. 7. 15.
- 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 <<http://www.malic.or.kr>>. 검색일: 2019. 8. 21.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검색일: 2019. 10. 14.
- 협동조합. <<http://www.coop.go.kr>>. 검색일: 2019. 10. 14.